

한국의 중심, **충남**을 말하다

들어가며

21세기 충남은 경제와 산업의 중심지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급속한 경제 성장은 충남에 또 다른 고민을 안겨주었을 뿐만 아니라 진정한 발전과 행복이 무엇인가에 대한 물음표를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충남은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발전하고 있으며 한국의 중심으로 우뚝 서기 위한 기지개를 활짝 펴고 있습니다.

충남은 세종시를 행정수도에 버금가는 인구 50만 명의 행복도시로 창조해야 하고, 환황해권 동북아 경제의 중심지로 탈바꿈시켜야 할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또한 전통적인 농촌과의 균형발전을 통한 전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에도 게을리 할 수 없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보면 옛 백제의 기상과 전통을 현대 문명의 옷으로 갈아입히는 변화의 시점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내실과 외적 성장이 균형을 이루는, 비록 '시소'의 재미는 없다 할지라도 말이지요.

이런 맥락에서 충남발전연구원은 충남의 주요 정책과 사업에 대한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하고 올바른 여론을 형성시키는, 마치 '바윗돌을 깨뜨리기 위해 떨어지는 빗물'과 같은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비록 미력이나마 이슈가 되었던 문제들에 대해 해결점을 제시하려 노력했으며, 이는 곧 충남의 미래 비전과 발전에 밑거름이 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자료집은 2004년부터 현재까지 충남발전연구원이 신문과 간행물을 통해 게재한 원고는 물론, 이완구 충남도지사를 비롯한 주요 인사들이 최근 충남 관련 주제로 신문에 기고했던 주요 글을 한데 모아 발간한 것입니다. 이 책은 새롭지도, 화려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유유히 흘러가는 요즘 충남 현안의 한 단면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재조명해 보고자 했습니다.

앞으로 충남의 정책과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충남발전연구원은 충남의 미래와 비전 연구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의 발간에 도움을 주신 집필자 여러분과 올바른 여론 형성과 정책 제시를 위해 귀중한 지면을 할애해 주시는 각 언론사에도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8년 2월 22일

충남발전연구원장 김용웅

차 례

‘금강시대’ 이제 시작이다	1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4
행정수도 경제 효과 충남발전에 접목	7
범부처적 추진체계 확립과 정책 집행력 강화를	13
행정수도 위헌결정과 정부·정치권의 신뢰회복	20
신행정수도의 새로운 추진방향과 과제	26
신행정수도 합리적 추진을	30
행정수도 후속 대책	33
새 행정수도 반대주장도 검증받아야	36
신성장 동력의 중심지	40
대전·충남 공동발전전략 마련을	43
행정 중심도시의 성공요건	46
행정중심도시와 전문가 집단의 논리	49
새로운 농촌 살리기	52
행정수도, 상생(相生)의 기회이다	55
과천 청사야말로 위헌	58
‘행정도시특별법’ 갈등 끝나야	62
호남고속철 해법은?	65
농심(農心)이 바로 서야 사회가 바로 선다	69
지역혁신은 우리의 과제	74
행정중심복합도시 忠淸人 모두가 일궈냈다	77
기업도시의 성공조건	80
지역경쟁력과 장소마케팅	84

충남의 미래를 책임지겠습니다	88
지역 싱크탱크 역할과 발전 방안	90
행정도시 영향권 종합 발전구상 필요	93
‘자신 있는 약속’ 브랜드	99
행정혁신과 거버넌스 시스템	102
충남·경기 相生발전하려면	105
충청권·타 시도 공동발전 방안	107
균형발전이 미래이다	110
‘행정도시’ 합헌을 주장하는 이유	115
수도권 규제완화 시기상조다	118
21세기 문화가 지역경쟁력이다	122
행정도시 건설 주변정비와 병행돼야	125
시·도 폐지한다고 지역감정 없어지나	128
지방행정 체제개편 논의 종단을	131
大수도론을 경계한다	135
道 문화콘텐츠산업 잠재력과 과제	138
민선 4기에 바란다	141
수도권 난개발을 막으려면	145
세계화의 장래	148
충남지역 통합생태네트워크 구축 방향과 과제	153
행정도시의 법적지위 부여, 어떻게 할 것인가?	158
지속가능한 발전과 장항산단	162
다보스 포럼과 환경대응	165
진보와 빈곤, 그리고 환경	168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	171
물 부족과 양치기 소년	175
지방분권시대, 지방의회의 역할	178
관광도 국가 전략산업이다	181
세계 군(軍) 평화축제의 기대 효과	186
해외 관광레저도시 시찰 소감	189
충남현안 대응에 힘 모아줘야	193
지방정부의 새마을 부서 확충 필요성	197
FTA와 환경대응	200
국방대 지방 이전 원칙대로 논산으로	203
FTA 농·수·축산업 상생 모색할 때	206
농촌개발사업으로 서천군에 새로운 활력을	209
살기 좋은 도시 만들기	213
상생협력과 공공갈등관리	216
세종특별자치시 법안 철회돼야	219
농촌지역정책 발전의 방향과 과제	222
문화의 향기 짙은 충남을 꿈꾸며	228
누가 수도권 규제 완화하라고 하나	232
전국최고의 지역 싱크탱크로 거듭날 것	235
충남발전을 위한 싱크탱크	241
태안 해양문화박물관 반드시 건립해야	244
충남도 산하 싱크탱크간 공동협력 응원해야	247
명품 행정도시 성공하려면	250
논산을 국방클러스터 중심지로	253

도시는 꿈터(夢場)의 무대다워야 한다	257
충청권 공동발전 위한 학습 과제	261
R&D의 빈익빈 부익부	264
‘장항산단’ 근시안적 생각의 오류	267
명품축제, 첫 발을 내디디며	270
지방의 기후변화 대응전략은	273
유류사고 보상, 이것이 중요하다	277
내 고향 서해안, 절망을 넘어	280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차기정부의 과제	283
‘창조적 도시’ 부여를 꿈꾸며	289
황해 경제자유구역에 거는 기대	294
200만 도민의 행복이 최우선	296
자경경인(自驚驚人)과 강한 충남	300
신행정수도 건설과 행복도시 '세종'	303
미래지향적 해양오염 복구방안 마련돼야	306
국책사업 차질 없이 추진해야	309
황해경제자유구역을 위한 충남 과제	312

‘금강시대’ 이제 시작이다

‘국가발전 미래’ 지혜 모아야

신행정수도 입지후보지 평가결과가 발표되었다. 4개의 후보지 중에서 도시개발에 적합한 낮은 구릉지와 배산임수 조건을 갖춘 공주시와 연기군 일원 7,128만㎡가 신행정수도 입지의 후보지로 가장 적합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앞으로 공청회와 관계부처와의 협의절차 등이 남아 있기는 해도 신행정수도의 입지 윤곽이 밝혀졌다고 할 수 있다. 내년부터 토지 매입이 시작되고, 실시계획이 수립되어 2007년부터는 기반시설공사가 착수될 것이다.

일부에서는 아직까지도 신행정수도의 필요성과 추진에 대한 국민적 합의부족을 이유로 반대와 회의론을 제기하고 있다. 합법적인 절차에 의거하여 추진 중인 국가시책의 추진여부 자체에 대해 찬반 논쟁을 벌이는 것은 자칫 국가적인 갈등과 치유할 수 없는 상처만을 남길 우려가 있다.

이제는 소모적인 논쟁에서 벗어나 대승적인 차원에서 어떻게 하면 신행정수도의 건설이 국가의 미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가에 관하여 지혜를 모아야 한다.

정부는 우선 신행정수도 건설을 계기로 상생의 국가발전모델을 만드는데 주력해야 한다.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통해 그동안 수도권에 의존하여 상대적으로 쇠퇴화되고 있는 지방에는 자율권과 자생력을 부여하고, 과도한 집중으로 국제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는 수도권은 세계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

신행정수도의 건설과 수도권 규제의 합리화 방안을 빅딜로 하자는 제안이 나오게 된 배경을 음미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정부는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지방분권, 국가균형발전과 공공기관 지방이전, 그리고 동북아중심 건설시책과 연계하여 균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정책수단 하나하나에 치중하는 국정과제의 추진체계로는 신행정수도 건설의 당위성을 국민들에게 설득하기도 어렵고, 정책추진의 시너지 효과도 거두기 어렵다.

지역 차원에서,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와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가장 시급한 대책은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계기로 급증하게 될 개발수요를 선별하고, 계

획적으로 수용하여 지역발전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광역적 토지이용 및 공간 전략의 틀을 마련해야 한다. 현재 수도권 내 일부 지역이 겪고 있는 난개발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한편, 신행정수도의 건설은 지역적으로 볼 때, 항상 긍정적인 효과만을 가져다주는 것은 아니다. 이제 지역발전을 위해 신행정수도 건설의 기회요인과 위협요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대응책을 만드는 일은 지역의 몫이다.

신행정수도의 건설은 충청지역의 사회경제적 발전과 지역의 위상을 높여주는 역사적인 계기될 것이다. 지금은 충청인들이 자부심과 책임의식을 갖고 신행정수도 건설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힘을 모을 때이다. 신행정수도의 건설은 장기간에 걸친 시책으로 지역적 효과도 하루아침에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이제 충청인들은 성숙한 시민의식과 감시를 위한 자율적인 시민 참여 활동을 통해, 신행정수도의 건설에 따른 투기심리 조장을 방지하여 모처럼 찾아온 지역발전의 역사적 기회를 무력화시키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김용웅, 중도일보 2004년 7월 12일자]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지역발전의 의미와 추진방식이 달라지고 있다. 그동안 지역발전은 지역 내 산업 생산과 기반시설의 확대와 같은 총량적 성장을 의미했다. 그래서 모든 지역이 앞 다투어 외부기업과 투자를 유치하고, 새로운 인프라와 도시개발을 확충하는 데에만 관심을 두었다. 그러나 총량적 산업생산과 공공시설 확대는 지역주민의 복지와 삶의 질 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했고, 지역이 자생력을 갖추어 자립적으로 발전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못했다. 외형적인 산업생산과 공공시설의 확충에도 불구하고 지역은 성장 동력의 대부분을 외부자본이나 정부 지원에 의존하는 종속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이 같은 기존 시책의 한계를 벗어나기 위해 선진국에서는 총량적인 산업생산 확대 전략에서 벗어나 지역기업 및 경제활동의 경쟁력과 혁신역량을 높이는 데 치중하고 있다.

여기서 가장 중요시되는 것이 주민의 소득과 취업기회의 확대이다. 모든 지역발전시책과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이 지역주민의 삶의 질 개선에 있기 때문이다.

주민복지·삶의 질 강조

이제는 얼마나 많은 시책과 사업을 했느냐가 중요하지 않다. 지역과 지역주민의 소득과 취업기회를 얼마나 많이 창출하고, 주민복지와 삶의 질을 어느 정도 개선했느냐가 중요하다. 이는 지역발전 시책이 수요자 지향적이고 성과 중심형으로 변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지역발전의 의미가 달라지면서 시책의 내용과 추진방식도 변하고 있다. 그동안 대부분의 지역발전시책에서는 장기적이고 대규모적인 산업육성시책과 투자 사업을 선호했다. 그러다 보니 지역발전은 외부투자와 지원에 의존하게 됐다. 지역발전과정에서는 지역이 지닌 잠재력과 인적, 물적 자원의 활용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했고 지역경제에도 큰 영향을 주지 못했다.

선진국들은 산업생산 확대만을 위한 외부기업과 자본의 유치보다는 지역주민의 생업기반이 되는 지역 내 중소기업, 관광, 여가, 쇼핑, 농축산 및 어업 등 다양한 지역경제활동의 경쟁력과 부가가치를 높이는 데 보다 많은 관심과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그동안 지역혁신 발전이라고 하면 바이오산업, 생명산업, LCD영상멀티미디어, 메카트로닉스 같은 최첨단 미래 산업을 육성하는 것으로 이해했다. 그러나 최근의 실용적인 접근에서는 실현가능성이나 효과가 불분명한 투자나 노력보다는 그 지역사회가 요구하는 실질적 효과를 더 중요시한다.

이제는 거창한 이념과 이상의 실현보다는 지역사회의 자율적인

노력으로 생활에 밀착된 문제해결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이 같은 새로운 전략은 지역발전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주민과 경제주체의 폭넓은 참여와 협력을 이끌어 내는 역할을 한다.

효율적인 활용이 더 중요

지역발전의 패러다임 변화는 정부투자와 지원방식에도 일대 전환을 가져왔다. 그동안 모든 지역은 시설투자와 정부지원을 높이는 데만 치중했다. 그러나 새로운 지역발전 전략 하에서는 투자와 지원의 확대보다는 이들의 효율적인 활용이 더 중시되고 있다. 다양한 부서와 기관에 의해 산발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책과 사업을 종합적인 지역발전의 틀 속에서 전략적으로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전국 차원에서는 부처 간 지역발전 시책과 사업을 연계·조정하고, 지역 차원에서는 중앙과 지방정부 간 연계와 조정을 위한 통합적 관리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그러나 새로운 통합 시스템이 효율적으로 작동되기 위해서는 그동안 개별 조직이나 기관의 이해에 충실해 온 기존의 폐쇄적 인식과 업무관행부터 타파되어야 한다. 이 같은 시대적 요구와 선진국의 정책 변화는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 크다. 타성적이고 비효율적인 지역발전시책에 대한 반성과 함께 지역경제 전반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혁신창출의 새로운 계기가 마련되었으면 한다.

[김용웅, 대전일보 2004년 7월 17일자]

행정수도 경제 효과 충남발전에 접목

충남발전연구원 제5대 원장으로 김용웅 전 국토연구원 부원장이 지난 9일 취임했다. 김 원장은 충남발전연구원을 신행정수도 건설 등 국정 과제 수행과 지역정책 수립을 위한 지역의 싱크탱크(think tank)로 발전 하도록 이끌 것이라고 강조했다.

충남도정 뿐 아니라 국가 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게 될 충남 발전연구원의 운영 구상을 김 원장으로부터 들어본다. <편집자 주>

忠南 미래혁신 도시로 무한한 가능성 국정과제. 정책수립 싱크탱크' 역할 최선

'태스크포스팀'구성 行首 추진 뒷받침 '국가적 과제'道民 협력. 동참 따라야

-신행정수도 건설 등으로 인해 충남이 국가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시기에 총발연 원장으로 취임한 소감은.

▲각 시도마다 지역발전연구원이 있다. 그 중에서 충남발전연구

원은 특별하다고 생각한다. 충남은 신행정수도 건설 및 지방분권 추진 등으로 국가 차원에서 위상과 역할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시기에 충남의 경제·사회 발전과 지역개발 연구를 전담하게 된 것에 대해 무거운 사명감을 느낀다.

-총발언 원장으로 중점 추진할 시책은.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계기로 충남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중심으로 부각되고 있어 다양한 정책수요의 증대가 예상된다. 또 중앙정부 및 지역사회와의 협의와 협력 요구도 커질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도정의 혁신과 지역발전의 촉진을 위해 새로운 아이디어와 정책수립에 필요한 과학적 정보와 자료를 시의성 있게 연구해 제공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연구기관으로 거듭 태어나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새로운 혁신과 국가발전의 선도 역할을 하는 도정의 싱크탱크(Think Tank)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한다.

또, 분권형 사회에서는 정책수립과 집행과정에서 이해 당사자와 관련 집단의 참여와 협력이 필수적이다. 이 같은 차원에서 충남발전연구원은 지역혁신과 발전을 위해 민·관·학·연을 연결하는 지식 네트워크 매니저(network manager) 역할을 강화하도록 하겠다.

-최근까지 신행정수도 건설을 두고 정치권과 수도권 등에서는 소모적인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대한 견해는.

▲한 마디로 안타깝고 유감스럽다고 생각한다. 더욱이 현재의 논

쟁이 정치적인 차원에서 감성적으로 비화되고 있는 데는 실망감을 금할 수 없다. 보다 대승적인 차원에서 국가의 미래와 지속적 발전을 위해 무엇이 중요한지 판단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최근 논쟁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절차상의 뒤늦은 문제제기라 할 수 있다. 이미 여야의 합의하에 법률이 통과돼 적법절차에 따라 시행되는 시책을 이제 와서 필요성 여부부터 다시 따져 보자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 정부시책 추진의 공신력 훼손과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현재의 논쟁이 지속되면 치유할 수 없는 국민적 갈등과 국가적 손실을 가져 올 우려도 있다.

또 다른 문제점은 법적 절차상 문제인데 국회의 의결을 거친 법안을 행정부에서 시행도 하지 않고 국민투표에 부치는 것이 3권 분립의 민주주의 원칙에 부합하는 가하는 점이다. 만약 이것이 선례가 되면 입법부를 무력화하는 포퓰리즘을 등에 업은 권위주의적 정부가 나오지 말란 법이 없지 않은가 생각된다.

-신행정수도 건설로 기대되는 충남의 모습은 어떠하리라 생각하는지.

▲우선 지역의 정체성과 위상이 크게 달라지리라고 생각한다. 이제 충남도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중심으로 도민의 자긍심을 높일 뿐만 아니라 국제적 브랜드로 가치를 지니게 될 것이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지역으로의 위상과 상징성을 지니게 돼 다양한 부문의 경쟁력과 발전 잠재력을 확대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신행정수도는 말 그대로 서울과 수도권내 정치, 사회, 경제 및 문화 등 다양한 부문의 중추관리기능 중 정부의 행정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다. 이는 전국최고의 행정, 관리 및 전문지식인력의 집중을 의미한다.

이에 대덕단지의 과학기술인력과 결합하면 전국 최고의 두뇌집단의 집적지가 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충청도가 미래의 혁신발전을 선도하는 거점으로서의 발전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충남 지역은 우리나라의 관광문화 및 교류중심지로 부상할 것이며 미래형 도시개발 및 정주환경 창출의 시범 모델이 될 것이다.

-신행정수도 건설에 따른 충남 도민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며 연계 발전전략으로 중점을 뒤야 할 부분이 있다면.

▲신행정수도의 건설은 21세기 대한민국의 명운을 결정할 국가적 과제이다. 따라서 신행정수도의 건설은 국가발전과 국제적 차원의 경쟁력 강화라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이해를 하고 협력, 동참하려는 의지와 노력이 필요하다. 지역적이고 집단적 이해를 초월하는 마음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연계발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행정수도건설이 국가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역적 차원에서 지원하는데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신행정수도의 건설이 효율적으로 추진되고 신행정수도의 기능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때만이 지역발전이 보장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신행정수도는 처음부터 모든 기능을 모두 갖출 수 없다. 따라서 지역에서는 보완기능을 제공할 수 있는 부문의 발전에 치중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신행정수도와 주변지역을 묶는 네트워크 도시체계와 정비가 핵심과제라고 할 수 있다.

-신행정수도 후보지가 사실상 확정됨에 따라 도청 이전 지역에 대한 논란이 가속화되고 있는데 도청 이전 후보지는 어떻게 선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신행정수도의 건설은 충남도의 경제, 사회부문뿐만 아니라 지역구도나 공간구성에도 엄청난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여기에는 행정구역과 지방행정구도의 변화도 따르리라고 생각한다. 또 행정수도가 갖는 법적 지위도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다.

도청이전 문제는 이 같은 장기적인 변화를 고려해 종합적인 차원에서 검토할 사항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 지역의 경쟁력과 발전에 기여하고 도정의 효율성을 높여 주민 서비스를 증진할 수 있는가에 초점을 맞추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 같은 모든 여건을 고려해 도민의 합의, 협의를 이끌어내야 할 것이다.

-충남발전연구원 내 신행정수도 건설을 지원하는 태스크포스팀을 구성, 운영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역할을 하는지.

▲태스크포스팀에서는 주민보상, 이주대책, 주민설득 등 지역적 차원에서 신행정수도 건설 추진이 용이하도록 도울 것이다. 또 행

정수도가 건설됨에 따라 파생되는 효과를 지역발전에 어떻게 접목시킬 것인가 하는 연구를 수행할 것이다. 이와 함께 행정수도 효과를 받지 못하는 지역 간의 격차 문제, 지역 내 균형발전 문제 등을 해결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신행정수도가 건설되면 토지이용 개발에 대한 수요가 커지기 때문에 이에 대한 특별한 조치가 없으면 난개발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기존에 건설된 수도권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계획적 경관 체계 정비가 중요하다. 충남 전체가 개발 수요를 충족, 삶의 질이 높은 여건을 만드는데 치중할 것이다.

[중도일보 2004년 7월 30일자]

범부처적 추진체계 확립과 정책 집행력 강화를

신행정수도 건설이 효율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에 대한 공정하고 정의로운 보상과 이주대책이 수립돼야 한다. 또한 정부부처·공공기관의 우선 이전과 함께 민간중추기능의 이전을 촉진해야 하며, 이를 위해 주거시설·업무·문화 등에 대한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신행정수도 건설은 그 동안 대선기간 중 정치적 차원의 논의과정을 거쳐 대의기관인 입법부의 법제정 절차를 완료했다. 올해 8월 정부는 행정수도 건설예정지를 확정하고, 지역주민의 보상과 이주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앞으로 국제공모 등의 절차를 거쳐 신행정수도 건설의 기본구상과 도시설계를 완료하면 2007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도시 건설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적인 정책형성과 입법과정을 거쳐 집행단계에 진입한 신행정수도 건설시책을 둘러싸고 뒤늦은 찬반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신행정수도 건설시책의 입법화 당시와 특별한 여건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합법적 절차에 의하여 추진 중인 시책을 백지화하는 것은 정

부정책의 신뢰도를 훼손하고 국정운영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이제 와서 신행정수도 건설시책을 없던 일로 하기 위한 찬반 논란과 시도는 신행정수도 건설을 통하여 지배와 종속의 기존의 불평등 구조에서 벗어나 상생발전의 계기를 마련하려는 열망을 좌절시키고 지역간 대립과 갈등을 더욱 심화시키는 우(愚)를 범할 수 있다.

국론의 분열과 갈등을 확대 재생산하는 비생산적이고 소모적인 신행정수도 건설의 찬반 논쟁보다는 세계화된 경제체제 속에서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적인 국가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다.

첫째, 어떻게 하면 신행정수도 건설공사가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지 둘째, 신행정수도 건설 이후 정부와 민간중추기능 등 행정수도의 효율적 기능이전을 위한 과제와 조건은 무엇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행정수도 건설의 궁극적 목적인 수도권 집중·과밀 해소와 지역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공정한 보상·이주 대책 수립해야

신행정수도 건설이 효율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우선 건설공사가 차질 없이 추진되어야 한다. 건설공사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서는 첫째, 지역주민에 대한 보상과 이주대책이 순조롭게 추진되어야 한다. 그 동안 국가적 과제의 필요성과 당위성은 강조되어 왔으나 지역주민에 대한 대책의 제시는 상대적으로 부족했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보상과 이주대책이 되기 위해서는 조상대대로 살아온 생

활터전과 문화적 전통을 잃게 될 지역주민과 그렇지 않은 집단과의 차등적인 보상책이 우선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승조사상이 높고 노년층이 집중된 전통 마을의 특성을 고려하여 마을별 집단촌(향우촌) 건설, 노년층의 생계대책 마련과 맞춤형 생활상담 서비스 제공, 문중묘지의 공원화 등 다양한 주민지원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둘째, 건설인력을 확보하고 이들의 주거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인구 50만 명 규모의 신행정수도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대규모의 건설자재와 인력이 소요된다. 그중에서도 건설인력의 확보와 수용체제를 마련해야 한다. 신행정수도 건설공사 1단계(2007~2011년)에만 1일 약 2만 6,600명 정도의 인력이 투입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 중 1만 7천 명 정도가 지역외의 인력으로 충당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대규모 건설 인력의 주거와 사후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브라질과 같이 신행정수도 주변에 불량주택과 비계획적 도시의 난립을 초래할 수 있다.

셋째, 도시 건설과 함께 신행정수도가 정부기능의 중심지로서 역할 할 수 있도록 광역적 간선교통망과 광역도시기반 조성이 병행되어야 한다.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신행정수도 건설 추진조직은 다양한 도시개발시책과 사업을 통합적으로 추진하고, 안정적 예산 확보와 집행을 위한 관리체계와 법적 지위를 지닐 수 있어야 한다.

끝으로, 행정수도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혁신적이고 매력적인 도시건설 계획과 설계안을 마련할 수 있어야 한다. 신행정수도는 단순한 신도시 건설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신행정수도는 국가적 상징성과 정체성을 대변하고, 국가의 행정 중심지로서

의 기능수행과 함께 21세기 새로운 도시개발 모형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이와 함께 도시의 경쟁력과 문화적 매력도를 결정하는 주요 건축물과 시설물의 창의적이고 현대적인 설계를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것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는 기존의 폐쇄적이고 행정 편의주의적인 계획수립과 도시설계 및 건설방식에서 과감히 탈피해야 한다. 국·내외 다양한 전문가 집단의 자유로운 참여와 주도가 가능한 개방적이고 유연한 계획수립체계의 확립과 창의적 설계를 촉진할 지원책 마련이 병행되어야 한다.

수도권과 비건할 만한 도시 기능·물적 기반 갖춰야

신행정수도 건설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부부처와 공공기관의 이전이 우선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청와대 등 핵심적인 정부기관이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확고한 추진의지를 천명하고 관련기관들에게 이전 촉진의 동기부여 역할을 주어야 한다.

둘째, 신행정수도로 경제·문화·사회 분야에서 중추적 기능을 담당하는 민간부문의 이전이 이루어져야 한다. 민간부문의 이전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경쟁력과 매력도를 지닌 도시기능과 물적 기반을 갖추어야 한다. 그 동안 신행정수도 건설계획은 민간부문의 이전을 위한 기능특화와 육성 방안을 제시하는 데는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함께 신행정수도와 지방에 민간부문의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 동안의 신도시 건설은 주로 주택공급에 치중했기 때문에 민간투자 유치 문제가 대두되지 않았다. 그러나 민간중추기능의 이전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주거시설뿐만 아니라 업무·문화·여가 및 과학기술시설 등에 대한 민간투자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재정·금융적 지원, 이전시설에 대한 조세혜택 등 다양한 조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정부 및 민간 기능의 이전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수도권 내 정부기관과 시설 등 이전적지(移轉跡地)의 효율적 활용방안이 우선 마련되어야 한다. 이전적지의 활용은 정부기관의 이전재원 확보와 해당지역의 경제 활성화 차원이 우선 고려되어야 한다. 이 밖에도 행정수도 기능의 이전 촉진을 위해서는 이전기관 종사자와 가족들의 이주 촉진책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종사자들과 가족들이 기관이전과 함께 주거지를 이전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전에 따른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은 물론, 이들이 이주 이후에도 수도권에서 향유하던 주거·교육·문화 및 편익시설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야 한다. 소단위 완결형 근린주거단위(neighborhoodunit) 건설방식을 도입하여 기관 이전 초기 단계부터 고품격의 교육·의료·문화 및 사회시설과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새로운 도시개발 접근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범부처적 추진체계 확립 필요

신행정수도 건설의 궁극적인 목적은 수도권의 과밀·혼잡의 해소와 지역 간 균형발전을 통하여 수도권은 경쟁력이 높은 세계도시지역(Global City Region)으로 도약하고 지방은 특화된 경쟁력을 갖춘 자립적인 경제단위를 형성하여 세계화된 경제체제 속에서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있다.

그러나 신행정수도의 건설만으로는 이 같은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 신행정수도 건설로 수도권에 집중된 과밀이 해소되기 위해서는 신행정수도 외 지방에도 서울과 수도권에 비견될 수 있는 교육 및 문화기능, 생활여건과 경제활동 기회가 조성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수도권 내 이전기관의 종사자나 가족들이 지방에 이전하게 되고 인구의 지방정착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이를 위해 다양한 정부시책을 통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뿌리 깊은 부성주의(Departmentalism)와 폐쇄적 조직문화를 극복할 수 있는 범부처적 정책추진체계의 확립이 필요하다. 일차적으로 그동안 개별적으로 추진되던 정부혁신과 지방분권, 국가 균형발전 및 동북아 경제중심 시책 등 3대 국정과제를 상호 유기적인 연계 속에서 통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시스템부터 갖추는 노력이 필요하다.

신행정수도의 건설은 역사적으로 형성된 정치·행정 권력의 공간적·사회적 관계를 변화시키고 새로운 국토공간질서를 형성하여 국가발전의 새로운 틀을 짜는 역할을 할 것이다. 이 같은 국가적 대사는 추진 여부에 대한 결정 못지않게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집행이 중요하다. 미래의 국가발전을 좌우할 역사적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사소한 실수나 시행착오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제부터라도 신행정수도 건설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치밀한 계획과 실행을 위한 제도와 시스템을 만들어나가는 데 치중해야 한다. 당위성만으로 정책 목표는 실현되지 않는다. 실행력이 확보되지 않은 시책의 추진으로 미래의 국가발전을 저해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신행정수도 건설은 2030년까지 계속되어야 할 장기사업이다. 장

기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국민적 관심과 지지 속에서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지금까지의 추진 방식에 대한 진지한 반성과 보다 진솔한 자세로 국민에게 다가가는 자기 쇄신의 노력이 필요하다. 신행정수도 건설이 우리나라가 분열과 갈등구조에서 벗어나 통합과 협력을 통하여 국가발전의 전기를 마련하는 역사적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김용웅, 나라경제 2004년 10월호]

행정수도 위헌결정과 정부·정치권의 신뢰회복

엇그제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에서 행정수도 이전 특별법에 절차적 위헌을 들어 국가적 대사인 동시에 충청권의 대역사 추진에 제동이 걸려 그 파장이 일파만파로 확대되고 있다.

이번 사태로 인해 엄청난 피해를 본 충청권에 대해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과연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는가? 그러나 현시점은 행정수도 이전 무산에 따른 각종 대안들을 염출해 내는데 부심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를 지켜보고 있는 충청권의 입장에서는 참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청와대와 입법부가 옮겨지는 것이 결과적으로 천도이므로, 천도는 관습헌법 논리에 따라 안 된다는 것이 헌재의 위헌판결 요지라 한다면, 이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당초계획대로 가면 될 것이라는 주장은 물론, 헌재의 의견과 관련하여 시간이 걸리더라도 국민투표 절차를 거쳐 당초 원안대로 가야 하는 것이 옳다는 주장도 꽤나 설득력을 갖는다.

필자는 이번 사태를 접하면서 국가(정부)에 대한 신뢰기반이 허물어졌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비단 행정수도의 충청권 이전 자체가 엄청난 중대성을 갖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동안 보여준 정부와 정치권의 태도에 비추어 그 귀결은 국가 신뢰를 확증시켜 주었어야 했다. 그러나 전혀 그렇지 못했다. 그렇다면 문제는 이렇게 허물어진 정부와 정치권에 대한 신뢰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겠는가? 아니 신뢰할 수 없는 정부나 정치권이라면 정말로 큰 문제가 아닌가?

차제에 계룡시 승격을 잠시 떠올려 보지 않을 수 없다. 언필칭 계룡시 승격은 이 지역에서 스스로 만들어 성사시킨 하나의 사례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행정수도 이전은 이 지역에 정부나 정치권에서 만들어 주겠다고 한 것이다. 따라서 이들은 성격 자체가 분명 다르다. 그러나 이들에게는 엄연히 공통점이 있다. 즉, 국가적 약속에 대한 공적 신뢰라는 것이다. 계룡시가 승격된 중요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그 중에는 역대 대통령들의 시 승격 추진 약속이라는 부분이 극히 중요한 요체가 되었다는 말이다.

그렇다면 이번 현재의 위헌결정과 관련하여, 추락하고만 정부나 정치권에 대한 신뢰기반은 어찌 되는가? 신뢰할 수 없는 정부, 신뢰받을 수 없는 정치권은 그 존립기반에 치명적인 손상이 불가피한 것은 이미 역사적으로도 나타난 것 아닌가? 또 하나, 만일 충청권이 이토록 정치적 기반(정치력)이 허약하지 않았다면 과연 이렇게 되었을까?

필자는 언젠가 이 칼럼에서 신행정수도 건설은 대선공약 때 정치적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써, 그 생명력 내지는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에 상응하는 정부와 정치권의 책무를 주문했던 기억이 난다. 이를 허술하게 처리했기에, 그리고 정략적으로 임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은 불문가지다.

이제 충청권에서는 정부나 정치권에 대한 신뢰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게 해 줄 필요가 너무나 크다. 이 지역의 정서가 어땁고, 기질이 어떠하니 그대로 우야무야 넘어갈 사안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정부나 정치권에 전달할 필요가 있다.

차제에 충청권의 책임 있는 사회지도층 인사들은 이번 사태에 대해 공분(公憤)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정치인들은 당적에 관계없이 동일한 목소리를 내야만 한다. 그리하여 국가발전과 지역발전이 동시적인 것임을 분명 재확인하면서, 이를 정부나 정치권에 강하게 요구해야 한다. 그래야만 정부나 정치권에서도 무너진 공적 신뢰를 회복하는 방향에서만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

행여 정부나 정치권에서 충청권을 달래기식 위무(慰撫)에 그친다면, 이는 본말을 전도한 것이며 만일 그렇게 된다면 정부나 정치권에 대한 신뢰기반은 더 이상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런즉 정부나 정치권에서는 충청권 전체가 납득할 수 있는 조치를 명확하게 내놓아야 한다. 그리고 그것은 실추된 공적 신뢰기반을 능히 만회할 수 있는 정도의 결자해지의 조치여야만 한다.

정치와 행정은 어떤 관계인가? 이것이 국가발전에서 차지하는 의미와 지역발전에서의 그것과는 차이가 있는가?

정치와 행정의 관계에 대해서는 정치-행정 '일원론'이니 '이원론'이니 하여 논란도 많았던 게 사실이다. 또 한창 민선 지방자치가 뿌리를 내려가고 있는 요즘에는 지방정치와 지방행정의 관계도 과거와는 사뭇 달라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물론 어느 경우든 직업 공무원제는 행정운영의 근간이 돼야 하며, 이것이 흔들려서는 결코 안 된다. 공직은 정치적 중립화라는 제도적 테두리 내에서 보호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국가발전도 그렇거니와 지역발전에 있어서 정치와 행정은 서로 바람직한 관계를 유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정치는 가치의 권위 있는 배분이며, 행정은 이를 집행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 이는 중앙 차원이나 지방 차원 동일하다. 따라서 행정의 영역은 정치적 가치를 구현하는 입장에 서있다. 물론 정책기획이나 통합조정을 포함하여 행정을 적극적으로 펼치는 경우라 하더라도 정치적 가치를 구체화하는데 국한된다.

그런데 문제는 수도권 지역과 같이 막강한 정치력에, 막대한 자원동원력을 갖춘 경우와 그렇지 못한 대다수의 지방과는 엄청난 차이가 난다는 점이다. 이 점에서 충청권은 지역의 역량이 취약한 지역임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한 예는 신행정수도 충청권 이전 입법화 과정에서 아직도 반

대 움직임이 계속되거나 최소한 잠복되어 있으나, 이를 정치력으로 해결하기에는 역부족 현실이 이를 반증한다. 충남도의회 홍표근 의원의 삭발 소식을 접하고선 가슴이 비통함을 금할 수 없었다. 또한 얼마 전 계룡시 승격에서 충청권 출신 국회의원과 지방의원들이 뜻을 모아 성사되는데 큰 역할을 수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에서는 충청권의 정치력 부재로 인한 차가운 냉대와 수모를 견디지 않으면 안 되었던 기억이 생생하다.

더욱이 충남도의 최대 지역현안이기도 한 당진항 분리지정은 중앙정부와 상대지역(경기도 평택시)과의 복잡한 관계 속에서 해결이 계속 지연되고 있다. 당진항 지정이 제17, 19회 중앙항만정책심의회에서 당위성이 인정되는 등 나름대로 여건조성과 가시적인 성과가 기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 소 취하를 전제로 협의에 응하겠다는 입장이며, 특히 주무부서인 해양수산부는 원칙과 소신 보다는 時流에 편승하여 결정을 유보하고 있는 상태이다.

그동안 나름대로 정책개발에 임해오면서 행정 스스로 홀로서기란 참으로 어렵다는 점을 점점 강렬하게 느낀다. 어쩌면 정치와 행정은 서로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연속선상에 있다는 사실이 더욱 뚜렷하게 다가옴을 느낀다.

이제 충청권은 국가의 중핵기능을 능동적으로 수용해야 하며, 오랫동안 보편적 삶을 간단없이 살아온 이 아름다운 공동의 터전에서 무언가 신선하고도 감동 어린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야만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과제들이 있겠으나, 그 중에서 행정의 부족

한 부분을 정치가 메워주고 용기와 힘을 보태주는 그런 정치의 역할이 긴급하다고 생각한다.

[최병학, 중도일보 2004년 10월 26일자]

신행정수도의 새로운 추진방향과 과제

드디어 충청권의 민심이 폭발했다. 이 지역에서는 상당히 드문 일이다.

정치권에 의해 우롱당하고 헌재에 의해 짓밟힌 지역의 자존심이 울분과 분노로 분출된 것이다. 중앙의 언론들은 충청권의 피땀한 절규와 규탄의 몸부림을 의도적으로 외면하거나 지역 이기주의 쪽으로 편파하고 있다. 하지만 헌재의 위헌결정으로 촉발한 작금의 사태는 그 파장이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 및 향후의 정국구도를 근본적으로 뒤흔들 만큼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즉 이번 사태로 초래되는 충청권의 직접적인 피해보다 우리 국가 사회 전체가 겪어야 할 후유증이 훨씬 클 것이라는 사실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우선 전체 정치권에 대한 실망과 불신은 더 이상 회복불능의 상태로 빠지고 말았다. 그동안 한국정치는 과잉·과대하게 우리 사회를 지배했지만, 정치력은 과소·부재했기 때문에 정치력으로 해결해야 할 국가의 정책적 판단마저 사법부의 판결에 맡겨버리는 우스꽝스러운 결과를 낳고 말았다.

한편, 서울중심주의, 서울제일주의가 우리 사회에 얼마나 뿌리 깊은지 다시 한 번 확인하였다. '서울은 수도'라는 관습이 헌법적 규범이 되고만 현재의 판결은 결국 '서울은 수도여야만 한다.'는 뿌리 깊은 관습적 편견과 우월의식을 함축하고 있음에 다름이 아니다. 중앙언론 소유자를 포함한 한줌도 되지 않는 기득권자들의 주술에 대다수 수도권 주민들은 집단최면에 걸려있는 듯싶다. 이 의식을 깨지 못하면 수도이전은 고사하고 국민통합과 국토의 균형발전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가 영원히 불가능하다.

최대의 위기를 겪고 있는 이 중요한 시점에서 지역의 응어리진 감정과 결집된 힘을 민주적으로 보여주는 한편 냉철한 이성과 지혜로 수습해법과 대책을 마련해 두는 것은 이 지역이 두 번 다시 피해와 상처를 받지 않는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다. 위기시에는 더욱 많은 대화와 토론을 통하여 난국수습의 해법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그 출발점으로 해법의 4원칙과 3단계를 제시하고자 한다.

난국수습의 원칙은 종합적, 체계적, 전략적, 주체적이어야 한다. 종합적이라 함은 신행정수도의 중단은 국정과제로서의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차질과 함께 충청지역에 엄청난 피해와 지역발전계획의 근본적인 수정을 불가피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땀질식 미봉책이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또한 대전·충남·북 자치단체와 학계 및 시민단체들은 견고한 공조체제로 중구난방이 아닌 체계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그 수습책은 전략적이어야 한다. 생각 같아서는 신행정수도 건설의 지속적 추진을 계속 강경하게 주장하여 그 뜻을 당장 관철시키고 싶은 것이 지역의 여론이다. 그러나 신행정

수도의 지속적 추진에는 헌법적 제약, 수도권 반대 등 많은 걸림돌이 다시 추가되었기 때문에 전략을 새로 짜야한다. 끝으로 이러한 수습내용과 과정은 중앙정부가 아닌 충청권이 그 주도권을 가지고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대원칙 하에 수습 1단계는 지역이 겪게 될 피해를 철저히 조사해서 보상하는 응급조치가 필요하다. 여기에는 연기·공주 지역 내 이주를 전제로 대토 마련을 위해 금융대출을 받았던 주민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우선적으로 검토돼야 할 것이다. 2단계는 위헌 판결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청와대와 국회 그리고 대법원 등의 헌법기관만을 제외한 다른 행정부처의 이전을 당초의 예정대로 추진토록 하는 것이다. 변칙적 수도 이전이라는 수도권의 반발이 예상되나 대통령과 정부의 의지로 충분히 실행이 가능하다. 만일 정부가 이것마저 주저한다면 애초부터 신행정수도건설의 추진의지와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 정부는 하루빨리 국민적 합의를 걸쳐 신행정수도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누구도 독단적으로 행정수도 건설을 포기하거나 중단시킬 수 없다. 그리고 3단계는 신행정수도의 합법적 추진을 위해서 필요한 헌법개정, 국민투표 등 국민적 공감대를 얻는 제반조치들을 치밀하게 모색해 두는 것이다.

이제 다시 시작하자. 향후 신행정수도의 건설은 그 필요성과 효과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중요시 된 만큼 폭넓은 의견수렴을 위한 독립 상설 기구를 설치해서 다루어 나갈 것을 제안한다. 그리고 정치권은 이 문제를 당리당략이나 선거의 지렛대로 보지 말고 대한민

국의 통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지역균형발전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현명하게 접근해 주길 바란다. 충청지역 주민들은 지혜와 힘을 모아 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함으로써 실추된 지역의 자존심을 회복하고 국가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 전환점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육동일, 열린충남 2004년 11월호 통권28호]

신행정수도 압리적 추진을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신행정수도 건설과 관련한 모든 사업의 중단이 불가피하게 됐다. 정권 차원에서 추진되던 국가사업이 갑자기 중단되면서 국가적 혼란과 지역주민의 피해가 가시화되고 있다.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헌재 결정에 대한 찬반 논쟁이 아니다. 합헌의 테두리 안에서 신행정수도 건설과 이를 통해 목표했던 국가균형발전정책을 실현하고 주민의 억울한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는 것이 시급하다.

헌재 결정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일부에서는 헌재 판결이 정부 정책의 정당성을 부인한 것으로 오해하거나 의도적으로 왜곡하고 있다. 헌재 판결은 신행정수도 건설의 역사적인 당위성과 시대적인 필요성,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정당성을 부인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일부에서는 헌재의 결정을 신행정수도 건설 자체를 반대하는 논거로 삼고 있다.

이는 명백히 헌재 결정 내용을 왜곡한 것으로 헌재의 권위와 국

민적 신뢰를 훼손하며 현재와 국민을 이간하는 무책임한 행동이다. 현재 결정 이후 정부가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 해소가 여전히 중요한 국정과제이자 목표이며 이를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은 다행이다. 그러나 이런 다짐이 위헌 결정을 이유로 실행 정수도 건설 정책 자체를 포기하는 방향이라면 그동안 정부정책을 신뢰하고 순응해 온 국민으로선 받아들이기 어렵다.

실행정수도 건설 정책은 대선과 총선이라는 정치적 검증 과정을 거쳤고 국회의 적법한 입법 절차에 의해 결정돼 합법적으로 추진한 국가의 핵심 정책이다. 대통령이 먼저 공약했으며 그 뒤 정치권이 합의한 것으로 충청도민이 요구한 사항이 아니었다. 그런데 현재의 위헌 결정을 빌미로 슬그머니 실행정수도 건설을 포기한다면... 선량한 지역주민을 들쭉서 놓고 이제 와서 모른 척한다는 게 말이 되는가.

실행정수도 건설은 수도권 과밀 해소와 균형 발전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국민소득 2만 달러의 선진국 진입을 위한 정책이다. 정권이 앞장서고 정치권이 공동 노력해 헌법 개정이든 국민투표든 '합헌'의 테두리 내에서 실행정수도 건설을 계속 추진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해야 한다. 만약 대통령이나 정부가 실행정수도 건설을 포기하고 임시방편적 대안으로 국민을 호도하려 한다면 이는 정책 추진에 대한 책임 회피이고 국민에 대한 약속 위반임을 명심해야 한다.

실행정수도 건설 정책의 폐지에 따른 손실과 피해는 국민의 몫이

다. 나날이 악화되고 있는 서울과 수도권 의 과밀과 난개발을 방치할 것인가. 끝없이 침체돼 가는 지방을 그대로 두고 국가 발전이 가능하겠는가. 지난 40년 가까이 정부기관 기업 공장의 분산과 권력 집중 해소를 위한 분권 시책,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폭넓은 수도권 규제 시책 등을 수없이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한 원인은 무엇인지, 그리고 신행정수도 건설 외에 대안이 과연 있을 수 있는지 우리 모두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이제 우리는 정파적 이해와 정치적 호오를 떠나서 미래의 국가 발전 차원에서 신행정수도 건설의 문제를 다시 생각해야 한다.

[김용웅, 동아일보 2004년 11월 5일자]

행정수도 후속 대책

참여정부가 ‘정권의 진퇴와 명운을 걸고’ 국정과제로 추진하겠다는 신행정수도 건설이 중단될 위기에 직면했다. 백년대계의 국책사업이 일방적으로 중단됨에 따라 국정운영의 혼란과 국민적 피해가 불가피하게 됐다. 다행히 정부는 얼마 전 행정수도후속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본격적으로 대책을 강구할 준비를 갖추고 있다.

그동안 일부 정부 당국자나 정치권에서는 충분한 연구와 국민적 협의절차도 없이 임기응변적인 대안부터 제시하는 성급함을 보였다. 더 이상의 시행착오는 막아야 한다. 신행정수도 후속 대책이 주민의 부당한 피해를 막고, 국가발전 전략으로서 실효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최소한 다음의 몇 가지 원칙이 지켜질 수 있어야 한다.

첫째, 주민피해 보상 우선 원칙이다. 국가정책 수행의 차질로 발생한 주민피해 보상책은 행정수도 후속대책 일정과 관계없이 우선적으로 마련돼야 한다. 가장 분명하고 효과적인 주민 보상책은 계획대로 연기·공주 지역의 7,128만㎡를 정부가 매입하는 것이다. 21세기 국가발전을 위한 최고의 잠재력을 지닌 지역 내 토지를 미리

확보하는 것은 국가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국가재정운용에 있어서도 현명한 투자가 될 수 있다. 아무리 정당한 국가목적 실현을 위한 정책이라 하더라도 특정지역 주민에게만 부당한 피해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

둘째, 국민적 합의 중시 원칙이다. 이해의 대립이 첨예한 장기적 국가시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민주적 절차의 확보와 국민적 합의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특히 행정수도 건설 중단으로 국론분열과 지역갈등이 증폭되고 있기 때문에 후속 대책 마련에서 광범위한 국민 의견의 수렴과 합의 도출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행정편의주의적이고 일방적인 운영방식에서 벗어나 다양한 이해 집단의 참여를 보장할 수 있도록 대책위원회의 인적 구성이나 논의 방식의 개방화가 필요하다.

셋째, 국정목표 실현 원칙이다. 대책안의 마련이 일부 비관론자들의 주장처럼 '충청권 달래기용(用)'이라는 인상을 주어서는 안 된다. 이는 또 한번 충청인들의 자존심과 명예를 짓밟는 것이다. 행정수도 후속 대책은 수도권의 과밀해소와 균형발전이라는 국가적 정책목표 실현에 부합될 수 있을 때만이 정당성을 지닌다. 누구도 국가적 대의를 지역문제와 결부시켜 훼손시키는 정략적 타협안을 바라지 않는다.

넷째, 집행 및 실천 가능성 확보의 원칙이다. 새로운 대책은 법률과 제도 및 재정뿐만이 아니고 기술적 차원에서도 집행 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 향후 대책은 실행력이 없는 규범적 대안이어서는

안 된다. 더구나 시간을 정해 놓고 무리하게 졸속으로 추진해야 할 사안도 아니다. 더 이상 안이한 추진으로 국민을 실망시키지 말아야 한다.

다섯째, 미래지향성과 국제경쟁력 확보 원칙이다. 신행정수도 건설은 장기적인 국가발전 전략이다. 따라서 후속 대책은 수도권 과밀과 지역 격차와 같은 현안 해결에만 치중해서는 안 된다. 나날이 치열해지는 국제경쟁 속에서 국가적 경쟁력을 높이고 미래의 국가발전 비전을 실현하는 수단이 되어야 한다. 급변하는 세계경제 여건과 질서 속에서 국가적 생존과 번영을 지켜내는 것이 시대적 사명이다. 방향성이 결여된 대책안 마련은 또 다른 혼란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 행정수도 후속 대책안 마련을 계기로 국민 모두가 정파적 이해와 지역적 대립구도에서 벗어나 상생의 문화를 만드는 데 동참했으면 한다.

[김용웅, 조선일보 2004년 11월 25일자]

새 행정수도 반대주장도 검증받아야

새 행정수도 건설은 수도권 중심의 집요한 반대와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추진이 중단됐다. 반대해온 정치권이나 집단에서는 채재를 부를 일이겠으나 정부 시책을 의심 없이 믿고 따라준 국민들은 허탈하기 그지없다. 더욱이 지역주민들은 막대한 금전적 손실과 정신적 피해를 보게 됐다. 적법절차에 따라 추진하는 정책을 일방적으로 중단시킬 만큼 옳지 않은 정책이었다면 왜 처음부터 반대하지 않았는지. 아니 반대는커녕 적극적으로 법안까지 통과시켜 주었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알 수 없는 노릇이다. 이제 와서 그때는 선거에서 표 받을 욕심에서 그랬으니 미안하다고 말 한마디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지도 의문이다.

나라의 안전보장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일차적 책임을 자처하는 정치집단이라면 이 사태를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국민에게 밝혀야 한다. 앞으로도 자신들의 정략적 행동에 대하여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로 면죄부를 받는 일을 되풀이할 것인가. 이제부터라도 국민들이 정파적 이해집단에게 더는 농락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들 찬반 주장의 진실성을 밝혀야 한다. 국가의 장래와 발전이

라는 차원에서 행정수도 건설 중단을 나중에 후회해도 구제의 길이 없기 때문이다.

그동안 새 행정수도 건설의 반대론 확산에 기여했던 몇 가지 주장만 보더라도 찬성과 반대 논리에 대한 객관적 검증이 얼마나 필요한지 알 수 있다.

첫째, 새 행정수도 건설은 충청권만 혜택을 받고 다른 지역은 상대적으로 피해를 본다는 주장이다.

새 행정수도 건설의 일차적 목적은 수도권에 집중된 권력을 분산시켜 수도권과 지방간의 지배와 종속의 악순환을 해소하는 데 목적이 있다. 물론 행정수도 건설만으로 수도권의 권력집중을 완화할 수 없다. 그래서 근본적인 수단으로 분권화를 병행 추진하고 있다. 새 행정수도 건설은 수도권의 과밀 해소와 함께 서울 중심의 인식, 관행 및 문화를 타파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실현하는 국가전략이다. 새 행정수도 건설은 공공기관 이전, 국가 균형발전 시책과 연계하여 하나의 정책묶음을 형성하고 있다.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 수단인 새 행정수도 건설이 어느 한 지역만을 위한 정책으로 폄하해서는 안 된다.

둘째, 새 행정수도 건설은 서울과 수도권 집값을 폭락시킨다는 주장이다.

수도권 인구는 2,500만 명이 넘는다. 그 중에서 2030년까지 25년

동안 약 51만 명이 감소되는데 집값이 폭락한다고 주장한다면 지난 9년 동안 52만 명의 인구가 감소했음에도 집값이 폭등한 서울시의 경우는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더욱 수도권에는 새 행정수도 건설을 전제로 행정수도의 3배가 넘는 경제특구가 조성되고 있는데 이에 따른 집값의 인상효과를 고려해도 집값이 폭락할 것인지 묻고 싶다. 찬성과 반대 주장은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를 함께 고려할 때만이 객관성을 지닌다.

셋째, 새 행정수도 건설은 서울의 국제 경쟁력은 물론 국가 경쟁력마저 떨어뜨린다는 주장이다.

서울은 1,000만이 넘는 인구와 국가적 경제중추 기능의 3분의 2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역동적인 집적경제 기반과 88올림픽, 2002년 월드컵 개최 등으로 쌓아온 서울의 경쟁력과 정체성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국가 경쟁력까지 떨어뜨린다는 것은 행정수도의 지위가 대도시 국제 경쟁력을 결정하는 필수요인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세계경제를 지배하는 뉴욕, 새로운 국제도시로 떠오른 상하이와 프랑크푸르트, 오스트레일리아의 시드니 등 수많은 대도시의 국제 경쟁력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새 행정수도 건설로 수도권 과밀 해소와 규제 시책의 합리화가 이루어져 수도권이 국제수준의 도시 시설과 환경을 갖추게 되면, 국제 경쟁력도 함께 높아질 수 있는 가능성을 굳이 외면해서는 안 된다.

새 행정수도 건설 중단은 나라의 명운을 좌우할 정책결정의 하나다. 이제는 반대주장이 결과에 따른 책임을 질 차례다. 잘못된 정책

결정의 직접적 피해자는 국민이다. 이제부터라도 행정수도 건설의 찬성과 반대 주장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걸쳐 국가의 미래가 달린 정책결정의 시행착오를 막을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었으면 한다.

[김용웅, 한겨레신문 2004년 12월 20일자]

신성장 동력의 중심지

수도과밀이 국가발전 저해 충청 미래도시 조건 갖춰

산업화시대 국가발전은 서울과 수도권이 주도해 왔다. 서울과 수도권은 대규모 도시기반과 국제항만시설을 갖추고 있어 산업성장과 국가발전을 촉진하는 역할을 할 수 있었다. 한강의 기적으로 세계적인 모범사례가 되었던 압축성장의 신화는 일극집중의 폐해로 빛을 잃어가고 있다. 그동안 수도권의 성장은 다른 지역의 자원과 잠재력을 고갈시키고, 내부적 과밀과 혼잡을 초래하여 국가발전의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이제 더 이상 국가발전을 수도권에 의존할 수 없게 됐다. 그 대신 충청지역이 국가발전의 신 성장 동력의 중심지로 떠오르고 있다. 충청권내 신행정수도의 건설은 수도권의 과밀과 일극집중의 한계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국가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다. 지난해 전반적인 경제침체와 불황 속에서도 충청도는 수출과 산업성장에 있어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었고,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고 있다.

국가발전 중심축의 충청권으로의 이전은 되돌릴 수 없는 시대적 흐름으로 정착되고 있다. 충남은 지난해 초 월드 브랜드 선포식을 통해 '대한민국의 새로운 중심으로의 도약'을 자임하고 나섰다. 신충청시대의 막이 올랐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충청권이 지역과 국가 발전을 선도하는 역사적 소명을 다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발전 패러다임과 전략의 선택이 필요하다.

첫째, 충청권의 발전은 국민적 통합과 지역 간 상생발전의 선도 역할을 해야 한다. 다른 지역의 발전기회를 박탈하고, 잠재력을 고갈시키는 발전 패러다임으로는 세계화시대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보장하기 어렵다.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과 선진국 도약을 위한 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충청인들의 각고의 노력이 진정한 평가를 받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둘째, 충청권의 발전은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할 수 있어야 한다. 이제 더 이상 요소투입형인 양적 성장전략으로는 국가발전과 선진국 진입을 보장할 수 없게 됐다. 충청권은 새로운 기술과 아이디어로 상품의 부가가치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혁신창출의 중심지로 거듭나야 한다. 충청권은 이미 디스플레이, 컴퓨터, 바이오산업 등 첨단기술의 개발을 위한 산업 클러스터의 구축과 산-학-관의 협동적 노력을 선도하고 있다.

셋째, 충청권의 발전은 정보·통신기술시대와 새로운 가치관을 수용하는 미래지향적 지역발전모델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충청권은 수요 대응적 개발관행에서 벗어나 우리나라가 지향해야 할 도시

및 농촌 주거환경 모델을 만들어갈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다.

새로이 건설될 도시는 현실세계와 사이버세계, 정보통신망이 완전히 융합된 미래 지향적 지능형 첨단도시 기반과 환경적 쾌적성과 문화적 품격을 갖추도록 하여 21세기의 국가적 도시개발 모델이 되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주민이 중심이 되는 민주적이고 복지 지향적 발전모델을 확립하는 것이다.

이제 충청권의 발전이 한 지역의 문제일 수는 없게 되었다. 충청인 모두는 21세기 국가의 생존과 번영을 이끌어가는 선도자로서의 자부심과 책임의식을 가지고 선진국으로 향하는 희망의 대열에 동참했으면 한다.

[김용웅, 중도일보 2005년 1월 3일자]

대전·충남 공동발전전략 마련을

지방자치제 이후 지역 발전을 위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지역마다 독특한 관광 상품과 축제 이벤트를 개발하여 지역 고유의 역사와 문화적 전통과 매력을 널리 알리고, 잠재력이 있는 지연산업과 첨단기술 산업 육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지역 간 경쟁은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 발전을 촉진하는 동인이 되고 있다. 그러나 지구화된 열린 경제 속에서 경쟁만이 능사가 아니다. 큰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른 지역과 힘을 합치고 협력하는 상생하는 자세와 노력이 필요하다. 자기 힘만 가지고는 무한경쟁 속에서 생존과 번영이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대전시는 충청도에서 분리 독립된 이후 16년 동안 눈부신 발전을 거듭해 왔다. 대전은 과학기술과 첨단산업의 연구 개발 기능을 바탕으로 국가혁신 발전의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고, 충남은 그동안 1차 산업 위주의 저성장 추세에서 벗어나 디스플레이, 바이오산업 및 메카트로닉스 등 미래 산업의 신 성장 거점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 같은 희망적인 여건 속에서 대전시와 충청도는 각각 대규모 산업단지, 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 및 첨단기술 산업 클러스터 형성 및 도시 개발 등 야심찬 시책과 사업을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즉, 지역경쟁 속에서도 대전시와 충청도는 1995년 '충청권행정협의회'를 구성한 이후 공동의 지역 현안에 대한 협력과 공조 노력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온 모범을 보여 왔다.

그러나 대전·충남지역이 21세기 대한민국의 발전의 선도적 중심지로서 위상과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지역 현안에 대한 부분적 공조의 한계를 넘어 하나의 기능적 통합단위로서 장기적 지역 발전의 비전을 공유하고, 상생의 전략을 통하여 이를 실현할 수 있는 공동 발전 시스템을 만들어 가야 한다.

하나의 통합지역으로 상생 발전을 위해서는 대전은 충청권의 최고의 중심도시로서 위상과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시개발뿐만 아니라 산업 발전에 있어서도 질적 고도화전략이 필요하고, 충남은 대전의 첨단과학기술과 R&D기능 강화를 뒷받침하면서 이를 생산으로 연계시켜 두 지역의 부가가치를 높이면서 국가의 신산업 생산의 중심부로 발전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지역 발전을 위한 공동 발전전략의 수립과 추진은 대전시와 충청도의 자치단체 노력만으로 이루어지는 데는 한계가 있다. 지역 간 공동 발전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관할 구역만을 중시하는 행정관행과 의식의 탈피도 중요하지만 지역사회 전반의 합의와 상대방에 대한 신뢰 기반과 협력문화의 형성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대전·충남이 하나의 기능적 통합지역으로 공동 발전전략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지역 내 전문가, 기업인, 시민단체 등 지역사회 구성원의 선도적 참여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뉴욕이 대도시권을 형성하면서 세계적인 비즈니스 중심지로서 발전하는 데는 뉴욕주와 인접의 뉴저지 및 코네티컷주 간의 공동 발전을 위한 기능 보완과 협력 체계 구축이 큰 역할을 했다.

어느 곳이나 행정구역이 상이한 지역 간 협력과 공동 발전 노력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 같은 한계를 극복하도록 한 것이 전문가, 시민단체, 기업인 등 지도자 집단의 역할이다. 여기서는 3개 주의 공동 발전전략의 마련을 위해 민간 부문이 지원하는 지역계획협회(RPA)를 1929년부터 구성하여 3개 주 내 지방자치단체들이 공동 발전을 추진할 수 있도록 있도록 뒷받침하고 있다.

대전·충남지역이 자율적인 공동 발전전략을 마련하여 국가 발전 선도 지역으로 도약을 위해 모두 힘을 합치는 한해가 되었으면 한다.

[김용웅, 충청투데이 2005년 1월 26일자]

행정 중심도시의 성공요건

국회행정수도특별대책위원회가 23일 마침내 행정수도 후속 대책을 위한 특별법안내용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충남 연기·공주 지역에 행정수도에 버금가는 행정 중심의 복합도시가 건설되게 되었다.

행정 중심 복합도시가 실현되면 연기·공주 행정 중심 도시는 국회, 대통령과 외교·안보, 행정자치부 등 외치와 내치 업무를 수행하는 서울과 함께 2극형 행정수도 기능을 담당하게 됐다.

이 같은 합의는 행정수도 이전 자체를 반대해 온 사람들에게는 미흡하고 불만족스러운 대안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국론 분열의 확산을 막고, 미래 국가 발전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었다는 점에서 사회적 수용이 불가피하다고 본다.

그러나 국회 합의와 특별법 제정만으로 성공적으로 제 기능을 발휘하는 행정 중심도시 건설이 이루어지고 수도권 과밀 해소와 지역 균형 발전, 그리고 국가 경쟁력 강화라는 정책 목표의 실현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문제는 지금부터다.

첫째, 지역 주민에 대한 정의로운 보상과 토지 매입이 금년 내 효율적으로 차질 없이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이주민에 대한 대안적 생활 터전 마련과 맞춤형 보상 체제의 도입 등 다양한 대책 마련이 뒤따라야 한다.

둘째, 21세기 미래 도시의 경쟁력과 문화적 품격을 갖춘 도시 개발을 위해 초현대적 도시설계와 새로운 건설 체제를 정립해야 한다. 재정적 한계만을 의식한 도시 개발은 천편일률적 패턴을 벗어나지 못하게 될 우려가 있다.

셋째, 이번 행정 중심 복합도시로 이전되는 정부 부처는 당초 계획보다 많이 줄었기 때문에 도시의 자족성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행정 중심 복합도시의 인구 규모가 결정되지는 않았으나 30만~50만으로 상정한다 하더라도 12개 부처 4차 2청의 이전 공무원 1만 명 정도로는 자족 도시 형성의 촉매 기능을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민간 기업 및 경제 활동을 대폭 유치할 수 있는 획기적인 자본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과 도시 개발 경영 전략이 마련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행정 부처 이전과 도시 개발이 수도권권 과밀 해소와 지역 균형 발전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부처 이전과 함께 공공기관 지방 이전, 분권화, 지역 자율적 경제 기반 구축, 지역 특화 산업 육성 및 교육·문화

여건 개선 등을 유기적·통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이 같은 새로운 과제는 국회의 신행정수도 후속 대책 해법이 끝이 아닌 무한한 시련과 도전을 위한 시작에 불과함을 시사한다. 이제 국민 모두의 관심과 지혜를 모아 행정 중심 복합도시의 성공과 함께 국가 발전의 틀을 혁신하는 데 진력했으면 한다.

[김용웅, 한국일보 2005년 2월 25일자]

행정중심도시와 전문가 집단의 논리

국회 신행정수도 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달 23일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이후 엄청난 국민적 혼란과 국론분열을 일으켜 온 행정수도 후속대책 특별법 제정에 합의했다.

이번 국회의 행정수도 후속대책 결정의 큰 의의는 국회가 그동안 극단적 대립을 보인 국가적 이슈에 대해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타협안을 제시해 국론 분열의 확산을 막았다는 점이다.

이제 공주·연기지역에 행정중심의 복합도시가 건설돼 서울과 함께 국가 중추 행정기능을 분담하게 됐다. 비록 행정수도의 재추진에 비해서는 이전 부처의 규모가 대폭 축소되기는 했으나 이번 국회의 결정은 행정수도 건설의 정책적 정당성과 정책 효과를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경제와 산업 및 민생과 관련된 부처들이 망라되었고 국무총리의 국정조정 기능까지 포함되어 있어 지역과 국가 균형발전에도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제 앞으로의 과제는 그동안 찬반의 대립과 감정적 앙금에서 벗

어나 모처럼 찾아온 상생의 기회를 살려나가는 데 모든 지혜를 모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국회의 결정은 소중하고 값진 것이기는 하나 해법의 내용은 전문가 집단의 해법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최근 경제사회 관련 7개 학회 회원을 중심으로 그동안 논의되던 5개의 행정수도 후속대안에 대해 국토 균형발전, 국가 경쟁력 등 5개 분야의 12개 항목에 걸쳐 종합적인 조사가 이뤄졌다.

전문가들의 의견은 국회가 수도권 과밀 해소나 지역 균형발전 그리고 국가의 미래발전과 경쟁력을 위해서라면 대통령을 제외한 전 행정부처의 이전을 의미하는 행정특별시의 대안을 선택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조사 결과를 보면 국가정책과 발전효과 차원에서 행정수도 재추진과 행정특별시 대안의 값은 각각 평균 125.3 및 80.3인데 비해 행정중심도시와 교육과학도시는 각각 36.2와 -35.7로 나타나 국회의 이번 결정은 국토 균형발전과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는 매우 미흡하였음을 보여 주고 있다.

특히 일부 행정부처의 이전이 그동안 누적된 서울 중심문화의 완화와 지방 자율의식 고양에 기여할 것으로 보는 전문가는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새로운 행정중심도시의 자족성 확보에 있어서도 전문가 집

단에서는 행정수도 재추진과 행정특별시 대안의 효과는 각각 119 및 84로 높게 부여한 데 비해 부처 이전이 대폭 축소된 행정중심도시와 교육과학연구도시의 평균값은 각각 25와 -2점을 부여함으로써 국회의 해법과는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자족성 확보가 부족한 대안을 특별한 대책도 없이 추진하는 경우, 중추 행정도시로서의 기능이 제약되며 행정도시 건설로 얻고자 했던 정책목표가 실현되기 어렵다.

다만 국회의 대안에는 복합도시 개념이 포함되어 대학과 기업 등 다양한 기능의 도입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것은 민간 부문의 자율적 선택사항이기에 그 실현이 보장되지 않는다.

이제부터라도 자족성 확보를 위한 확고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전문가 집단은 여러 가지 현실적인 제약을 고려해 청와대와 외교, 안보 부처를 제외한 전 행정부처가 이전하는 대안을 선호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야 새로운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제 기능을 발휘하고 국가발전에 기여한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국회의 해법이 전문가 집단의 의견과 일부 차이는 있지만 전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다. 공통된 견해는 행정수도 건설의 시대적 당위성을 인정하고 이 문제를 보다 합리적으로 접근하자는 데 있다. 앞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에 전문가들의 의견이 보다 적극적으로 존중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김용웅, 충청투데이 2005년 3월 2일자]

새로운 농촌 살리기

우리나라 농촌은 산업화와 경제성장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쇠퇴하여 왔다. 최근에는 농산물시장 개방과 농가지원 시책의 실패 등으로 인하여 쇠퇴화가 심화됐다. 농촌경제의 침체는 농축어업의 상대적 지위 약화라는 차원을 넘어 전 국민의 15% 정도에 달하는 농촌 지역 주민의 생존과 전통적인 국민의 삶의 터전으로서 정주기반마저 위협하고 있다.

농촌은 그동안 산업화와 경제성장을 위해 필요한 인력과 자원을 제공하는 배후지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 오늘날의 우리나라의 경이로운 경제발전과 고속성장의 신화는 농촌의 희생이 뒷받침 됐다. 농촌은 상대적 낙후지역으로 전락하였고, 이제는 자활과 재생의 잠재력마저 잃어가고 있다. 그러나 농촌은 아직까지도 고유한 역사와 문화적 전통, 자연환경자원을 보유하는 대체가 불가능한 국토공간이며, 산업발전과 도시 활력의 원천임을 명심해야 한다. 앞으로 농촌의 문화와 환경적 가치가 점차 커지는 시대이다. 농촌의 황폐화를 방치하면 경제성장과 도시발전, 그리고 삶의 질을 기약하기 어렵다.

다행스러운 것은 농촌 지역사회가 농축어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정주공간으로서 농촌의 활성화를 위해 창의적인 자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다양한 친환경적 영농기법을 동원하여 부가가치가 높은 기능성을 갖춘 유기농산물을 생산하고, 생명공학이나 농업기술 혁신을 통하여 농축산물을 브랜드화 하여 우리 농축산물의 경쟁력을 제고 하고 있다. 한편에서는 농촌의 문화적 전통과 자연생태와 경관자원을 활용하여 다양한 체험형 농촌관광을 활성화하여 농가 소득을 높이고 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농촌 지역주민의 친환경 농산물 생산 및 농촌관광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고, 앞으로도 이를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 같은 지역주민의 노력과 정부 지원활동은 장기적인 비전과 전략이 바탕이 되지 못하여 대부분 단편적이고, 산발적으로 추진되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우리의 농촌이 차별화된 경쟁력을 지니고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자연생태환경 및 경관자원, 영농생산 기반 및 주거와 생활환경이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친환경적인 농촌 발전모델이 만들어져야 한다. 이미 상당수의 선진국에서는 매우 간편한 발효기술을 통하여 분뇨를 비료화하여 토양을 회복하고, 비료와 농약사용을 최소화하여 토양오염과 하천수질을 개선하여 생태를 복원하고, 여기에 친환경적 주거환경과 문화를 접목시켜 농촌을 새로운 지속가능한 정주모델로 만들어 가고 있다.

그동안 농촌발전시책의 실패는 개별적 농촌의 특수한 실태와 주민의 열망을 간과한 채 공급자 위주의 하향적이고 획일적인 접근방

식을 채택한 데 큰 원인이 있다. 이 같은 실패는 더 이상 반복돼서는 안 된다. 친환경적 농촌발전모형의 개발과 추진은 희망지역에 한하여 시범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시범사업은 시행착오를 줄이고, 다른 지역의 자율적인 참여와 협력을 유도하는 장점이 있다. 시범지역의 성공과 실패사례는 농촌 살리기를 위한 새로운 모형을 만들어가는 귀중한 학습 경험과 전파의 증거로 활용될 수 있다. 이제부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발전의 주도자와 통제자의 입장에서 벗어나 농촌지역 주민들의 자율적인 선도와 참여를 지원하는 후견인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농촌지역의 자율 역량의 강화를 위해서는 지역의 리더십 육성이 시급하다.

충청남도는 최근 첨단기술과 신산업의 새로운 거점이자 수출의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농축어업이 전국 평균의 3-4 배에 달하는 농업 중심지이기도 하다. 충남이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새로운 중심이 되기 위해서는 신산업의 발전뿐만 아니라 새로운 농촌발전 모델을 만드는데도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중앙과 지방정부는 물론 충남지역의 시민단체, 언론, 금융 및 대학 등 관·민 모두의 지혜와 역량의 결집이 필요할 때이다.

[김용웅, 대전일보 2005년 3월 8일자]

행정수도, 상생(相生)의 기뢰이다

감정의 양금 털고 균형발전 추구해야

국회는 지난 2일 '행정수도 후속대책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이제 연기·공주지역에는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이 가능하게 됐다. 새로운 행정중심 복합도시로 이전하는 정부기관은 대부분 경제와 산업 및 민생과 관련된 부처와 기관이 망라되었고 국정조정기능을 수행하는 국무총리실까지 포함되어 있어 국가와 지역발전에도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게 됐다. 이제 앞으로의 과제는 그동안 찬반의 대립과 감정적 양금에서 벗어나 모처럼 찾아 온 상생의 기회를 살려 나가는 것이다.

연기·공주지역에 건설될 행정중심 복합도시는 수도권 과밀해소와 지역균형발전은 물론 국가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건설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새로운 도시는 기존의 중앙집권적 행정중심지와는 달리 특화된 국가기능을 함께 갖추어야 한다.

첫째, 행정중심 복합도시를 새로운 국가적 혁신거점도시가 되어

야 한다. 여기에는 재정경제부를 비롯하여 과학기술부, 정보통신부, 산업자원부, 교육인적자원부 등이 망라되어 있고, 인접의 대덕연구단지에는 과학기술연구기관이 집중되어 있다. 이들을 결합시켜 기술혁신의 시너지 효과가 높은 새로운 혁신거점을 만드는 데 치중해야 한다. 이를 위해 기술혁신과 관계있는 국내외 연구기관, 교육기관, 금융·전문 서비스업, 기업본사 등을 집중 유치하여 복합기능의 자족도시 조성에 치중해야 한다. 행정중심 복합도시가 국가적 혁신거점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세계적 수준의 국제과학, 기술 연구기관 및 기업의 유치방안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

둘째, 행정중심의 복합도시는 행정중추기능의 분담과 국정조정의 교류시가 돼야 한다. 행정중추기능의 효율적 분담체제가 확립되어야 행정중심 복합도시의 수도권의 과밀해소는 물론 지방의 분권화와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국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수도권과 행정중심 복합도시 간 실시간 업무협업의 및 조정이 가능한 무선화상 송수신 등 행정정보통신 시스템과 전용 헬리포트 등이 갖추어져야 한다. 행정기능의 분담과 국토구조의 재조정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정부부처의 이전과 함께 가족의 주거지도 함께 이전하여 새로운 행정문화와 커뮤니티를 형성해야 한다. 행정중심 복합도시의 국정조정과 지역 간 교류기능을 함께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행정도시에는 지역 간 교류와 협력을 위한 행사와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컨벤션 센터, 국제적 명성을 갖춘 테마 파크 등 다양한 교류 협력시설을 적극 유치해야 한다.

셋째, 행정중심 복합도시의 21세기 시대적 가치를 반영한 미래형

시범도시가 돼야 한다. 우리나라 도시는 대부분 제한된 자원 속에서 필요에 의해 즉흥적으로 건설되어 왔다. 새로운 도시는 미래도시 모습을 구현하여 국내 도시혁신을 선도해야 한다. 환경과 자원의 남용과 훼손을 막고,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그리고 예술과 문화적 활력이 넘치는 도시 환경을 창출해야 한다. 특히 IT강국인 한국의 모습을 세계에 보일 수 있는 유비 쿼터스 모델 도시로 개발하여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의 제정은 시작에 불과하다. 물리적 도시건설과 정부부처의 이전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이제부터 정부는 새로운 도시가 특화된 경쟁력과 자족성을 지니고 국가균형발전과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구체적 전략을 국민에게 제시해야 한다. 아직도 국가균형발전의 실현이라는 정책목표 실현에 의구심을 버리지 못하는 국민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주지해야 한다.

[김용웅, 조선일보 2005년 3월 11일자]

과천 청사야말로 위헌

국론 분열·갈등 지속 우려 왜곡·억지 주장 그만둬야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이후 극심한 국론분열을 초래한 행정수도 건설논란이 행정중심복합도시 특별법의 제정으로 일단락을 맺게 되었다. 국회의 특별법 제정은 여야정치권의 타협과 합의정신을 바탕으로 국론분열의 확산을 막고 상생발전의 계기를 마련했다는 차원에서 환영할만하다. 그러나 행정중심도시 특별법은 대립하는 정치·사회적 이해와 주장에 대한 타협의 산물이기 때문에 근본적 문제해결의 차선책일 수밖에 없다.

그동안 행정수도 건설을 찬성 또는 반대 해온 집단 모두가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아직도 일부에서는 행정중심도시 특별법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으나 민주주의 사회에서 합의된 법절차에 의하여 마련한 타협안마저 거부하게 되면 국론분열과 갈등만을 지속하는 악순환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행정중심도시 특별법안에 대한 일부 비판론자들은 논리와 객관적인 증거도 없는 일방적인

비판논리를 전파하여 국민여론을 호도하고 있어 우리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특별법 비판론자들은 크게 세 가지 차원에서 행정중심도시 건설을 반대하고 있다.

첫째, 특별법에 의한 행정중심도시 건설도 위헌이라는 것이다. 이 같은 주장이 설득력을 지니기 위해서는 경제와 민생관련 부처의 이전이 수도의 본질은 훼손한 것인지, 그리고 행정중심도시 건설은 수도의 분할인지 여부가 전제돼야 한다. 그런데 현재는 판결문에서 수도란 입법부, 대통령의 소재지와 정부기능을 수행하는 국가기관들의 활동이 이루어지는 곳으로 정의하면서 대통령제 통치구조하에서 대통령은 국가원수이고 행정부의 수반임으로 대통령을 제외한 부처의 소재지는 수도의 결정적 요소가 아님을 분명히 했다. 이는 행정중심도시 건설은 기본 골격인 입법부와 대통령의 소재지라는 수도의 기본 골격을 훼손하지 않았으며, 입법부와 대통령을 분리하지 않는 한 수도 분할이 될 수 없다. 이들의 억지논리 대로라면 과천종합청사야 말로 명백한 위헌이며 서울의 수도 정체성을 훼손한 수도 분할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행정중심도시는 행정과 국정운영의 비효율과 국력낭비를 가져온다는 주장이다. 이 문제는 본질적으로 행정중심도시 건설에 따른 국정운영의 효율성과 국가발전 및 경쟁력 강화 효과와의 교량 차원에서 판단되어야 한다. 정부기능의 국토중심부 입지는 지방과의 조율과 협의 등에 있어 엄청난 시간과 비용의 절감 효과를 가져올 수 있고, 행정중심도시 건설로 인한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토균형발전 효과는 도시건설비용을 크게 상회할 수 있음을 함께 고려해

야 한다. 이와 함께 행정의 비효율과 국력낭비는 향후 정부혁신, 지방분권, 원격 행정 협의시스템 구축 등으로 절감이 가능하다. 국정 운영의 비효율과 국력낭비 때문에 행정중심도시 건설을 반대한다는 것은 정책효과는 생각하지 못하고, 향후 정부역할과 행정효율화 등의 가능성을 의도적으로 도외시한 왜곡된 주장에 불과하다.

마지막으로 행정중심도시 특별법은 지역이기주의와 결합된 정치적 야합의 결과이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주장이 설득력을 지니기 위해서는 행정중심도시 건설의 정책목표자체가 정당성이 없고, 국가발전의 국가백년대계를 세우는 데 기여할 수 없어야 한다. 행정중심도시 건설은 일부 지역발전을 위한 것이 아니고 고질적인 수도권 과밀을 해소하고, 지역의 자율적 발전을 촉진하는 국가균형발전을 달성하고, 더 나아가서는 지역 간 상생발전을 통하여 세계화시대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반대론자들은 정치적 야합 등 막연한 비판으로 여론을 호도할 것이 아니라 행정중심도시 건설과 지방분권, 지역균형발전의 '패키지' 정책이 효과가 없음을 논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논리와 객관적 근거가 없는 감정적인 비판은 국민적 갈등을 해소하고 국가발전에 도움이 될 수 없음을 깨달았으면 한다. 그러나 행정중심도시 건설과 관련하여 과천시 및 일부 수도권지역 주민들의 불만과 우려에 대하여는 역지사지의 심정으로 진지한 검토와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국가적 정책 수행과정에서 특정지역의 주민에 대한 부당한 희생과 고통을 주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행정중심도시 건설에 대하여는 국민 각자 다양한 견해와 주장이 있을 수 있다. 그동안 다양한 정치, 사회 및 지역적 이해와 주장의 타협점을 찾기 위해 극심한 국론분열과 국민적 갈등에 따른 엄청난 사회비용을 부담했다. 지금부터는 그동안 대립과 갈등의 양극에서 벗어나 어렵게 마련한 행정중심복합도시 특별법안을 대승적 차원에서 받아 들여 국가균형발전과 선진국 진입을 위한 국가경쟁력을 한 단계 높이는 역사적 과업에 모두가 참여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한다.

[김용웅, 중도일보 2005년 3월 16일자]

‘행정도시특별법’ 갈등 끝나야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이 여야 정치권 합의로 국회를 통과해 공포됐다. 행정도시특별법의 제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이후 심화해 온 소모적 논쟁과 국론분열의 확산을 막고 상생발전의 계기를 마련했다는 차원에서 다행스럽다.

민주주의의 대원칙은 자기 주장의 상대성을 인정하고 다양한 의견과 이해를 수용하여 차선책을 마련하는 데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행정도시특별법 제정에 대한 정치권 안팎의 불협화음이 그치지 않고 있다. 그동안 법치를 누구보다 강조해온 집단이나 지도자들이 정당한 입법절차를 거친 법률안을 부인하고, 집단적 행동마저 시도하는 이율배반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 행정도시특별법이 위헌이라는 주장이 좋은 예이다. 행정도시특별법에 대한 위헌주장의 핵심은 수도분할과 위헌론으로 집약된다. 국무총리와 경제부처 등 12부, 4처, 2청의 이전으로 건설되는 행정도시는 수도분할이고, 수도분할은 당연히 개헌 절차를 거쳐야 하는 사안이 행정도시특별법은 위헌이라는 것이다. 행정도시특별법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먼저 현재의 실행정수도건설특별법 위헌결정 취지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현재의 결정 취지는 크게 세 가지다.

첫째, 신행정수도 건설은 수도의 정체성을 변화시키는 수도분할 내지는 수도이전에 해당한다. 둘째, 수도의 정체성을 변화시키는 수도분할이나 수도이전은 헌법적 사항이므로 헌법 개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끝으로,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은 개헌 절차를 따르지 않아 위헌이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행정중심도시의 위헌여부에 대한 핵심은 '수도분할 내지는 수도이전'의 쟁점에 있다.

그러면 과연 행정도시 건설은 수도분할인가?

현재는 '행정수도건설특별법 위헌결정문'에서 수도의 본질적 구성요소에 대해 '입법부와 대통령의 소재지와 정부기능을 수행하는 국가기관들의 활동이 이루어지는 곳'으로 정의하면서 '대통령제 통치구조 아래서는 대통령은 국가원수일 뿐 아니라 행정부의 수반이므로 정부 부처의 소재지는 수도를 결정하는 필수적 요소가 아니다'고 적시했다. 이 같은 현재의 취지를 살펴볼 때 행정도시 건설이 위헌 결정 취지를 위반했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

대통령중심의 정치체제에서는 수도의 본질적 구성요소는 입법부와 대통령의 소재지이므로 입법부와 대통령 소재지는 물론 외교, 국방, 통일 및 통치 관련 부처까지 서울에 존치하고, 나머지 부처만 지방으로 이전하는 행정도시 건설은 수도분할에 해당되지 않는다. 행정도시 건설이 수도분할이라면 11개 중앙행정기관이 위치한 과천시 어떻게 설명될 수 있는가? 위헌론자의 논리가 옳다면, 과천시는 서울의 수도 정체성을 훼손한 수도분할에 해당되며, 헌법 개정

없이 이루어진 위헌적 정책결정의 산물이 된다. 과천시가 수도분할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도시 역시 수도분할에 해당될 수 없고, 따라서 위헌이 될 수도 없다. 공론의 장(場)인 언론도 위헌론자의 의견 못지않게 합헌론자의 주장도 균형있게 다뤄야 한다. 행정도시 특별법의 위헌 여부에 대한 판단은 어디까지나 국민과 독자들의 몫인 것이다.

이제 2년 이상을 지루하게 끌어온 소모적 논쟁과 국민적 갈등은 끝나야 한다. 행정도시 건설이 산업화 과정에서 왜곡된 국토의 불균형 구조를 개편하여, 국가경쟁력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음을 굳이 외면하지 말았으면 한다. 행정도시 건설을 둘러싸고 그동안 상호 불신과 갈등 확산에 쏟아 온 부정적인 정열과 힘이 미래 국가 발전의 긍정적인 에너지로 바뀌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김용웅, 문화일보 2005년 3월 23일자]

호남고속철 예법은?

호남고속철도 분기역 결정을 앞두고 충청권 3개 시·도간 분기역 유치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충청북도, 대전광역시, 충청남도의 시민단체와 주민들은 저마다 유리한 논리와 근거를 제시하면서 자기 지역이 최적의 후보지임을 내세우고 있다.

해당 지역이 앞 다투어 유치 경쟁을 벌이는 것은 국가 간선교통망이 교차되는 고속철도 분기역의 중요성을 볼 때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이는 분기역사 주변은 물론 주변지역 전반의 발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특정 사안을 놓고 지역사회의 참여와 지역 간 경쟁은 지방자치시대의 지역 활력의 원천이라고 볼 수 있다.

호남고속전철 분기역 유치 경쟁에 대한 일부 우려에도 불구하고, 지역 간 자유로운 경쟁은 주민들의 지역에 대한 사랑과 열망의 표

현이라는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지역 발전에 영향을 주는 국가사업과 투자 유치를 위한 지역 간 경쟁이 항상 부정적인 면만 있는 것이 아니다. 정부사업과 투자에 대한 시민참여와 정보공유 확대로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대안선택을 가능하게 하는 장점도 있다.

그러나 호남고속철도 분기역 유치 경쟁이 지역발전에 있어 시민 참여를 확대하고, 국가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경쟁의 논리와 방법에 있어서도 상호 합의할 수 있는 원칙과 기준의 마련이 필요하다.

첫째, 호남고속철도 분기역의 최적 입지 주장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합리적인 기준과 원칙에 부합되도록 해야 한다. 지역발전을 위한 지역 간 경쟁과 주장은 국가적 이익과 합치될 때만이 객관적인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호남고속철도 건설은 광양항 및 서남 해양권 산업지대 개발과 호남지역 주민의 접근성을 개선하고, 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 국가교통망 체계를 고속화해 국토 전반의 효율적 이용과 국가 경쟁력을 높이려는 데 목적이 있다.

통일 후에는 통일국토의 간선교통망 체계를 구축하고, 세계화에 대비해서는 TCR 및 TSR 등 중국과 러시아의 대륙철도와 연계까지도 염두에 둔 국가 백년대계의 초석을 쌓는 과업이다.

따라서 분기역의 입지는 호남고속철도의 건설 목적과 국가발전 차원에서 결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무엇이 판단기준과 근거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자기에게 유리한 논리와 근거만을 주장하면 소모적인 논쟁과 갈등을 해소하기 어렵다.

둘째, 지역 간 최적지 논쟁은 객관적인 자료와 근거를 활용해야 한다. 자기논리를 정당화하기 위한 주관적 자료생산 경쟁은 중단되어야 한다. 주관적인 논리의 전파는 여론을 호도하고 지역 갈등을 증폭하는 원인이 된다. 호남고속철도 노선과 분기역 입지에 대해서는 전문 연구기관이 3차례에 걸쳐 본격적인 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

셋째, 호남고속전철 분기역 입지 경쟁에서 정치적 논리와 개입을 배제해야 한다. 분기역 입지는 고속철도 노선과 직결된 매우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지식이 요구되는 결정사항이다. 이 같은 전문적인 결정사항을 지역주민의 여론이나 정치권의 논리에만 맡겨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호남고속철도 분기역 유치경쟁이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는 상호 대결적인 소모적인 논쟁을 지양하고, 전문가 집단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한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다양한 의견과 주장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성숙한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는 자기주장의 상대성을 인정하고 자기와 다른 주장과 의견을 존중하면서 공동이익을 모색하는 합리적인 타협정신이 발휘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분기역 유치에 위한 지역 간 경쟁이 호남고속철도 건설을 지연시키는 빌미가 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단기적인 경제논리로만 이해하려는 일부 집단에서 대규모 투자가 요구되는 호남고속철도 건설의 지연 논리를 전파하고 있음을 주지해야 한다.

이와 함께 분기역 유치경쟁이 그동안 전국적인 모범사례인 충청권 3개 시·도간 협력과 상생의 공조문화를 절대로 훼손해서는 안 된다. 자칫 분기역 유치 경쟁이 소탐대실의 결과를 가져오지 않도록 충청권의 지도역량이 발휘되는 것이 무엇보다 절실히 요구된다.

[김용웅, 충청투데이 2005년 3월 30일자]

농심(農心)이 바로 서야 사회가 바로 선다.

농심은 씨 뿌리고 가꾸고 수확하는 농부의 마음이다. 농부는 농사를 지으면서 햇빛과 비와 바람의 현상을 자연의 법칙으로 받아들여 왔다. 우리의 먹 거리를 제공하는 농사는 하늘과 땅과 사람이 일구어내는 합작품이다. 하늘은 햇빛을, 땅은 물과 영양소를, 사람은 자라도록 돌보아준다.

농심이 우리에게 준 정신적인 흐름은 사회를 지탱해 온 보이지 않는 힘이 되었다. 이것은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자연의 섭리에서 출발한다. 어둠 없는 광명이 없고, 죽음 없는 생명이 없듯이, 원인 없는 결과가 없다는 말이다. 하나의 지향점을 찾기 위해서는 그가 요구하는 피와 땀과 눈물을 아끼지 않는다. 때에 맞는 씨뿌리기와 김매기, 물 관리와 거름주기, 어느 것 하나 소홀하지 않는다.

농심은 시련을 극복하는데 단련되어 있다.

우순풍조(雨順風調)만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흔들리지 않

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었나니 /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도종환의 “흔들리며 피는 꽃”)

작물은 비바람과 서리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아픔을 감내하면서 자란다. 자연에 젖고 흔들렸다 하여 결코 좌절하지 않는다. 상처를 입었으면 입은 데로 다시 일어 설 뿐이지,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농심은 남을 탓하지 않는다.

결과가 기대에 이르지 못했을 때는 종자 선택에서부터 마지막 수확에 이르기까지를 넘나들며 그 문제를 찾는다. 남을 탓하기 보다는 내년 농사의 대안 마련에 정성을 쏟는다. “자손은 조상을 원망하고 후진은 선배를 원망하고, 이 사회의 불행의 원인을 모두 다 자기 이외에 돌리려 하니, 도대체 당신들은 무엇하고 남만 원망하시오? 우리가 이렇게 독립이 못되고 어려운 지경에 처하게 것은 다 나 때문이로구나! 하고 가슴을 두드리며 아프게 누우치지는 않고, 이 놈이 죽일 놈이오, 저 놈이 죽일 놈이오. 하고 가만히 앉아서 남의 탓만 하고 계시오. 왜 내가 죽일 놈이란 걸 깨닫지 못하시오.” 한말의 독립운동가 안창호 선생이 국민에게 호소한 글이다. 자신의 불행의 탓을 남에게 돌리지 말고 자신에게서 찾으라는 것이다. 이것이 농사 짓는 사람의 마음이다.

농심은 타인을 배려하는데 주저하지 않는다.

우리 사회는 나 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사는 유기체이다. 따라서 세상은 똑똑한 사람보다 겸손한 사람, 나 혼자보다 남을 배려하는 사람을 원하고 있다. 잘 여문 열매일수록 머리를 숙여 겸손해 한다. 상대방을 배려하는 기본 행동이다.

농심은 실천 철학이다.

이것은 마음이나 말로서 만이 아니라 실천이 앞선다. 마음만 가지고는 농사가 불가능하다. 실천이 따르지 않는 지식은 무용지물(無用之物)이다.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만 하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달라지는 것이 없다. 농사 짓는 새로운 지식을 이해하였으면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영농 지혜다.

인과의 법칙을 받아들이고 시련을 극복할 줄 알며 남을 탓하지 않고 삶에서의 배려가 무엇인지 알며 실천하는 마음. 이것이 농심이다. 우리의 농경문화를 이끌어 온 정신적 원동력은 바로 이것이다. 농심을 통하여 자연과 친해졌고 땀이 맺어준 알찬 열매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었다.

농심은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이 대우받는 사회를 만든다. 나쁜 씨앗을 심고 좋은 열매를, 정성을 기울이지 않고 많은 소출을 기다리는 요행을 바라지 않는다. 긍정적 순리적 사고에서 출발하여 일의 차례를 기다리며 자기가 뿌린 것 외에는 기대하지 않는 마음, 땀 속에서 보람을 찾으려 하는 마음이 그것이다.

농심을 바로 세워나가는 길은 교육의 몫이다. 세계적인 물리학자 알버트 아인슈타인은 ‘스스로 생각하고 독립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드는 데 교육의 목적이 있다.’고 하였다. ‘좋은 생각을 실천하는 사람을 만든다.’ 는 의미다.

농심은 가정교육, 사회교육으로 뿌리내려야 한다.

사람의 주인은 마음이다. 마음을 잘 못 먹으면 말도 행동도 그대로 따라가기 마련이다. 매사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좋은 일이 생기기 마련이지만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좋지 않는 일이 생기기 마련이다. 마음이 없으면 보아도 보이지 않고, 들어도 들리지 않는다. ‘할 수 있다’ 고 생각하면 진짜로 할 수 있다. ‘어찌할까? 어찌할까?’ 하고 깊이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나도 어찌할 수 없다’고 공자는 말했다. 생각은 행동의 씨앗이다. 깊이 생각할수록 그 씨앗은 여물기 마련이다.

올해로 개원 10주년을 맞이하는 충남발전연구원은 ‘충남발전을 위한 최선의 생각을 찾아내는 두뇌 집단’이다. 그 생각을 농심과 더불어 찾으면 어떨까? 여기에서 찾은 씨앗들이 뿌리를 내리고 숲을 이루어 알차게 열매 맺기를 기대해 본다.

우리의 생명산업을 떠받치는 정신적 지주가 되어왔던 농심! 그 농심이 변화의 거센 바람 속에 흔들리고 있다. 홍수처럼 밀려드는 외국산 농산물, 개발이라는 미명하에 토양과 지하수가 오염되고 농지가 잠식(蠶食)당하는 안타까움, 뿌리지도 않고 낫 들고 덤비는 참담한 현실, 애태우는 농촌 인심을 위로 할 길은 무엇일까? 사람들

은 믿는다. 5천년을 뿌리 내려온 농심이 있는 한, 농촌은 시련을 딛고 의연히 일어설 것이라고...

농심은 천심(天心)이다. 삶의 정신 기조를 농심에 두자. 그래야 농촌이 바로서고 사회가 바로 선다.

[홍용표, 열린총남 2005년 4월호 통권30호]

지역혁신은 우리의 과제

우리는 지식이 산업발전의 핵심이 되고 사회·문화적 활동의 기초가 되는 지식기반사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세계화, 정보화, 지방화라는 역사적 변화의 물결 속에서 산학연관의 네트워크를 통한 지역혁신체제의 구축과 확산이 매우 중요한 국가적 과제로 대두되면서, 세계 각국은 지역혁신클러스터의 조성을 국가 발전의 최우선 대안으로 삼고 막대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실리콘밸리를 비롯하여, 스웨덴의 시스타, 핀란드의 울루, 중국의 중관촌 등은 그 대표적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의 지방은 '내생적 발전전략'을 통한 자립형 지방화 보다는 중앙정부에 대한 의존형 지방화에 안주하여 왔습니다. 그 결과 인구와 자원의 과도한 수도권 집중, 행정적 권한과 중앙 공공기관의 집중문제가 발생하였고, 이러한 문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간 격차 심화 및 비수도권지역의 정체를 지속시켜 국민적 통합성과 국가경쟁력 제고의 가장 큰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내외적 환경변화 속에서 참여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지역혁신체제 구축을 통해 이를 달성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역혁신체제란 지방정부, 대학, 기업, NGO, 언론 및 연구소 등 지역 내 혁신주체들이 지역의 연구개발, 생산과정이나 행정제도의 개선, 문화 활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역동적으로 상호협력하고, 공동학습을 통해 혁신을 창출하고,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유기적 체계를 의미합니다.

참여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가균형발전과 지역혁신체제의 구축을 통한 자립형 지역발전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모든 역량을 결집하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대학, 기업, 지자체, 지역시민사회 등 지역 내의 다양한 혁신주체들이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공동학습과 혁신창출을 도모해 가야 합니다. 이러한 네트워크로서 구성된 것이 지역혁신협의회입니다.

지역혁신협의회는 다양한 지역혁신체계를 전체적으로 조율하는 지역전체 수준의 대표체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역혁신협의회에서는 지역발전 비전 및 전략의 수립, 혁신관련 추진 과제의 선정, 지역발전사업에 대한 우선순위 검토 등 지역단위에서의 균형발전을 위한 조정역할을 하는 한편, 지역 내 혁신 주체간 네트워킹 및 중재자 역할, 또한 중앙과 지방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가교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혁신협의회의 설립은 시민사회와 정부가 함께 정책의 방향을 토의하고, 결정하고, 추진하는 새로운 행정·정치 시스템의 구축을 의미하며, 참여정부 ‘국가균형발전’ 이념의 근간을 이루는 지역 거버넌스 체제의 구축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혁신협의회는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상호 협력과 신뢰를 바탕으로 지역에서 정치, 경제, 문화를 공동으로 생산하고 조정하는 구심점의 역할을 할 것입니다. 또한 경제 및 행정주체, 대학, 시민사회 간 상호작용의 촉진을 위한 다양한 기회와 통로를 마련하고, 지역사회의 협력 분위기를 조성하여 혁신체제의 성패를 좌우하는 사회적 자본의 확충에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지역의 모든 주체가 관심과 기대를 모을 때, 우리 충남지역은 새로운 동북아시대를 이끌어 갈 중심으로 우뚝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최석원, 열린충남 2005년 4월호 통권30호]

행정중심복합도시 忠淸人 모두가 일궈냈다.

우여곡절 끝에 지난 2일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 행정중심도시건설특별법」이 마지막 관문을 통과했다. 막판 국회통과에 대한 여러 변수가 있어 가슴이 조마조마한 것을 비단 나뿐 만이 아니었으리라. 이 법이 통과했다는 소식을 접한 나는 지난해 10월21일이 파노라마처럼 떠올랐다. 이날은 상상하기도 싫은 「헌법재판소, 특별법 위헌 결정」이라는, 그야말로 충청인의 역장이 무너지는 참담한 순간이었다. 그날부터 정확히 1백31일이 지난 2일, 우리는 신행정수도보다는 다소 미약하지만 신행정도시라는 값진 결실을 얻어냈다. 아니 쟁취했다.

대한민국의 미래 발전 열어 놔

이제 충청도의 한복판 연기·공주지역에는 행정수도에 버금가는 행정중심의 복합도시가 건설될 것이다. 일부 수도권에서는 아직도 현실을 부정하는 여진(餘震)이 있지만 큰 강물속의 한 포말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 충청인들 중 일부에서도 불만 속에 걱정하는 모습이 감지된다. 「기대한 수준에 미치지 못하였다」고 자조(自嘲)하기

도 한다. 그러나 우리는 최선을 다했다. 결코 긴 시간은 아니었지만 참으로 여러 일을 해냈다. 배신감을 가슴으로 삭이면서 다시 시작했다. 돌아오지 않는 메아리를 알면서 산에 소리도 질러봤다. 나이 어린 소년으로부터 80이 넘는 할머니까지 우리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봤다. 우리가 이렇게 하면서 제일 힘든 것은 「충청권만 잘 살자는 욕심」으로만 비취졌을 때이다. 그럴 때는 조용히 눈물을 가슴에 숨기고 다시금 “우리가 하는 일이 결코 충청인만 잘 먹고 잘 살자는 욕심이 아니다”라고 되새겼다.

이번 행정중심도시가 충청권에 유치한 것은 크게 세 가지의 의미가 있다. 첫째는 대한민국 미래의 발전을 열어줬다는 확신이다. 이 사업의 정책적 목표는 수도권 과밀해소와 지역균형발전, 그리고 국가경쟁력 강화이다. 수도권의 과밀과 집중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40여년간 무려 5백여 개의 각종 시책을 펴왔지만 ‘백약(百藥)이 무효(無效)’였다. 이것을 풀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모두 다 초심으로 돌아가 이 정책목표의 실현에 몰두해야 한다. 그 역할의 선두는 더 이상 중앙권이 아닌 우리 충청권이 쥐고 있다. 책임과 의무가 그 무엇보다 필요할 때이다. 모든 문제는 지금부터이다.

두 번째는 장기적으로 신행정수도로의 발전을 위한 주춧돌을 놓았다는 것이다. 한번 우리 역사를 돌이켜 보자. 신라가 경주에서 1천년을, 고려가 개성에서 417년, 조선이 서울에서 518년 동안 영화를 누렸다. 수도권이 그토록 반대했던 것을 충분히 이해 할 수 있다. 그들은 지난 세월 누렸던 기득권과 우월감, 자부심을 송두리째 빼앗길까봐 노심초사(勞心焦思)했던 것이다. 서두르지 말고 하나하

나씩 풀어 나갈 때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신행정수도라는 소기의 목적이 실현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신 충청시대」를 활짝 열었다는 것이다. 그동안 충청도 하면 느낌보 철학이었다. 좋게 말하면 청풍명월(淸風明月)을 즐기는 양반의 모습이지만, 반대로 말하면 화합할 줄 모르고 시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으로도 보여질 수도 있다. 이번 일을 하면서 충청인은 느낌보도 아니요, 멍청도가 아니라는 것을 똑똑히 보여줬다.

‘위대한 충청시대’ 함께 가자

우리 충청도는 새로운 변화와 도약의 기회를 맞고 있다. 바야흐로 ‘대한민국의 중심, 충청의 시대’가 성큼 다가온 것이다. 이젠 지역분권과 지역균형개발이라는 화두(話頭) 앞에 충청인들의 역할과 능력이 심판대에 올랐다. 신행정수도 추진은 거역할 수 없는 역사적 소명(召命)이요,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우리 충청인은 나라가 어려울 때 마다 구국대열의 선봉에 섰다. 느낌보의 미학과 양반의 체면을 버리고 함께 일어서자. 우리 충청인들이 뚝뚝 뭉쳐 희망찬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가자. 나라의 미래와 충청의 발전을 우리가 책임진다는 의식이 지금 그 무엇보다도 절실히 필요할 때이다. 우리 모두 ‘위대한 충청의 시대’를 함께 실현하자.

[심대평, 열린충남 2005년 4월호 통권30호]

기업도시의 성공조건

지역 균형발전과 기업 친화적 토지 공급을 위한 기업도시 건설이 가시화되고 있다.

충남 태안을 비롯해 전남 무안, 영암·해남, 전북 무주, 충북 충주, 강원 원주, 경남 사천, 경남 하동·전남 광양 등 8곳이 기업도시 시범사업을 신청했다. 이 중에서 지역 균형발전 효과와 도시개발의 사업성이 높은 곳을 선정해 기업도시 건설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업도시(company town)란 원래 주민의 취업이나 소득 등 경제 기반이 특정기업에 의존하는 도시를 의미한다. 기업도시는 특정기업이 도시경제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경제·사회적 구조가 단순한 것이 취약한 점이다.

현재 추진 중인 기업도시는 도시경제의 주도적 역할을 하게 될 기업이 직접 건설하는 도시를 지칭한다. 이 같은 차원에서 기업도시는 단순히 민간개발업자가 건설하는 도시와는 차별화된다.

기업도시 건설제도는 몇 가지 뚜렷한 정책목적은 지니고 있다.

첫째, 기업도시 건설은 수요자 주도의 도시개발을 통해 공급자 중심의 토지개발과 공급의 경직성과 비효율성을 극복하고 기업 친화적 토지공급을 활성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동안 기업이 필요한 토지는 산업단지 형태로 정부와 공공 부문에 의해 공급됐다. 그러나 이 같은 토지공급 형태는 생산기능과 연구개발, 교육 및 문화기능의 융합된 경제활동이 요구되는 기술혁신과 정보화 시대의 토지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

둘째, 기업도시 건설은 도시개발에 있어 민간 부문의 창의와 자본을 유치해 도시와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그동안 도시개발은 정부와 공공 부문의 영역이었다. 기업도시는 민간 부문의 참여를 통해 도시기반과 시설의 혁신과 공공투자 부담을 경감하는 역할을 한다.

셋째, 기업도시 건설은 낙후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지역 균형발전을 촉진하는데 목적이 있다. 정부는 민간 기업에 도시개발을 위한 토지전용, 인허가 및 토지취득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대신 기업은 그동안 민간 부문의 투자가 부진했던 지역에 산업투자와 도시개발을 추진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기업도시의 건설은 시행주체를 비롯한 민간 기업에 의한 생산 및

여가 등 경제적 투자의 증대와 함께 지역의 도시 인프라 강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는 계기가 된다. 이 같은 경제적 이점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마다 앞 다투어 기업도시의 유치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기업도시가 소기의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업도시 추진 과정에서 세심한 주의와 사전적 조치 마련이 필요하다.

우선 기업도시가 지역경제 활성화의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시행주체인 기업이 산업 및 경제투자의 핵심주체가 돼야 한다.

민간기업의 투자가 부진한 낙후지역 내 도시경제를 선도할 산업 투자 의무이행 없는 도시개발은 불필요한 자원낭비와 투기유발 등 부작용을 유발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현재 시행주체의 최저 토지공급 비율이 4~7% 정도에 불과하나 지역의 낙후도에 따라 최저 토지공급 비율을 20~30% 정도로 높이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 또한 기업도시 건설에 따른 개발이익의 사점화가 방지되어야 한다.

토지용도 변경 자체가 지가를 결정하는 현실에서 민간 기업에 대한 도시개발권을 부여하는 것은 개발이익의 사점화를 어느 정도 인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지대추구형의 도시개발은 부동산 투기를 유발하고, 장기

적으로 경쟁력이 없는 비효율적 토지이용을 초래하게 된다. 사업 시행자에 대한 토지분양 한도제, 분양된 토지의 전매금지와 분양토지의 개발 의무제의 적용방안에 세밀한 검토와 조정이 필요하다.

끝으로 기업도시 건설이익과 경제 활성화의 혜택이 지역과 주민에게도 함께 주어질 수 있는 도시개발 방식이 채택되어야 한다. 기업도시 건설 투자에 있어 지역 주민과 지방기업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지역 주민과 기업은 기업도시 내 유치될 생산 및 기업 활동에 참여 또는 연계,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기업도시 건설이 소기의 정책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역 사회의 폭넓은 관심과 참여가 이어졌으면 한다.

[김용웅, 충청투데이 2005년 4월 27일자]

지역경쟁력과 장소마케팅

지역 경쟁력이 국가 경제 성장과 발전을 좌우하는 시대가 됐다.

세계화의 진전이 국가 간 생산성의 비교우위 격차를 축소시킨 반면 도시와 지역의 경제주체로서의 역할을 증대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정부가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하여 행정수도 건설, 공공기관 이전 및 지역혁신계획을 통한 국가 균형발전을 추진하는 것은 지역의 자생적 발전 기반을 구축해 스스로의 생존과 번영을 지켜 나가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지역의 내생적 발전 역량과 경쟁력을 갖추어 나가는 것은 남에게 미룰 수 있는 과제가 아니다.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사회가 주도적인 입장에서 무한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나름대로의 전략과 수단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지역 경쟁력의 강화를 위한 노력에서는 세계화와 시장 주도의 지

식기반경제체제의 특성을 이해하여 여기에 맞는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

첫째, 도시와 지역마다 특성적 매력과 경쟁력을 갖추어야 한다.

세계화시대에는 주민의 삶과 경제활동 공간단위로서 모든 분야에 걸쳐 경쟁력을 갖추려는 노력은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 지역이 지닌 특장 부문만을 선별하여 육성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고유의 역사와 문화적 전통과 경관과 환경적 특성 및 역사적으로 축적된 산업 및 경제 기반을 고려하여 국제적 차원에서 차별성을 지니는 부문의 발견이 지역 경쟁력 강화의 핵심과제라 할 수 있다.

둘째, 주민생활의 만족과 문화적 활력의 촉진 기반을 갖추어야 한다.

산업화시대에는 지역 경쟁력이란 산업생산의 증대와 생산비용 절감을 의미했다. 여기서 필요한 것은 도로, 상하수도, 항만 공항, 산업단지와 도시 기반 확대와 노동력 확보 등 생산 기반 조성이었다.

그러나 소득과 교육수준의 증대에 따라 지역 경쟁력은 산업생산의 확대보다는 지식기반경제를 뒷받침하는 전문 인력의 유치 및 확보에 의하여 결정된다.

셋째, 첨단기술 개발과 혁신 기반을 갖추어야 한다.

지식 기반 경제체제하에서 지역 경쟁력이란 지역 내 경제 주체의 생산성과 제품의 시장 경쟁력 확보를 의미한다.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지식 및 정보의 창출과 수용 능력이 확대될 수 있어야 한다. 지역마다 자기 지역에 맞는 혁신기반 구축 노력이 필요하다.

반드시 첨단기술이나 제품의 생산에만 치중할 필요는 없다. 지역 내 기존의 생산 및 경제활동에 새로운 지식, 정보 및 아이디어를 적용하여 생산성과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분위기와 여건을 만드는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지역 경쟁력의 강화에서 중요한 것이 장소 마케팅이다. 장소 마케팅이란 지역의 특성적 매력과 발전 잠재력을 상품화하여 판매를 촉진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지역 브랜드의 개발이다. 지역 브랜드는 지역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시장 지명도와 신뢰도를 확보하는 수단이 된다. 지역 브랜드는 지역의 역사, 문화, 경관 특성을 상징하거나 지역의 대표적 시설 또는 제품의 특성을 대변함으로써 지역 경쟁력을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

최근에는 지역의 경관과 환경적 자원도 장소 마케팅의 핵심수단이 되고 있는데 상징적 도시 건축물, 도시색채, 도시설계와 경관조성이 그 좋은 예이다.

장소 마케팅 전략과 관련하여 도시와 지역의 정체성 확립이 중요해지고 있다. 우리는 현재 지역이 상품으로서 판촉의 대상이 되는 극심한 경쟁의 시대를 살고 있다. 지역 경쟁력을 높이는 데는 거대한 사업이나 투자만이 요구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지역주민의 창의와 선도, 그리고 참여와 관심이 보다 큰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이해해 주었으면 한다.

[김용웅, 충청투데이 2005년 5월 25일자]

충남의 미래를 책임지겠습니다

충남발전연구원이 개원된 지 어언 10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1991년 지방자치가 부활되고 1995년 민선자치시대가 출범하면서, 지역발전을 위한 싱크 탱크가 되고자 충남발전연구원은 1995년 개원하였습니다.

지난 10년은 우리에게 격변의 시기였습니다. 국제적으로는 세계화 시대가 전개되어, 시장 논리에 따른 경쟁력만이 국가와 지역의 발전을 결정하는 신자유주의 시대가 도래하였습니다.

국가 차원에서는 외환위기를 통해서 급변하는 환경에 대한 정책적 교훈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참여정부의 등장과 함께 지역균형발전, 지방분권이 국정기조로 정착됨에 따라 지역발전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지평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충남지역 차원에서의 지난 10년은 우리가 경험할 수 없었던 격동의 시기였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와 경부고속철도의 개통도 있었지만, 신행정수도 건설 문제는 조선 개국 당시 계룡천도 논란 이후

지역 차원에서의 최고 대사였습니다.

위헌 판결 이후 비록 신행정수도의 중간단계로써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축소되었지만, 충남은 향후 국가혁신을 주도하는 중추역할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충남발전연구원은 연륜이나 조직, 연구원 규모 등을 볼 때 아직 ‘열살 먹은 소년’에 불과합니다. 끊임없는 새로운 아이디어와 지식을 창조하고 불확실한 미래를 예측하며 충남 개혁에 필요한 여러 정보를 제공하기에는 아직도 솔직히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이와 함께 충남도를 비롯한 일선 시·군이 요구하는 고감도 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할 일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연구원들은 개원 10주년을 맞아 ‘대한민국의 중심 충남의 미래를 우리가 책임진다.’는 자부심과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각오를 새롭게 해봅니다. 환황해권의 중심지역인 충청남도가 지방주도의 지역발전을 이루어냄과 동시에 국토의 균형발전을 선도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안목으로 수요자 중심의 연구를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김용웅, 열린충남 2005년 6월호 통권31호]

지역 싱크탱크 역할과 발전 방안

민선 지방자치 이후 지역발전에 대한 지역사회의 참여와 자율역량은 크게 증대됐으나 자치단체의 자율권은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정부의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에 대한 의지가 높아 지역문제 해결과 지역발전을 이루는 데 있어 자치단체의 자율권은 크게 신장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그동안 지방분권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은 지방의 자치역량 부족이 주원인이었으나 참여정부 들어 '선 분권, 후 보완' 원칙에 따라 강력한 분권화가 추진되고 있다.

앞으로 지역의 문제는 지역 스스로 결정하여 해결하는 실질적인 분권화가 이루어지는 경우, 지방행정과 지역발전에 대한 정책수립과 집행은 전적으로 지역의 자치와 경영능력에 크게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사회적으로 다양한 지역문제에 대한 전문적인 기획 및 경영능력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했다.

이는 지방행정에 필요한 대부분의 정책과 전략수립은 물론 재원 확보마저 중앙정부에 의존함으로써 자율적인 창의와 책임의식이 결여됐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지역발전의 비전을 설정하고, 거기에 맞는 전략과 수단을 개발하며, 효율적인 경영여건을 만드는 것이 새로운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 같은 시대적 여건 변화 속에서 지방행정과 지역발전에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갖춘 지역 싱크탱크의 필요성과 역할이 커지고 있다.

충청남도는 지역현안 과제에 대한 전문적 조사, 연구와 지역발전 전략 수립을 위해 충남발전연구원(이하 충발연)을 설립·운영해 오고 있다. 올해 10주년을 맞게 된 충발연은 지역의 싱크탱크로서 지난 10년간 연구 인력과 예산이 각각 3배와 10배가 증가했고, 연구 실적도 6배나 증가했다. 충발연은 지방정부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의 지역개발 시책과 전략을 마련하는 데도 기여해 왔다.

특히 연구원은 지역이 당면한 현안의 해결을 전략과 계획을 수립하는 일과 함께 지역발전을 위한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정책 및 계획연구를 주도해 왔다.

앞으로 지역 싱크탱크의 역할은 양적, 질적으로 크게 달라지게 된다. 그 동안에 현안과 수요 대응적인 연구에 치중했다면 장기적으로는 변화와 혁신을 선도하는 새로운 아이디어의 개발과 정책의 효율적 집행을 위한 조사와 평가연구 그리고 지역 내 고용, 소득의

증대 및 복지수준을 증진시키는 실사구시형 연구에 치중해야 한다.

또 지역문제와 정책대안에 대한 광범위한 토의와 합의를 도출하는 지역포럼의 중심기관 역할도 담당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지역 싱크탱크는 지역혁신과 자치역량을 함양하는 사회적 학습의 선도 기능 역할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역발전연구원의 조직과 연구역량의 획기적인 강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충남발전연구원은 새로이 요구되는 연구역량의 강화를 위해 개방된 네트워크 조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 연구원 내에는 최소한의 핵심연구 인력만을 확보하고 필요한 연구 인력은 대전·충남지역 대학교수 및 전문가 등 폭넓은 전문 인력 풀을 활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될 경우 충청연은 지방행정과 지역발전에 관한 종합연구기관으로서 위상을 지니게 될 것이다. 한편으로는 충남도내 산하의 분야별 전문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충청연은 개원 10년을 맞아 충남지역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중심'으로 재도약하는 데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역 싱크탱크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해 본다.

[김용웅, 충청투데이 2005년 6월 22일자]

'행정도시 영양권 종합 발전구상 필요'

충남 정책 수립 연구기관인 충남발전연구원(이하 충발연)은 지난해 7월 김용웅 원장의 취임 이후 연구와 활동 영역을 확대, 명실공히 지역 발전의 핵심기관으로 자리매김했다.

특히 충발연은 올해 개원 10주년을 맞아 전 연구원이 새로운 마음으로 '충남의 미래를 우리가 열어간다'라는 자부심과 사명감을 가지고 재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8일자로 취임 1주년을 맞는 김 원장으로부터 충발연의 향후 운영 방향과 연구과제 등을 들어본다. <편집자 주>

-지난 1년간의 보람과 성과는.

▲"흡족한 것은 아니지만 역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이끌어내는 데 있어 나름대로의 역할을 했다는 점을 가장 큰 보람이라 할 수 있다. 행정도시의 건설은 충남 발전이 국가 발전선도 거점으로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확신하기 때문이다. 행정도시는 완전한 행정수도 건설로 가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라는 점을 명심하

고, 이를 활용해 충남지역이 도약할 수 있는 장기 발전전략을 만들어 나가는 데 진력할 예정이다. 또 충발연에 대한 지역사회의 인식을 새롭게 하고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고 할 수 있다는 것과 충발연의 기능이 획기적으로 확대됐다는 점이다. 지난 1년간 시·군의 정책 지원을 위해 지역순회 세미나 개최와 지역 현안과제 수행을 확대해 주민 복지증진의 주도자 역할을 하는 기초자치단체와의 교류와 협력을 강화한 점도 보람있게 생각한다."

-개원 10주년 맞는 충발연의 각오랄까, 비전이 있다면.

▲"충발연의 설립 목적은 충남도와 16개 시·군을 지원하며 21세기 충남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고 각종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다. 개원 10주년 맞아 충남이 국가혁신과 국토 균형발전의 선도자가 될 수 있도록 충남의 미래비전과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세계화와 지식산업화, 지방화의 시대에는 과거와는 다른 발전 패러다임이 요구된다. 따라서 새로운 패러다임에 상응하는 새로운 발전전략을 마련할 것이다. 개원 10주년 사업으로는 '충남발전연구원 10년사' 제작과 '충남의 미래비전과 전략 수립' 관련 세미나 시리즈를 개최하고 있다. 이 밖에 충남지역발전 논문을 집대성한 '충남지역연구' 논문집을 발간했다. 개원 10주년 사업으로 시작하였지만 앞으로 '충남지역연구'를 계속 출판해 지역연구를 활성화할 예정이다."

-충발연은 도정은 물론 일선 시·군정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연구기관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어떻게 시·군정을 지원하고 있는지.

▲"연구원은 첫째, 시·군 분담연구체를 채택해 연구원별로 개별 시·군의 홈페이지 역할을 하도록 하고 있다. 아직은 인력과 예산이

수요에 따르지 못하고 있으나 지속적으로 확대할 작정이다. 또 시대적 변화 속에서 시·군이 추진해야 할 시·군정의 방향을 제시하고 국정·도정과 연계된 시·군정 시책개발과 효율적 사업추진을 위한 체계적 지원을 위해 시·군 순회 정책토론회를 보다 확대하고자 한다. 이와 함께 현안과제에 대한 무료 연구를 들 수 있다. 긴급한 현안과제에 대하여는 컨설팅 차원의 서비스를 강화하고자 한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계기로 충남의 발전 방향을 제시한다
면.

▲"행정도시는 충남 발전에 기회이자 동시에 위협이기도 하다. 행정도시 건설은 경부축상의 천안·아산, 연기, 대전지역에는 발전의 계기가 되겠지만 충남 내륙과 서해안 지역은 더욱 낙후될 위험이 있다. 또 행정도시의 직접 영향권에 해당하는 경부축상의 도시라 하더라도 지역이 공동화될 위험성도 있다. 따라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행정도시의 직접 영향권에 해당되는 지역은 행정도시와 연계된 배후 거점 기능을 활성화해야 하고 간접 영향권에 해당되는 지역은 특화산업을 육성, 활력을 불어넣어야 할 것이다. 충남 차원에서 보면 북서지역은 충남-경기 상생 발전 방안을 통해, 서해안 지역은 환황해권 시대 대중국 교류의 거점 기능과 내포문화권 개발 등 문화관광산업을 통해, 금강권은 제2의 한강의 기적을 이룰 수 있는 종합개발계획을 통해, 내륙권은 백제문화권과 내포문화권 개발을 통해 충남의 총체적 발전구도가 다시 구상돼야 할 것이다."

-행정도시가 인구 30만~50만 명의 자족도시를 완성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복합기능은 어떤 것이 있는지.

▲"행정도시는 국정조정외 교류지로서 국가혁신 수단의 하나가 되어야 한다. 자족성 확보를 위한 복합기능으로는 우선 행정도시에 는 교육인적자원부 등이 위치하고 중앙공무원 등 고급 인력이 집중 하므로 일류 교육도시로의 기능 확대가 용이하다. 이를 위해 지역 내 고급 인력을 자체 양성하고 공급할 수 있는 세계적 수준의 국내 외 대학을 건설하거나 유치할 필요가 있다. 또 인근에 대덕연구단 지가 있으므로 행정도시는 연구단지외 기능적으로 연계된 첨단산업 도시의 기능을 고려할 수 있다. 또 특색 있는 문화도시를 만들어야 한다. 개성 있는 도시 건축물과 경관 형성을 위해 예술가 및 다양 한 전문가가 시설물 설계 및 도시 설계 과정부터 참여할 필요하고 있다. 이 밖에 국제회의를 위한 대규모 컨벤션센터나 숙박시설 등 을 갖춘 국제도시의 성격을 지녀야 한다."

-행정도시 건설 등 중부권 개발의 확대로 충청권 젓줄인 금강의 환경문제가 우려되고 있는데 향후 금강의 관리 방안은.

▲"중부권 개발로 인하여 환경문제 가운데 특히 물 문제가 중요하다. 4개 광역시·도가 연접해 있는 금강의 물 문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지역 간 갈등을 해소하고 수질 모니터링과 더불어 종합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종합연구센터를 설립 할 필요가 있다."

-충남도청 이전을 위한 연구용역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충남도민의 관심사인 도청 이전 연구는 오는 9월 말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도청 이전 후보지 결정은 신행정수도 후보지 결정 과정과 같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될 것이다. 우리는 단지 연구

만 할 뿐 최종 후보지는 도청이전조례에 따라 도청이전추진위원회가 구성한 평가단에 의해 선정되도록 되어 있다."

-호남고속철도 분기역이 며칠 전 논란 끝에 오승으로 결정됐는데 추진위원회 위원으로서 분기역 선정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먼저 분명히 밝혀야 할 점이 있다. 언론기관 등에서는 지난번 국토연구원 내 민간인 평가단의 평가 결과 발표를 분기역 결정으로 보도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앞으로 정부가 평가과정의 당위성과 평가내용의 합리성을 판단해 추후에 결정하게 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번 평가가 공정성과 정당성을 결여했기 때문에 정부가 받아들이지 말 것을 촉구하고 있다.

가장 큰 결함은 호남고속철도 주요 수혜자가 배제된 상태에서 특정 분기역을 선호하는 지역의 평가단이 대부분을 구성하는 집단에서 평가가 이뤄졌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편향된 집단에 의한 평가는 공정성이 없다는 것이다. 또 평가의 전제와 기본 틀을 자의적으로 바꾸었다는 점이다. 그동안 평가는 수도권에서 목포까지 고속철도를 신설하는 것을 전제로 했다. 그런데 이번 평가는 사전에 아무런 토의도 없이 경부고속전철을 활용하는 것을 전제로 사업성과 경제성을 분석한 자료를 근거로 이뤄졌다. 이렇게 될 때 장기적 차원에서 경제성과 사업성이 오히려 악화되는 대안이 선정될 우려가 있다.

이 밖에도 이번 평가는 지난 15년간 전문기관의 연구와 정부정책과 정반대되는 결과를 보였다. 정책의 신뢰성 차원에서 말이 안 된

다고 본다.

끝으로 오송 분기역이 결정되면 계룡산과 행정도시 예정지 통과 등 경관과 환경, 안보 차원의 많은 문제가 예상된다는 점도 강조하고 싶다."

-자치분권 시대에 지방연구원의 향후 역할은.

▲"지방분권 시대는 자율과 책임의 시대다. 스스로 발전 역량을 갖추면 발전할 수 있고 갖추지 못하면 낙후되는 시대가 전개될 것이다. 현재 중앙정부는 자율적으로 노력하고 발전할 수 있는 지방정부에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다. 지역의 자율적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 실정에 맞는 시의적절한 정책개발이 필수적이다. 분권화가 이뤄질수록 지방은 자치역량을 강화해야 하며 이에 따라 정책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연구원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27개 국책연구원의 역할을 지방정부 차원에서 지방연구원이 담당해야 한다. 실제 각 광역자치단체도 자치역량 강화 차원에서 지방연구원의 규모도 확대하고 매년 더욱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가장 규모가 작은 제주발전연구원의 경우에도 제주도는 11억 원 이상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충청투데이 2005년 7월 8일자]

‘까신 있는 약속’ 브랜드

지방자치제 부활 이후 지역마다 제 모습 갖추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처음에는 심벌마크나 마스코트와 같은 지역 상징물 만들기로 시작해서 이제는 브랜드 개발품의 절정을 이루고 있다.

이렇듯 지역에서 브랜드를 도입하려는 이유는 지역의 가치를 바라보는 기준이 경관이나 생산지수 같은 자원의 수치에서 지역 이미지, 지역 브랜드, 지역 정체성의 가치로 전환됐기 때문이다. 지금 시대에 있어서 국가보다도 세분화된 단위인 지역이 자기 나름의 이미지를 가져야 하며 독특하고 차별화된 지역 이미지를 갖추지 않고서는 지역 정체성 확립이나 발전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지역의 매력과 특성을 구현한 브랜드는 지역 경쟁력을 강화시켜 내적으로는 주민에게 수준 높은 삶의 질 욕구를 충족시키고 유·무형 자산인 역사, 문화, 자연의 계승과 상품화로 이어져 누구나 가고 싶고, 더불어 살고 싶은 지역으로 변화시키는 동기를 제공하는 수단이 된다.

과연 브랜드란 무엇일까? 흔히 기업이나 상품이 다른 경쟁 기업이나 상품과 구분 지어 질 수 있도록 만들어진 상표나 디자인 된 심벌마크가 브랜드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러한 외형적 모습이 브랜드의 전부는 아니며 브랜드를 소유한 기업 또는 지역이 오랜 기간에 걸쳐 형성한 내면의 모습이 진정한 브랜드의 핵심인 것이다.

브랜드 자산가치력을 이야기 할 때마다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C 콜라의 브랜드를 어느 누가 양도받았다 하더라도 동일한 상품과 시장까지 이어받을 수는 없을 것이다. 그 브랜드에는 제품의 고유성 뿐 아니라 형체가 없는 기업의 조직과 문화, 구성원 등 모든 요소가 녹아 담겨져 있기 때문이다.

지역 브랜드가 기업의 브랜드와 다른 점이 바로 내면적 이미지의 영향력 차이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쉽사리 낡은 이미지를 벗어버리고 장점만을 부각시키며 유연하게 시장에 대응할 수 있는 기업 브랜드와는 달리 잘난 모습뿐만 아니라 부끄러운 모습도 함께 안아야하는 문제와 이미 각인 되어진 이미지를 쉽사리 전환시키기도 어려운 것이 바로 지역 브랜드인 것이다.

이렇듯 태생과 사명이 다른 기업 브랜드의 행적을 지역 브랜드가 답습하기는 선뜻 내키지 않는 일이다. 단기적 이익의 창출보다는 지역민의 복지가 우선되어야하며 긍정적인 이미지의 장기적인 축적과 지자체, 지역 주민, 지역 내 기업이 함께 하는 행동의 실천이 지역 브랜드의 갈 길인 것이다.

소재의 선택 역시 지역 브랜드만의 특성이 있다. 충남이 오랜 세월 동안 들어온 비아냥거림 중의 하나가 느리다는 관념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흉거리를 다시 보듬어 보고 애정 있게 바라다보면 그 속에서 비교할 수 없는 장점을 발견하게 된다. 느림이란 풍요와 성숙된 수준을 기반으로 하는 여유의 한 표현이며 느림의 미학이 다시 강조되고 있음을 얼마든지 볼 수 있다.

과거의 것이라서, 트렌드와 부합되지 않는다는 판단으로 내가 지닌 모습의 진정한 매력을 그대로 덮어두는 오류를 범할 수는 없다. 지역이 간직한 역사와 전통, 자연과 문화, 인물, 정서를 바탕으로 누구든 수궁할 수 있는 소재를 내세워 나무를 심듯 진솔하게 브랜드를 심어간다면 성공한 브랜드로 반드시 자리 잡을 것이다.

브랜드란 고객 또는 주민과 끊임없이 지켜야 할 ‘자신 있는 약속’이기 때문이다.

[권영현, 중도일보 2005년 8월 1일자]

행정혁신과 거버넌스 시스템

근래의 화두는 '혁신'과 '거버넌스'가 아닌가 한다. 지역혁신, 정부혁신, 혁신분권 그리고 지방거버넌스, 협력적 거버넌스, 지역발전 거버넌스 등등의 용어들이 이를 뒷받침한다. 사실 정부를 비롯하여 기업과 대학에 이르기까지 '혁신'을 이루기 위해 부심하고 있다. 특히 행정에서 추구하려는 혁신은 상당한 자기변신을 주문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혁신과 거버넌스와는 어떤 관련이 있는가. 특히 행정혁신의 바탕에는 어떤 요소가 자리 잡고 있는가.

이는 행정이 스스로 변모하지 않으면 경쟁체제 속에서 더 이상 생존이 어렵고 경쟁력을 갖출 수 없으며, 따라서 행정내부의 혁신은 행정외부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는 기본전제에 입각한다.

여기서 행정외부의 요청은 행정환경을 말하며, 구체적으로 주민의 요구·반응·지지·협력 일체를 뜻한다. 그동안 민선 지방자치 실시 후 지방정부들이 앞 다투어 행정혁신을 추진해 왔으나 행정을 둘러

싼 외부환경의 특성이나 요구를 적절히 고려하지 못하여 실패한 경우가 왕왕 있었다.

민선지방자치 실시 후 ‘주민위한 행정’ 절실

이는 다양하고도 복잡하게 변화되고 있는 시민사회의 특성을 제대로 고려치 못한 결과이기도 하다. 그래서 ‘주민과 함께 하는 행정’,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행정’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

한편 거버넌스 시스템의 내용을 뜯어보면 전혀 새로운 것만도 아니다. 다만 그동안 사회적 문제해결에 있어 사전조율과 협의, 역할 분담과 책임, 갈등조정과 합의가 상대적으로 경시되었기 때문에 거버넌스가 선호되고 있다고 보여진다.

그래서 각급 행정기관에서 현재 활발하게 펼쳐지고 있는 행정혁신을 혹여 조직내부 차원에서 보는 시각이 있다면, 그렇지 않다고 전해 드리고 싶다. 행정혁신은 정권 차원에서 추진되는 일과성 행사가 아니기 때문이다.

지역 발전사업 성공위해 생산적 ‘참여행정’ 절실

더욱이 이제 정부의 역할이 지원자·조정자의 역할로 크게 변화되고 있음을 감안한다면, 특히 지방정부는 각종 지역발전사업을 위한 문제와 과제에 대한 거버넌스 차원의 해결을 위해 다양한 행위주체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어 결과적으로는 공공부문을 담당하는 지방정부와 생산적인 협력관계를 창출해야 한다. 이것이 참여행정이고 학습과정이며,共生산이라 할 수 있다.

행정환경 수시진단으로 내. 외부환경 요구 해결

이러한 맥락에서, 끊임없이 변화되는 행정환경을 수시로 진단해 보고, 행정조직이 복잡한 외부환경의 요구를 제대로 소화해 내고 있는가를 살펴 여기에 합당한 대안을 부단히 모색해 가려는 노력이 중요하다.

물론 행정 내부 환경에 대한 고려 또한 필요하다. “조직은 진공 속에서 존재하지 않는다.”는 언명을 다시 한 번 새겨본다.

[최병학, 중도일보 2005년 8월 15일자]

충남·경기 相生발전아려면

지방자치제의 확대 실시 이후 지역 간 경쟁, 갈등 증대와 함께 협력과 공동발전을 위한 노력도 함께 확대되고 있다. 최근 충남과 경기도가 상생발전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하고 세부 시책 방안을 마련하고 있어 많은 사회적 관심과 기대를 모으고 있다. 두 지역의 상생발전 노력이 사회적으로 관심 대상이 된 이유는 그것이 지역 차원을 넘어 21세기 우리나라 경제·사회발전의 광범한 부문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두 지역이 지역을 넘어 국가 발전의 새로운 '파워하우스'로서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새로운 발전 전략에는 무엇이 담겨야 하는가.

첫째, 두 지역의 상생발전은 지역 문제의 해결보다는 미래 국가 발전과 경쟁력 강화에 치중해야 한다. 현재 충남·경기지역에는 첨단 지식 기반 산업인 컴퓨터산업의 76.8%, 반도체의 77.9%가 집중돼 있어 수출 흑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등 국가 산업발전을 선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 같은 여건 속에서 국내 산업의 비교 우위성에 의존한 지역 발전만을 촉진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두 지역의 상생발전을 통해 동북아를 비롯한 국제경쟁력을 지닌 산업

및 물류 기반을 형성토록 해야 한다.

둘째, 수도권과 지방 간 대립과 갈등 구조를 타파하고 상호보완의 공동 번영의 틀을 제시해야 한다. 그동안 수도권과 지방은 한정된 국가 자원의 배분 논리 속에서 비생산적인 경합과 갈등관계에 머물러 왔다. 수도권은 국내의 상대적 입지 우위성에만 집착해 무분별한 양적 팽창과 혼잡을 가져왔고, 지방은 자생력을 상실한 채 외부 의존적인 침체 경제체제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두 지역의 상생발전이 수도권과 지방 간 비생산적 갈등의 악순환적 고리를 끊고 공동 번영을 이루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

셋째, 두 지역의 상생발전이 분권 시대 지역 주도로 추진하는 경제·사회발전의 성공 모델이 돼야 한다. 그동안 많은 지역 발전은 중앙정부의 주도에 의거, 추진돼 왔다. 그러나 지역 자율의 분권 시대에는 더 이상 중앙정부의 의지와 지원 여부가 지역 발전의 핵심 동인이 돼서는 안 된다. 지역 고유의 잠재력과 창의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지역사회가 발전 비전과 전략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요구되며 필요한 자원을 동원, 투입할 수 있어야 한다.

충남·경기지역의 상생발전을 통해 지역, 국가 나아가 국제경쟁력을 갖춘 경제 기반을 형성하고 분권 시대 지역 중심의 국가발전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는 데 선도적인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

[김용웅, 한국경제 2005년 8월 16일자]

충청권 · 타 시도 공동발전 방안

경제, 사회, 정치변화를 일으키는 주체가 국가주도에서 지역주도로 변모하고 있으며 집단·단절형 사회에서 분권·네트워크형 사회로 여건이 변화하고 있다.

따라서 개별지역의 내부적 역량한계를 극복하고 비용절감과 중복투자 방지는 물론 개발사업추진과 행정서비스 제공 등의 효율성과 사업연계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최근 지역 간 협력 사업이 중요시되고 있다.

‘제4차국토종합계획’ 및 ‘신국토구상’에서는 지역 간 공동발전을 주요목표로 설정하고 있으며 ‘국토기본법’과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서도 지역 간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서 ‘정부는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효과가 미치는 사업을 당해 지자체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경우에는 해당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 편성시 우선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는 지역 간 협력강화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지역 간 공동발전 및 협력프로그램으로 유럽연합(EU)은 경제·사회 결속과 통합을 강화하기 위한 국경지역·국가·지역 간 협력 프로그램(Interreg)을 추진 중에 있고 영국에서는 템즈강 관문지역 전략적 파트너십(TGSP)을 구성해 템즈강 관문지역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이외에도 미국의 특별구, 프랑스의 코문간 협력체, 일본의 광역연합 등 다양한 형태의 협력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공주·연기지역에 건설예정인 행정중심복합도시 파급효과의 대부분이 충청권에 귀속되어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목표달성에 기여하지 못할 것이라는 부정적 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중심으로 한 충청권과 수도권 및 영호남권, 강원권의 긴밀한 협력과 제휴를 통해 공동발전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하다.

지금까지 충청권 광역자치단체차원에서 ‘충청권행정협의회’, ‘충남·전북교류협력회의’, ‘황해권 시도지사협의회’, ‘충남·경기 상생발전협약’, ‘중부내륙권 3도 협력회’, ‘수도권행정협의회’ 등을 중심으로 지역간 협력프로그램을 전개해 왔으나, 대부분 단일 행정구역 중심의 폐쇄적 지역개발 관행으로 지역 간 공동발전의 가시적 성과를 달성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중심으로 한 충청권은 타 권역과 다

음과 같은 협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함으로써 지역 간 상생발전 패러다임을 정립할 필요성이 있다.

우선, 강원권 및 영남권의 접도지역은 내륙산악 및 수원발원지로 조건이 불리한 지역이다. 개발촉진지구 및 신활력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중심으로 기업도시 개발, IT·BT 등 친환경적 산업개발, 관광문화자원개발, 수자원 및 환경관리 등의 측면에서 공동협력방안 모색이 필요하고, 청주공항을 이용한 외국인 관광객 공동유치노력 및 관광루트 공동개발 등이 요구된다.

호남권과는 백제문화권과 금강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역사문화 관광자원 공동이용, 금강의 공동이용 및 관리, 사회간접자본 확충, 중소기업 및 자동차 산업 등 산업클러스터 간 협력, 지역혁신주체(기업, 상공회의소, 대학 등)간 협력, 비교우위산업중심의 협력, 농업부문 협력 등이 필요하다.

[송두범, 중도일보 2005년 8월 22일자]

균형발전이 미래이다

지금 세계는 한 국가의 국경을 넘어서는 세계화가 진행되는 한편, 유럽연합, 나프타, APEC 등 경제의 블록화와 민족주의 대두 등 분절화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에서는 중국의 급부상, 일본의 역사왜곡 및 영토분쟁, 북핵문제 등으로 냉전기의 질서가 급격하게 변화될 전망입니다.

국내적으로 우리는 지난 반세기 동안 강력한 중앙집권체제하에서 요소 투입형 성장전략과 수도권 일극 중심의 불균형 발전전략을 추진한 결과, 압축적 산업화를 통해 일인당 1만 불을 달성하며 중진국으로 도약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수도권의 과밀과 지방의 침체, 국민 분열 및 지역갈등, 국토이용의 효율성 저하 등으로 국가전체의 경쟁력이 약화되면서 성장의 한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급변하는 국내외 여건 속에서 대한민국의 생존기반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국력을 증진해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대외적으로는 개방형 통상국가로서의 위상을 강화하

는 한편, 대내적으로는 지식·기술 중심의 혁신주도형 발전전략과 국가균형 발전전략을 통해 국가 재도약의 전기를 마련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혁신에 대한 의지와 변화의 속도가 국가의 명운을 가늠하는 일대 변혁기를 맞아 선진각국들은 혁신주도형 발전패러다임을 채택하여 적극 추진하는 한편, 국가의 지속적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 소수의 특정지역이 아닌 국가의 모든 지역에서 혁신역량의 강화를 위해 균형발전정책을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여정부는 요소 투입형 불균형발전전략의 한계를 극복하고 선진한국으로 재도약하기 위해 집권초기부터 최고 국정과제의 하나로 국가균형발전을 제시하였고, 균형 없는 집권·집중을 지양하고 혁신을 통해 성장과 균형이 병행하는 새로운 분권·분산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가균형발전의 비전은 혁신주도형 균형발전을 통한 국가경제의 재도약이며, 목표는 지역혁신을 통한 자립형 지방화의 실현에 있습니다.

국가균형발전의 비전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4대 분야의 16개 정책과제를 추진하고 있으며, 사안별로 가시적인 성과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째, 지방의 자립화를 위한 균형발전의 기반조성(균형정책)을 위해 지난 6월말 발표된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을 포함하여 신활력 지역의 개발촉진, 문화·관광자원을 활용한 자립형 지역개발, 수도권기업의 지방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둘째, 지역혁신을 통한 혁신주도형 발전(혁신정책)을 위해 지역혁신체계의 구축 및 운영지원, 지방대학 육성 및 인적자원의 개발, 산학협력 활성화, 대덕 R&D 특구 육성, 국가산업단지의 혁신클러스터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셋째, 특성화 발전을 통한 지역별 경쟁력 강화(특화정책)를 위해 시·도별 4대 전략산업의 진흥, 지역특화발전특구 추진, 수도권발전 종합대책 등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을 제도적 기반위에 안정적·효율적으로 추진(제도운영)하기 위해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의 수립, 균형발전특별회계 운영, 균형발전사업 평가체계의 확립 등을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여정부는 '03년부터 지난 2년 반 동안 4대 분야의 16대 과제를 중심으로 균형발전전략을 추진하기 위한 제도 및 기반구축을 완료하였고, 지역의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체계구축 및 균형발전 중장기 계획을 수립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균형발전정책의 실행단계에 접어든 '05년부터는 핵심사업의 본격적 추진을 통해 성과의 극대화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균형발전정책의 추진현황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행정중심복합도시가 계획대로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6월에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시도별 배분방안과 수도권발전 종합대책을 수립·발표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연계한 혁신도시 건설을 계획대로 추진하여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지역산업과 연계한 지방대학의 인재양성정책, 지방의 R&D 비중확대, 지역

전략산업의 집중 육성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한편, 중앙정부에서는 부처별·사업별로 개별 추진하던 지역사업을 중앙부처 공동추진단을 통해 추진함과 동시에 지역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자율권을 지자체에 부여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는 지역혁신협의회(광역 14개, 기초 116개), 지역혁신연구회(14개), Inno-Cafe(24개), 산업단지 미니클러스터(41개) 등이 운영·가동 중에 있으며, 학계·언론계·NGO를 중심으로 자생적 포럼활동이 활발히 진행 중입니다.

앞으로, 균형발전정책의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미흡한 점을 보완하는 한편, 공공기관 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 지역전략산업 육성, 신활력 사업 등 핵심선도과제에 역량을 집중하여 성과를 조기에 확산하는 한편, 제도개선을 통해 지역혁신기반의 체계화 및 효율화를 강화하고 신규 정책과제를 발굴·추진할 것입니다.

참여정부가 추진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공공기관 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 수도권발전 종합대책, 지방분권정책은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된 통합패키지 정책으로 참여정부는 강력한 의지를 갖고 계획대로 실천할 것입니다.

이러한 균형발전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수도권과 지방, 지방과 지방간에 상생과 연대, 대타협과 양보의 자세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수도권은 수도권대로 각종 규제로 인해 발목이 묶이고, 지방은 지방대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하지 못함으로써 국가 전체의 경쟁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참여정부는 전국의 모든 지역이 세계와 경쟁할 수 있는 혁신역량을

갖추도록 지원할 것이며, 지방은 스스로 자립하겠다는, 균형발전은 지방이 주도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혁신역량을 강화하는 자세와 노력을 기대합니다.

[성경룡, 열린충남 2005년 10월호 통권32호]

‘행정도시’ 압언을 주장하는 이유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가까워지면 서 행정도시 건설의 위헌성 여부에 대한 찬반 논란이 뜨겁다.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언제나 다양한 의견과 주장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주장은 객관적인 근거와 논리를 바탕으로 할 때만이 사회적인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생산적인 토론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일부 행정도시 건설 반대론자들은 행정도시 건설이 정부와 여당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수도이전이며, 수도분할이기 때문에 위헌이라는 주장으로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국민들의 올바른 판단을 위해서도 행정도시에 대한 그릇된 인식과 주장을 바로잡아야 한다.

우선 행정도시 건설은 수도이전이나 수도분할이 아니다. 헌법재판소는 수도란 입법부와 대통령의 소재지 및 정부 기능을 수행하는 국가기관들의 활동이 이뤄지는 곳이지만, 대통령제 통치구조 아래에서 입법부와 대통령의 소재지만이 수도의 특징적이고 결정적인 요소이고, 정부 조직의 분산 배치는 정책적 고려사항임을 판시했다.

따라서 행정도시 건설 이후에도 입법부와 대통령의 소재지 및 외교·안보·치안·통일 등 대통령의 통치기능 담당 부처가 서울에 남아 있기 때문에 행정도시 건설은 수도이전이나 수도분할이 아니며, 국민투표의 대상도 될 수 없다.

만약 행정도시가 수도분할이라면 과천청사야말로 서울의 수도 정체성을 훼손한 대표적 위헌이 아닌가? 또한, 행정도시 건설은 정부와 여당이 정략적인 차원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단순 도시개발 사업이 아니라 여야 정치권의 합의와 국회의 민주적 입법절차를 바탕으로 추진하는 국가적 사업이다. 알려진 바와 같이 행정도시 건설을 위해 국회 내 여야 정치권의 합의로 '행정수도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그리고 각 당별 민주적인 토론과 합의절차를 거쳤다.

국회에서는 여야의 심층적 논의와 타협을 통해 행정도시특별법을 제정했다. 이 과정에서 국회에서는 사회 각 부문의 전문가를 초청하여 토론 및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광범위한 국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바 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무시하고 민주적 합의와 입법절차의 정당성마저 부인해서는 안 된다.

행정도시 건설은 충청인의 이기주의 산물이 아니다. 행정도시 건설은 수도권 집중과 과밀 해소 그리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한 국가 발전 전략 차원에서 제기돼 중앙의 정치권에서 결정한 사안이다. 너무나 자명한 사실을 충청인의 이기주의의 결과로 폄훼해서는 안 된다. 지역감정을 유발하여 정치적 이익을 취하려는 구태에서 벗어나야 한다.

특히 충청권 3개 시·도지사를 비롯한 충청인의 정당한 의견서 제출마저 지역 이기주의요 현재에 대한 압력과 위협이라고 주장 하는데는 실소를 금할 수 없다. 이것은 다양한 이해 당사자의 의견 청취를 통해 공정한 판정을 기하려는 현재의 심리절차까지 무시하는 처사이다.

이밖에도 행정도시 건설 반대론자들은 대통령과 정부 부처가 120km나 떨어져 국정관리를 한 세계적 사례가 없고, 브라질의 예와 같이 세계적으로 수도이전은 실패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수도 기능이 분리된 독일의 본과 베를린은 500km 넘게 떨어져 있고,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과 헤이그도 80km 이상 떨어져 있다. 수도이전 성공 사례도 호주의 캔버라, 말레이시아의 푸트라자야, 캐나다의 오타와 등 많이 있다. 만약 세계적 사례를 든다면 전국 인구의 48%와 국가 중추 관리기능의 80%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된 사례가 있는지 묻고 싶다.

이제 소모적인 논쟁은 종식돼야 한다. 지금의 수도권 집중과 과밀 및 지역 불균형을 그대로 방치하고도 우리나라가 국제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적인 번영과 발전이 가능한지 자문해 봐야 한다. 행정도시 건설에 대한 지역이기주의적 반대 주장은 현재의 현명 한 판단으로 가름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선진국 도약과 미래 세대를 위해서라도 행정도시 심판청구는 마땅히 기각돼야 한다.

[김용웅, 문화일보 2005년 11월 11일자]

수도권 규제완화 시기상조다

잠잠했던 수도권 규제완화 문제가 또 다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정부는 최근 국무회의에서 국내 대기기업의 수도권 공장 신·증설(8개 첨단업종)을 허용하는 공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어 야당의 수도권 일부 의원들은 수도권 규제완화를 골자로 하는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에 관한 법률'을 발의해 놓고 틈새공약을 늦추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수도권을 제외한 13개 시·도지사가 모두 모여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가 하면 경북 구미공단에서는 생사를 건 항의가 계속되고 있다.

경기회복과 투자 촉진을 위해 외국인 투자기업과 국내대기업의 수도권 내 신·증설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에도 나름대로의 일리는 있다. 수도권 내 획일적인 공장규제는 수도권의 집중과 과밀해소는 큰 기여를 하지 못하면서 자율적인 기업 투자를 위축시키고 우리나라의 국제 경쟁력만을 저하시킨다는 비판도 있다.

특히 세계화의 개방 경제체제 속에서 국내 한 지역의 규제가 반드시 다른 지역의 투자 확대로 이어진다는 보장도 없다. 국내외 기업들은 얼마든지 보다 양호한 산업입지를 찾아 중국이나 동남아의 개발도상국 등 다른 나라로 투자 지역을 변경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하여 비수도권의 지방자치단체가 반발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현재와 같이 수도권의 집중, 과밀 및 지역 간 격차가 심각한 상태에서 그동안 버팀목이 되었던 수도권 규제완화정책이 일부 허용될 경우 일관되게 추진해온 수도권규제의 틀 자체가 쉽게 무너질 우려 때문이다.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방침은 부분적인 당위성과 불가피성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우선 잘못된 시기선택이다.

정부는 그동안 수도권의 단계별 관리방안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다. 2004~2007년 1단계에는 첨단업종 관련 외국 기업의 신·증설 등 매우 제한적인 허용에 한하며 2008년 이후 행정도시 건설, 공공기관 이전 및 국가균형발전의 효과가 가시화되는 2단계에 수도권 규제의 틀을 성장관리 차원에서 개편토록 되어 있다.

국가균형발전이 가시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도권 규제를 완화한다면 정책에 대한 일관성과 신뢰성이 무너지게 되어 산업의 수도권 재집중과 같은 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다. 특히 외국투자기업 및 대기업 공장의 신·증설의 허용은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관련

산업생산과정에 참여하는 수많은 중소기업의 입지에도 영향을 미쳐 사실상 수도권 산업입지규제를 유명무실하게 할 수 있다.

기본적 정책목표의 훼손도 문제다. 수도권내 외국인 투자기업의 공장 신·증설 기한을 연장하고 국내 대기업 공장의 신설과 증설을 새롭게 허용하면, 일시적으로 수도권 내 투자를 촉진하고 경제침체의 극복에 어느 정도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러나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 방침은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과 국가경쟁력을 높이려는 국가균형발전정책의 근본 목적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수도권 규제완화 조치는 수도권의 질적 고도화를 통하여 세계도시 수준의 경쟁력을 지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두어야 한다. 무질서한 도시 확산과 과밀, 혼잡을 막을 수 있는 '성장관리 틀과 수단'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급한 규제 완화는 장기적으로 수도권 발전에 독(毒)이 될 수 있다.

지금부터 수도권에서 해야 할 일은 무리한 양적 성장과 난개발을 막을 수 있도록 개발 가능 지역과 비개발지를 판별하고, 개발 가능 지역을 단계별로 개발할 수 있는 실천적 도시 관리전략과 제도적 수단을 마련하는 것이다.

장기적인 정책목표를 지닌 수도권 시책이 단견적 시대 논리에 좌우되어서는 안 된다. 지금까지 수도권 정책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것은 정부정책이 정치논리에 휘말려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한 데도 원인이 있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지금 현 시점에서 수도권 규제완화는 상생이 아닌 공멸이라는 인식을 명심해야 한다. 전국의 각 지역이 각각의 개성에 맞춰 살맛나고 자생력이 확보될 때 까지 수도권 규제완화는 유보돼야 한다.

[김용웅, 대전일보 2005년 12월 14일자]

21세기 문화가 지역경쟁력이다

자연에 순응하기만 하던 인류가 자연과의 종속관계에서 벗어나 자신의 삶에 사고를 도입하여 꾸려가기 시작하면서부터 문화(culture)는 생겨났다. 문화는 인류가 여유로 와진 삶의 방식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면서 규칙적인 생활 패턴을 창출해 내고, 삶의 의지와 성취에 대한 기쁨을 소리나 형상으로 표현하는 과정과 결과물로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발전시키는 역할을 해 왔다. 우리의 조상들이 이룬 문화적 유산을 21세기를 사는 우리는 풍요로운 미래를 이끄는 키워드로 삼고 자신만의 문화 재발견과 모습 갖추기는 데 힘쓰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귀결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같은 문화에 대한 관심은 산업발전의 패러다임이 변하고 세계화로 인하여 지역의 중요성이 증대되면서 더욱 커지고 있다. 지금은 문화를 산업과 경제발전에 접목시키려는 노력까지 전개되고 있다. 이 같은 문화에 대한 인식과 관심은 전통적인 산업화 전략 패러다임 속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현상이다. 그동안 국가나 지역발전은 산업과 경제의 성장을 의미했기 때문에 국가정책의 우선순위는 산업생산의 확대와 경제적 효율성을 높이는데 치중했다. 이 같은

산업성장 패러다임 하에서는 문화란 여유 있고 한가로운 계층이 향유하는 소비부문의 하나로 치부돼 왔다. 그러나 대량생산의 산업화 패러다임이 붕괴하고 정보와 지식기반경제가 대두되면서 경제와 산업발전에 있어 문화에 숨겨진 내재적 가치가 새로이 발견되면서 문화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

첫째, 문화의 상품화를 들 수 있다. 예술과 공연으로서 문화뿐만 아니라 지역의 독특한 생활전통과 생산방식, 관습과 행태까지도 상품으로 포장하여 진열대에 올려놓는 시대가 됐다. 이제 문화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산업으로서 각광을 받고 있다. 이미 2004년 현재 우리나라 문화산업 국내매출 규모는 49조원, 해외수출은 7억불에 달하고 2010년에는 국내매출은 두 배가 넘는 94조원, 해외수출은 10배에 가까운 60억불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문화·관광·레저산업을 전략산업 화하여 집중적인 육성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2004년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된 문화·관광산업의 규모는 전체 지역개발신규투자 20조원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다.

둘째, 문화야말로 지역정체성을 확립하고 지역의 브랜드가치를 높이는 핵심적 결정요인이다. 후기 산업사회에 도달하면서 획일화된 상품과 지역 이미지에 싫증이 난 대중은 보다 개성적이고 원류적인 본질을 찾게 되었다. 사람 사는 온기가 느껴지는 감성적 차별성은 이러한 대중의 욕구(need)를 충족 시켜주기에 충분하다. 지역의 전통과 생활과 예술을 아우르는 문화야말로 지역의 정체성을 부각시키고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최고의 바탕이 될 수 있다. 이 같

은 차원에서 문화는 지역의 관광여가 수요를 촉진하고, 다양한 지역산물에 대한 인식도와 경쟁력을 높이는 무형의 자산이 될 수 있다. 부존자원이 척박한 낙후지역이 다양한 공연 및 예술품전시장과 문화 이벤트를 통하여 지역의 경제적 활력과 브랜드가치를 높인 사례는 우리에게 좋은 교훈이 된다.

셋째, 지역의 문화 활동의 진흥과 참여기회 확대는 첨단기술 및 지식산업을 육성하는 새로운 인프라의 역할을 한다. 첨단기술과 지식산업을 종사자들은 주거지 선택에 있어 경제적 요인에만 얽매이기 보다는 문화적 삶의 질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 산업화시대에는 일자리가 있는 곳으로 사람이 모여들었으나 지식산업사회에서는 전문 인력이 집중된 곳으로 기업 즉 일자리가 모여드는 경향이 있다. 이제 지역 경쟁력은 전문지식과 기술을 보유한 엘리트 계층을 얼마만큼 보유하고느냐에 의하여 결정된다. 선진 지역들이 앞 다투어 쾌적한 자연 및 주거환경의 마련과 문화 인프라 구축에 치중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현재 세계적인 지역혁신의 허브는 예외 없이 문화적 활력이 넘치는 도시와 지역에 형성되어 있음도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적 삶의 방식을 지닌 충남은 무궁한 문화자원의 보고라고 할 수 있다. 충남지역이 지닌 잠재적 문화자원을 발굴하고 특색 있는 문화 인프라를 구축하여 지역의 경쟁력을 한 차원 높이는데 우리 모두의 지혜를 모아 나갔으면 한다.

[김용웅, 열린충남 2006년 1월호 통권33호]

행정도시 건설 주변정비와 병행되어야

새해 들어서면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이 탄력을 받게 됐다. 그동안 한시적 성격을 지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단'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으로 승격되었고, 행정도시 건설현장인 연기군 금남면 대평리에 청사까지 마련하여 본격적인 업무를 추진하게 됐다. 행정도시 건설을 위해서는 이미 지난해에 도시개념 아이디어 국제공모를 실시하여 5개 당선작이 발표됐고 이를 바탕으로 국내연구진이 현재 행정도시 건설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행정도시 건설을 위한 기본계획과 실시계획 수립이 올해 안에 완료되면 내년 하반기부터는 부지조성공사가 착수된다. 2008년 청사 건축이 시작되고 2012년부터는 정부부처의 단계적 이전과 주민 입주개시된다. 행정도시 건설 일정이 순조로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예정지역 내 원활한 토지 및 주민이주보상이 이루어지고, 2007년 이후에도 예산확보와 행정적 지원 조치가 차질 없이 마련돼야 한다.

그러나 더 중요한 과제는 도시 건설이후에 행정도시가 자족성과

경쟁력을 지닌 도시로 성장하여 수도권 집중을 억제하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국가중추도시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문제는 행정도시 하나만 건설해서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행정도시가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주변도시가 하나의 통합도시권으로 발전해야 한다.

첫째, 행정도시는 일시적으로 인구 30만~50만 명의 자족도시로 건설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기간 동안 주변도시와의 기능적 보완이 필요하다. 행정도시 건설 초기에는 상당기간동안 새로이 입주하는 행정기관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은 물론 도시민들의 서비스 수요의 충족에도 어려움이 예상된다. 도시건설 초기 자족성의 부족을 방지하는 경우 원활한 도시성장을 가로막는 원인이 될 수 있다. 둘째, 행정도시는 그 자체만으로는 균형발전을 선도하고 중심적 행정기능을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비록 행정도시가 계획대로 인구 30-50만 명의 자족도시로 성장한다 하더라도 수도권의 집중을 차단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그동안 많은 전문가들이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중심으로 광역적 네트워크 도시군(群)을 형성할 것을 주장해 왔다. 행정도시는 네트워크 도시기반을 바탕으로 보다 효율적인 국가중심기능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행정도시가 세계화시대의 국제적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대도시권으로서 일정한 규모의 경제와 집적경제기반을 갖출 필요가 있다.

행정도시는 단순히 수도권 집중완화를 위한 분산기능의 수용도시

역할만을 수행해서는 안 된다. 21세기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공간구조를 형성하는 선도적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행정도시와 주변도시 간 기능적 보완과 연계성을 갖춘 네트워크 도시형성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상당수의 주변도시의 물적 기반과 기능이 취약하고 낙후되어 있어 세계적 수준의 모범도시인 행정도시와 수평적 관계 속에서 상호보완체계를 형성하는 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지금부터 가장 시급한 과제의 하나는 행정도시의 건설과 함께 주변도시정비를 병행 추진하는 체제를 갖추는 일이다. 행정도시 주변도시의 정비는 지방자치단체의 개별적인 노력에만 의존할 수 없다. 새로운 국토구조의 형성이라는 큰 틀 속에서 행정도시 건설 사업의 일환으로 주변도시 정비 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 행정도시 건설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보다 긴밀한 협력과 제휴 노력이 확대됐으면 한다.

[김용웅, 중도일보 2006년 1월 2일자]

시·도 폐지안다고 지역감정 없어지나

해묵은 지방행정체제 개편 논쟁이 재연되고 있다. 이번에는 여야 정치권이 나서서 '지방행정체제개편 기본법'을 제정해 2010년까지 시·도를 폐지하고 기초자치단체를 60~70개로 통합한다는 구체적 내용까지 제시하고 있다.

그동안 다른 정권하에서도 여러 차례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필요성이나 대안에 대한 논의가 제기되기는 했으나 그때마다 사회적으로 공론화되지 못하고 슬그머니 사라졌기 때문에 이번에도 어떤 결말이 날지 분명치 않다.

우리나라 지방행정체제의 기본 골격은 110년 전 농경사회의 생활 문화와 정주 패턴에 바탕을 두고 만들어져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시·군 경계는 교통통신이 발달한 도시화 시대의 생활여건과 행정수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필요성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및 학계가 민감한 반

응을 보이는 데는 그만큼 충분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첫째, 현재 논의된 대로 시·도가 폐지되고 일방적인 기준에 의하여 기초자치구역이 통합되면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에 역행하는 결과가 초래된다는 점이다.

둘째, 지방행정체제 개편 논의가 사회적 공론화 과정과 공감대 형성 없이 일부 정치집단에 의하여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이다. 지방행정체제의 문제를 단순히 행정조직의 개편이나 개혁차원에서 다루려 해서는 안 된다. 지역의 역사와 문화 및 정체성과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셋째, 지방행정체제의 개편은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소극적 정책 목표 실현수단으로 편협하게 활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지역감정과 지방행정계층 간 기능중복은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임에는 분명하다. 그러나 시·도를 폐지한다고 해서 지역감정 해소나 지방행정의 효율화를 기대할 수 없다.

만약, 시·도가 폐지되면 오히려 소지역주의가 부활하여 더 많은 지역갈등과 분쟁을 초래할 수 있고, 광역행정수요에 대한 대응을 위해 새로운 형태의 광역행정조직이나 기구가 난립하게 되어 현재보다 더 심각한 낭비와 비효율을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21세기 세계경제는 고유한 발전 잠재력과 경쟁력을 지닌 지역에 의하여 주도되고 있다. 세계의 모든 나라가 앞 다투어 지역의 자율적인 역량과 경쟁력을 갖춘 지역경제권 육성에 진력하는 이유가 여

기에 있다. 이 같은 여건 속에서 지속적인 국가발전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시·도의 폐지보다는 현재의 광역자치단체의 기능과 역량을 키우는 데 치중해야 한다.

광역자치단체의 기능 강화를 위해서는 그동안 인위적으로 분리되었던 광역시와 도(道)의 통합을 통하여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초광역적 경제권을 형성하고 지역경제와 산업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제도적 역량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지방행정체계 개편 논의가 또 다른 소모적인 논쟁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

[김용웅, 조선일보 2006년 2월 22일자]

지방행정 체계개편 논의 종단을

최근 여야 정치권이 광역시·도를 폐지하고, 234개에 달하는 기초자치단체를 60~70개 수준으로 통폐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지방행정체계 개편안을 제시,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지방행정체계 개편은 그간 간헐적으로 논의되기는 했으나 아직까지 국민적 합의 기반을 확보하지 못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지방행정체계 개편안은 정치적 의도만 배제한다면 나름대로 일리가 있다.

광역과 기초자치단체간 기능적 중복이 심해 낭비와 갈등을 유발하고 있고, 기초지방자치단체는 행정구역이 세분화돼 투자 중복과 개발 경합은 물론 동일 생활권 내 공동의 문제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및 학계 등에서 한 목소리로 지방행정체계 개편안에 대해 강한 불만과 비판을 제기하는 데는 그 만한 이유가 있다.

가장 큰 불만은 개편 작업이 정치적 의도로 추진된다는 점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무리한 광역시·도 폐지 주장이다. 광역시·도 폐지는 지역감정 해소와 광역·기초자치단체간 기능 중첩으로 인한 낭비와 비효율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그 말을 그대로 믿기에는 설득력이 부족하다.

지역감정은 정치적 이해대립과 지역차별의 문제이고 지방행정계층간 기능 중첩과 낭비와 비효율의 문제는 광역과 기초자치단체간 사무 배분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도시 기능의 광역화 추세 속에서 광역시·도의 폐지는 중앙정부나 정치권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통제와 간섭은 강화할 수 있으나 행정의 낭비나 비효율을 제거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오히려 새로운 광역 행정기구와 조직이 난립되는 현상을 초래할 소지가 있다. 지방행정체제개편이 행정편의주의적 시각에서만 논의되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지방행정체제는 국가사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행정조직의 하나 이기는 하나 지역이란 고유한 역사와 문화적 전통과 정체성을 지닌 개성적 주체로서의 특성을 지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행정의 효율성의 차원에서만 행정구역의 통폐합을 논의하는 것은 지역의 정체성과 개성적 가치를 잃게

할 위험성이 있다.

지방행정구역의 획일적 통폐합은 지역주민의 다양한 열망의 실현과 창의적이고 개성적인 지역발전의 가능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

지역특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획일적인 행정구역 통폐합 방안을 강요하기 보다는 지역주민의 주체적 의지와 판단을 존중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민주적인 추진방식에 대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밖에 현재의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일방적이고 권위주의적인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지역주민에게는 생업은 물론 일상적 주거생활과 직결된 정책 결정임에도 지방행정체제의 개편 방안이 중앙 정치권 등 일부 집단의 주도로 만들어지고 있어 누구를 위한 지방행정구역 개편인지 불분명하게 됐다. 현재 논의 중인 지방행정구역 개편안은 주민의 직접적인 참여와 의사를 대변하는 기초자치단체의 기능을 약화시키고 주민 편의 증진에도 역행하는 내용까지 담고 있다.

끝으로 현재 지방행정개편 논의는 국내 정치적 시각에서만 다뤄져 왔다는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 세계화시대 국가발전은 지역의 활력과 경쟁력에 의해 좌우된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경쟁력을 갖춘 지역 경제권을 육성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다.

지역 경제권이 세계적 수준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인구 규모가 500만 명 정도는 되어야 한다.

많은 나라들이 앞 다투어 지역의 산업과 경제발전을 선도할 초광역적 행정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우리나라도 이제부터 시·도 폐지와 같은 세계적 조류에 역행하는 비생산적인 지방행정체계 개편 논의를 중단하고 세계화시대에 걸맞는 지방행정시스템을 만들어 나가는데 힘을 모아야 한다.

[김용웅, 충청투데이 2006년 2월 27일자]

대수도론을 경계한다

최근 수도권 시·도지사 당선자들이 대수도론(大首都論)을 주장하고 수도권협의회구성에 나서자, 비수도권 광역자치단체는 '비(非)수도권 총 연대' 구성을 추진하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간에 갈등과 대결이 증폭되고 있다. 대수도론은 명분상 지역 간 연대와 협력을 강화하여 도시의 현안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고 지역발전의 시너지 효과를 높이는 데 있다. 대도시권의 문제는 한 지역의 노력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다. 행정구역의 분리로 생활 현안에 대한 시책과 사업마저 지역 간 이해의 대립으로 제대로 추진되지 못해온 점을 감안하면 수도권 문제를 행정구역을 초월하여 통합적으로 해결하려는 시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수도론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비수도권 지역의 극심한 우려와 반발을 불러일으키는 이유는 무엇인가? 첫째, 대수도론은 지역 간 연대와 협력을 통한 지역 간 상생과 공동번영을 추구한다는 명분과는 달리 이미 지배적 지위를 누리고 있는 수도권의 발전만을 추구한다는 점이다. 수도권은 국토면적의 12%에도 미치지 못하는 면적에 48%에 해당하는 인구나 60%에 가

까운 생산기능, 80%를 상회하는 경제 사회 문화의 증추기능이 집중되어 있고, 나머지 비수도권 지역은 자생적 발전 기반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다. 이 같은 여건 속에서 수도권만의 성장을 강조하는 경우 국토의 불균형 구조가 더욱 확대되기 때문에 국가경쟁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

둘째, 대수도론은 국가균형발전시책에 혼선을 초래하고 비수도권 지역의 쇠퇴와 자생적 발전기반의 위축을 초래한다. 국가균형발전정책의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정부정책이 일관되게 추진된다는 믿음을 주어야 한다. 대수도론으로 촉발된 수도권규제철폐에 대한 논란은 정부정책의 일관성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잃게 하여 기업의 지방이전이나 지방에 입주한 기업의 추가 투자를 유예하도록 한다.

끝으로 대수도론은 장기적으로 수도권의 경쟁력을 약화시켜 국가의 지속적 성장마저 어렵게 한다. 수도권에는 지금도 난개발로 인한 과밀·혼잡이 계속되고 있다. 토지 이용과 개발에 대한 계획적 통제수단이 미흡하기 때문이다. 수도권 규제가 일방적으로 철폐되면 투자의 확대와 생산 활동이 증대되어 양적 성장은 촉진될 것이다. 현재의 난개발 여건을 방치한 채 양적 성장을 추구하면 과밀 혼잡의 피해는 견잡을 수 없이 커지게 된다. 수도권의 과밀 혼잡비용은 연간 12조원 정도에 달하고 환경개선비용도 연간 4조원으로 계속 증대되고, 부동산 가격 앙등으로 고비용저생산의 구조가 고착되고 있다. 특히 도시와 환경수준이 낮아 수도권은 서구의 도시뿐만 아니라 동경, 싱가포르 및 홍콩 등 동북아 국제도시와도 경쟁이

어려운 실정이다.

대수도론으로 촉발된 국론분열과 지역 갈등은 더는 방치돼서는 안 된다. 결자해지(結者解之)의 입장에서 대수도론은 철회돼야 마땅하다. 수도권 의 과제는 분명하다. 난개발을 동반한 양적 성장구도에서 벗어나 도시기능과 삶의 질적 기반을 혁신하여 국제적인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다. 대수도론은 국가균형발전은 물론 수도권의 발전에도 이익이 되지 않는 근시안적 대응임을 되도록 빨리 깨달았으면 한다.

[김용웅, 조선일보 2006년 6월 28일자]

道 문화콘텐츠산업 잠재력과 과제

세계시장 1조3천억불

국가대표산업 육성나산업화시대에는 도로, 항만, 상하수도, 산업단지 및 도시기반이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역할을 했다. 그러나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지식기반경제시대에서는 도시의 시설기반보다 삶의 질을 풍요롭게 하고 지역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무형의 문화산업이 지역발전의 새로운 동인으로 등장하고 있다. 이 중에서도 인간의 감성, 창의력, 상상력을 원천으로 하는 영화, 음악, 게임, 애니메이션, 캐릭터 및 방송 등 문화콘텐츠산업은 급격한 성장추이를 보이고 있다.

2005년 현재 문화콘텐츠산업의 세계시장규모는 이미 1조 3,400억 달러에 이르렀고 향후 매년 7.3%의 성장을 유지해 2009년 세계시장규모는 1조 7,78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화 콘텐츠산업의 세계시장규모는 반도체, 메모리, 디스플레이 및 휴대폰 등 IT산업 시장규모를 1.5배나 상회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문화콘텐츠산업을 향후 5~10년간 한국경제를 이끌 대표산업중 하나로 키우기 위한 전략을 추진 중에 있다. 2005년 49조원에 달하는 문화콘텐츠산업의 국내시장규모를 2010년까지 94조원으로 키우고 세계시장에 대한 점유율도 현재의 1.5%수준에서 4.0%수준으로 높이는 것이 국가정책목표다. 문화콘텐츠산업의 시장 지향적 입지패턴으로 이 산업은 그동안 대부분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돼 충남지역의 문화콘텐츠산업기반은 취약하다. 그러나 충남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문화콘텐츠산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유리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우선 충남지역은 서울과 수도권에 인접해 있어 소비시장과 근접해 있으며, 수도권의 문화콘텐츠산업과 연계 및 협력이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또 역사와 전통문화자원 등 문화콘텐츠개발을 위한 풍부한 소재를 지니고 있으며, 문화콘텐츠산업의 토대가 되는 기술적 기반과 인적 자원도 보유하고 있다. 인근 대덕연구단지과 천안아산의 전자정보 분야 산업기반은 이 산업의 성장을 위한 기술적, 산업적 기반을 제공하고 있으며, 더욱 중요한 것은 문화콘텐츠산업이라는 지식기반산업육성의 필수조건인 풍부한 인적 자원이 양성되고 있다. 충남지역에는 22개 대학 내 60여개 문화콘텐츠 관련학과가 있어 전국 1위로 인구대비 관련 전문 인력이 배출되고 있다. 충남은 이미 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을 설립하는 등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충남의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우선 단계적 추진이 필요하다. 초기에는 대학과 기업에서 특화된 부문부터 단계적으로 육

성하되, 선도적인 문화콘텐츠기업을 유치하고 대학중심의 소규모 문화산업클러스터 형성을 병행하는 것도 한 가지 방안이 될 수 있다. 또 문화콘텐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산-관-학-지역사회 간 효율적이고 유기적인 참여와 협력체계가 요구된다. 무한 경쟁시대에는 개인이나 일부집단의 노력만으로는 경쟁력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문화콘텐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지역사회의 인식과 관심이다. 지역사회의 성원과 관심이 없는 문화콘텐츠산업은 사상누각(砂上樓閣)에 불과함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김용웅, 중도일보 2006년 7월 17일자]

민선 4기에 바란다

5월의 치열했던 지방선거가 끝나고 민선 4기 지방자치 시대가 열렸다. 의욕에 찬 지방수장과 의회가 저마다 지역발전의 새 가치를 달고 출범하는 소리가 요란하다.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마지막 조건이라 한다. 분권과 참여, 자주와 시민 주도의 국가경영과 사회 관리의 새 패러다임이라 한다. 이제 네 번째 민선지방정부의 출현으로 지방자치가 우리 일상 속에 어느 정도 익숙한 제도로 자리 잡게 된 것 같다. 그러나 역사적 경험이 일천한 우리가 지방자치의 본질을 올바르게 살리려면 이제부터 풀어야 할 제도적, 실천적 과제가 한 둘이 아님은 누구나 다 알고 있다.

지방자치의 본연의 가치는 지방 자주성의 신장이다. 삶이 구체화되는 물리적 용기인 지방과 이 속의 사회, 경제, 문화적 활동의 내실을 다지는 일이다. 이렇게 볼 때 지방자치가 성숙하려면 지방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수적이다. 지방은 우선 경제적 관점에서 보면 국제경쟁시대에 국가경제 성장을 돕는 최적의 경쟁단위이다. 정치적으로 보면 누대의 중앙집권이 낳은 거대한 관료조직과 획일주의를 줄일 수 있는 민주적 참여공간이다. 문화적으로 보면 삶의 질

을 풍요롭게 만드는 다양한 향토문화의 산실이면서 정신의 구도이다. 사회적으로 보면 제도를 배우는 학습공간이고 삶의 의미를 찾는 생활공간이다. 통치영역으로 본다면 독제를 견제하고 공공경영의 효율과 민주적 참여를 높이는 통치 관리적 단위이다.

이렇게 지방은 여러 의미를 지닌다. 따라서 지방자치는 지방을 단순한 행정학적 관점에서 정부기관의 형태와 권한 분담이나 행·재정적 제도개선의 대상으로 보는 차원을 넘어 정치민주화와 삶의 질적 향상을 보장하는 진정한 계기를 마련하고 자율적 지역사회가 뿌리를 내리게 하는 일상적인 주민의 공동체 활동이라는 점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 다원화된 현대생활 속에서 주민이 중앙의 통제로부터 벗어나고 탈 규제적 문화의 행태적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최적의 통로가 지방자치라는 말이다. 이 통로를 통하여 문화 행태적 변화가 행정구조나 기능의 변화와 조화롭게 연계될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전반적 사회, 경제 여건의 변화가 유도될 수가 있다. 이렇게 지방과 지방자치는 우리 시대 사회변화의 중심 세력이고 도구로 끌어 쓸 수 있는 것이다.

1990년대 초 개정지방자치법이 발효될 때만 하여도 이 나라에서 지방자치가 올바르게 착근할 것인가에 대하여 회의적인 시각이 있었다. 능률지향적인 중앙집권체제에 대한 과신이 팽배했고 당시 국민 의식 수준과 정치적 풍토의 미성숙성을 들어 지방자치의 전면적 시행을 시기상조라고 했다. 자칫 국가에너지를 분산시키고 지역적 낭비를 초래시키거나 관념적 민주주의의 장식품이 될 수 있을 런지는 몰라도 지방자치가 국가성장에는 득보다 실이 클 것이라고도 했다.

지금 이러한 주장을 펴는 사람은 없다. 혹시라도 있다면 그 사람은 시대착오자로 몰릴 것이다.

그 만큼 1990년대 이후 이 나라 지방자치는 짧은 기간이지만 제도적 진화와 주민학습의 진전이 빨랐다. 그 동안 쌓은 경험은 선진 국가가 이 분야에서 수대 혹은 수세기에 걸쳐 이룬 성과를 축약시켜 놓은 것에 필적할만하다. 이 경험은 세계주의, 정보화, 지식중심의 사회변화의 조류와 맞물려 지방자치를 보는 시각을 상당히 바꾸어 놓았다. 지방자치를 단순히 행정적 제도나 정치 민주화의 연장선상을 넘어 사회발전을 주도하는 힘의 균형관계가 재설정되는 과정으로 보게끔 만들었다. 실제로 중앙과 지방정부간에 새로운 역학이 작동하고 양자 간에 위상과 역할 조정이 진행되는 가운데 지방이 종래의 변경적 지위에서 국가경영의 중심으로 부상하는 증좌가 있다. 지방이 사회발전의 주도적 힘으로 등장하는 전경이 보인다.

그러면서 또 한편에는 지방민주주의의 위기로 볼 수 있는 각종 파행과 병폐가 이런 희망적인 진전과 대조를 이루면서 우리를 우울하게 한다. 이 나라 지방자치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파행과 병폐 중에는 부패, 행정낭비와 비효율이 어디에나 있다. 정책미숙, 과잉의욕과 여기에서 파생되는 시행착오가 크다. 지방이기주의와 지역감정의 망국적 행태들이 난무하고 지방토호, 이권세력의 발호와 득세도 꿈틀거린다. 관민유착 뿐 아니라 정권투쟁의 일선이 된 지방 정치오염도 심각하다. 맞긴 권한을 바로 써야 할 단체장들과 의원과 지방공직자들이 앞 다투어 저지르는 비리와 불법, 매관, 오직 사건들은 지방자치에 건 우리들의 순수한 열망과 기대에 찬물을 끼

없고 있다.

민선 4기 지방자치가 진 우선적 책무는 지방자치의 시대적 역할을 거스르는 역기능을 극복하고 지방자치의 본연의 가치에 다가 가는 일이다. 여기서 중앙정부가 국가의 기본제도로서 지방자치를 지키고 지방분권을 앞당기는 행·재정적 지원과 관련 제도의 개선에 박차를 가해야 함은 말 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무게의 추는 자방에 있다. 국가의 역할이 축소되고 기능적으로 분담되는 시대적 조류는 지방자치를 실질적으로 진전시키는 호기를 준다. 민선 4기는 이 여건을 최대도 활용해야 한다. 우선적으로 자주적 의사결정력과 지역개발을 지원할 독자적인 자원과 수단을 하루 바삐 갖출 것을 주문한다. 이어 민영화, 규제완화, 조직개편, 감량화의 틀 속에서 효율적인 정부를 구축하고 행정 혁신과 체제 변화를 유도하도록 노력해 줄 것을 바란다. 일상적으로는 급부와 봉사 작용이 요체인 지방행정의 특성을 살려 고객중심주의, 즉 행정서비스를 상품으로 생각하는 시장 중심적 사고를 신장시켜 줄 것도 기대한다.

지방은 이제 다양한 국가의 사회, 경제적 여건과 운용패턴이 일상생활 속에서 재생산되는 곳으로 자리 잡았다. 지방이 사회발전을 담아내는 공간적 범주로서 주어진 시대적 역할을 충실하게 소화해 내야 국가발전과 사회진보가 지속된다. 민선 4기는 지방이 이 같은 역할을 소화해 내고 삶의 질과 사회경영의 근본을 높이는 협동적 활동으로서 지방자치의 요체를 실증해 주기 바란다.

[박수영, 열린충남 2006년 7월호 통권35호]

수도권 난개발을 막으려면

대수도론 논쟁의 여진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비수도권 지방자치 단체의 거친 항의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규제 철폐를 겨냥한 대수도론은 양보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주장만을 내세운 결과다. 국가 간 경쟁이 심화되는 세계화 시대에 수도권과 지방이 한정된 국가자원을 가지고 소모적인 경쟁을 하는 것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못한다. 이제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함께 사는 해법을 찾아야 한다.

수도권 규제 시책에 대한 상생의 해법이 가능하기 위해선 수도권의 도시 확산과 난개발을 방지하고, 지방은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과 지배력의 피해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한다. 서구의 대도시권은 난개발로 인한 환경훼손과 과밀·혼잡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초광역적 도시계획 추진 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있다. 이 같은 대도시권 성장관리는 과도한 도시성장 속도를 조절하고 평면적인 도시확산을 방지해 근교 지대의 생태 및 환경자원 훼손 방지와 과밀·혼잡 피해를 줄이는 역할을 한다. 대도시권의 도시 확산과 성장 억제는 대도시권뿐만 아니라 지역 균형 발전에도 기여한다. 대도시권

의 성장관리 시스템 도입을 위해선 기존 지방행정 관행·제도뿐만 아니라 토지이용 및 도시계획, 개발제도 등의 광범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첫째, 수도권을 하나의 도시권으로 묶어 환경보전, 토지이용, 도시개발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초광역 계획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3개 광역자치단체 소속 66개 기초자치단체의 개별계획과 도시개발 체제로는 도시의 평면 확산과 난개발을 막을 수 없다.

둘째, 계획적인 토지이용 및 도시개발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계획적인 토지이용 및 도시개발 체제가 매우 미흡하다. 수많은 개별법에 따라 주거·산업 및 관광단지 등 다양한 형태의 도시개발이 가능하게 되어 있다. 건축허가가 반드시 토지이용 및 도시계획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도 아니다. 이 같은 제도적 결함을 방치하면 대도시권 성장관리는 실효를 거두지 못한다.

셋째, 수도권 내 지방자치단체의 확고한 합의 기반과 효율적인 참여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계획 수립부터 집행 과정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기업, 언론, 시민단체 등 이해집단의 자율적인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지역사회의 참여와 협력은 제도적 장치만 가지고 이뤄지지 않는다. 기존 행정구역 단위 행정관행을 타파하는 동시에 강력한 정치적 리더십 아래 치밀한 실천 프로그램과 효율적인 광역 거버넌스가 구축되어야 한다.

수도권을 하나로 묶어 토지이용과 도시개발을 관리하는 일은 말

과 같이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그동안 신장된 지방의 자치 역량과 정치력을 감안하면 불가능한 일도 아니다. 복잡한 법체계를 지닌 계획적 토지이용 및 도시개발 제도를 마련하는 것도 수도권만을 대상으로 현재의 특별법 체계를 활용하면 생각보다 쉽게 해결할 수 있다. 현실적 어려움만을 이유로 우리의 짐을 다음 세대에 넘겨줘서는 안 된다.

[김용웅, 중앙일보 2006년 8월 22일자]

세계와의 장래

중동이 불타고 있고 유가가 기록적 인상을 보이고 있으며 미국 경제가 침체되고 기후의 온난화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무역협상의 좌초에 흥분할 분위기는 아닌 것 같다. 여하튼 세계화는 중단될 수 없고 이런 상황에서 스위스에서 몇 개국의 경제 관료들이 귀국보따리를 챙겼다고 큰 일이 있겠는가?

상당한 일이 있을 것 같다. 위와 같은 태도가 금번 “도하”라운드 의 좌초의 배경이 될 것이다. 편의와 무관심에서 비롯된 이런 재난이 특별이익 중심 정치가 보편적 선을 무력화시킨 신호가 될 것이다. 5년간의 정체로 보아 가능성이 높는데 이 좌초가 최종적이라면 모든 사람들이 더 가난해질 것이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도하 라운드라는 좁은 영역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좁다는 것이 수천만을 빈곤에서 구출하고 부국들의 파괴적인 농업지원을 축소시키고 수많은 재화와 서비스 시장을 개방하려는 야심을 표현하는데 적당한 형용사라면). 장기적으로 이번 도하라운드를 좌초시킨 다자무역에 대한 코미트먼트의 부족이 전체

적인 무역 체계를 잠식할 것이다.

경험이 많은 사람들은 굳직정하는 사람들로 취급할 것이다. 무역 회담은 언제나 성공 이전에 파탄을 겪게 된다. 우루과이 라운드는 4년에 끝낼 예정이었으나 8년간의 고통스런 협상을 거쳤다. 이번 최초의 원인인 농산물 교역은 언제나 골칫거리였다. 여하튼 범세계적 교섭이 실패되어도 적은 수의 국가군간의 지역협회는 2배 이상 빠르게, 그리고 절반의 혼란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전 무역회담의 수확은 보존되고 있으며 누구도 무역을 약화시켜 중국이나 인도 등이 세계경제에 합류함으로 이루어진 번영을 위협하게 할 생각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경험이 많은 사람들도 새로운 시각에서 보아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번의 실패는 전후 형성된 무역체제에 가장 큰 위협이 되기 때문이다. 이는 통상외교가들이 이 체제가 기초로 하고 있는 컨피던스 트릭(C Confidence Trick)에 패배했음을 뜻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는 도하라운드뿐 아니라 세계무역의 원만한 작동이라는 가치에 대한 가차 없는 무시를 보여주기 때문이다.

자유무역의 득은 수출보다 수입에 있는 것이다. 더 싸고 질 좋은 물품의 수입은 소비자들이 비용에 비해 더 큰 만족을 얻게 하며 또한 경쟁을 통해 국내 생산성을 향상시키게 되는 것이다. 통상외교가들이 주문처럼 읊는 자국 시장 개방은 다른 곳에서 개방에 대한 대가라는 말은 국내 정치를 위한 경제적 년센스다. 그러나 이는 극히 유익한 년센스인 것이 WTO체제에서는 한 무역당사국에 부여된

양허는 곧 자동적으로 모든 당사국에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런 트릭이 세계가 수십 년의 호황을 누리게 도와준 것이다.

도하는 냉혹한 교역에 좀 도덕적 매력을 부여하기 위한 현명한 방법으로 개발 라운드라는 아이디어로 전혀 독창적인 픽션(fiction)을 추가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트릭이 모두 부국들이 자국경제를 부흥시키는 대신 외국을 위해 자국의 이익을 희생해야 된다고 믿게 함으로써 역기능을 초래했다.

어느 한나라의 탓이 아니라 많은 참석자들의 잘못이다. 인도는 농업보조금 축소와 관세 인하를 바라면서 농산물과 공산물에 대한 무역장벽 감소에는 동의하지 않았다. EU는 농산물 관세를 인하하려 하지 않았으며, 미국은 과거 라운드에서 활력의 우선이었지만 금번에는 잘못된 협상보다는 무협상이 낫다고 선언하고 그렇게 행동했다. 일방적 무역 자유화의 논리는 오래전 잊혀진 것이다.

이것이 통상외교관들이 지역협정을 더 낳은 방식으로 생각하는지를 설명한다. 이 협정은 훨씬 수월하다. 이 협정은 전에는 희귀한 것이었으나 이제는 모든 WTO회원국이 최소한 하나는 가지고 있는 실정이다.

좁은 의미로는 이러한 협상의 장점이 협상이 무역을 창출하는지 아니면 전환시키는지에 달려있다. 그러나 그의 광범한 효과는 파괴적이다. 양자 협상은 복잡하며 빈곤국에 해로울 가능성이 있다. 다자협상에서는 빈국이 강국의 협상에서 강국에 업혀갈 수 있다. 양

자협상에서는 각자가 따로 논다. 양자협정이 늘면, 그만큼 다자협정은 어려워진다.

도하의 실패는 퇴보가 아니고 전진의 실패인가? 아마 그렇지 않을 것이다. 사실 세계무역의 바다는 잠잠하다. 무역은 세계 GDP보다 훨씬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높은 상품가격과 견실한 성장은 보호주의 주장이 약화되었음을 뜻한다. 비록 체제가 하루에 분해되지는 않겠지만 해가 지나면서 점차 녹슬게 될 것이다.

내년이면 미 의회가 대통령에 부여한 통상교섭권이 종료된다. 이로 인해 도하를 다시 살리는 것이 어려워질 것이다. 내년이면 미국의 농업법 제정으로 농산물 교역관련 협상은 어려워질 것이다. 금번 확인된 악의가 경기 하강으로 구, 미에게 제조업분야 실직이 늘어나면 더욱 확산될 것이다. 서방국가들의 지적 소유권 해적행위에 대한 불평이 개도국과의 관계에서 첨예화될 수 있다.

더 나쁜 것은 WTO의 중요기능인 무역 분쟁 관련 절차가 작동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실패 후 다음에 WTO가 미국에 불리한 판정을 내릴 경우에 의회는 그런 결정을 젊잖게 수용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점을 모두 합쳐보면 금번 라운드뿐 아니라 전 무역체제가 좌초될 수 있다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도하라운드는 2001년 9.11 테러 이후 번영하고 단합된 세계가 회교 테러리스트를 제압할 수 있음을 보이기 위해 시작되었다. 이번 주 다시 그들이 정지시킬 힘이 없는 폭력사태에 직면하여 정치 지

도자들은 세계를 더 좋게 만들려는 마음을 품었겠지만, 그들은 실패하였다.

[성정경, 열린충남 2006년 10월호 통권36호]

충남지역 통합생태네트워크 구축 방향과 과제

자연생태계는 그 구성요소 모두가 서로 간 먹이그물을 통하여 상호 연결되어 있고, 이 연결성을 통하여 물질순환(nutrient cycling)과 에너지흐름(energy flow)이라는 자연의 기능을 수행한다. 훼손된 자연은 바로 물질순환의 속도가 정상보다 빠르거나 늦어지고, 에너지흐름의 균형이 맞지 않고 어긋나는 특성을 갖는다. 이와 같이 생태계의 기능이 원활하지 못한 것은 바로 사람들에 의하여 만들어지는 인위적인 환경요인의 영향이 현저하게 커서, 자연의 수용 능력(natural carrying capacity)을 초과하였기 때문에 일어나는 필연적인 현상이다. 또한 자연의 비정상적인 활동은 최근에 빈번해진 기상재해나 이로 인한 새로운 질병의 확산 등과 같은 전 인류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로 직결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근본적인 길은 자연을 자연답게 보전하는 것이다. 그러나 여러 가지 개발로 인하여 현재 남아 있는 자연다운 자연은 거의 존재하지 않고, 그나마 남아 있는 것조차 조각조각 분절화(fragmentation) 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태로는 자연생태의 기능을 회복하기는 불가능하다. 현재 남아 있는 자

연을 살리고 서로 연결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보다 나은 자연을 유지하는 전략인 통합생태네트워크 구축이 절실히 요구된다. 따라서 체계적으로 생태계를 보전하고, 효과적인 통합생태네트워크를 만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판단한다.

첫째, 국가생태축 내에서 충남의 위상을 고려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의 3대 핵심 생태축으로 백두대간, 비무장지대, 도서연안이 있는데 충남권은 도서연안권에 태안, 서산, 보령, 서천 등이 포함되며, 국토환경계획상의 대권역 단위로 5대 광역생태축 - 한강·수도권, 금강·충청권, 영산강·호남권, 낙동강·영남권, 태백·강원권 - 에서는 금강·충청권에 속한다. 이러한 축의 설정은 한반도의 자연지리적인 특성과 자연환경의 특성이 총체적으로 반영되어 있는 것이므로, 그 안에 속해 있는 충남은 이를 반영하여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둘째, 생태축의 기능과 중요도에 따라 충남 내의 핵심 생태축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생태네트워크를 할 때 중심이 되는 생태축이 있게 마련인데 이를 위해서는 충남을 굵게 나누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충남의 지리적인 특성으로 볼 때 수심이 얕고 조차가 커서 나타나는 넓은 갯벌(가로림만 등)과 해안사빈(만리포와 대천 등), 사구(신두리, 삼봉사구 등)가 발달한 서해안생태축(I), 차령산맥(성거산 579m, 봉수산 534m, 성주산 680m, 오서산 791m 등)과 노령산맥(서대산 904m, 대둔산 878m, 선치봉 759m, 계룡산 833m 등)과 이에서 발원하여 흐

르는 금강과 삼교천 등으로 이루어진 내륙생태계권(II)으로 크게 구별하여 연결할 수 있다. 이러한 주요 생태축을 기준으로 하고 주변의 작은 생태축(낮은 산지나 금강의 지류 등)을 점진적으로 통합하여 관리하는 것이 자연생태계의 관리상 합리적이다. 또한 각 생태축이 상징하는 핵심종(keystone species) 혹은 깃대종을 선정하여 그 종들에 관한 생태정보를 축적하고 관리하는 것도 시급하다.

셋째, 충남의 생태에 관한 보다 충실한 정보가 필요하다.

효율적인 생태네트워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그 지역에 대한 생태적인 정보가 풍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서 충남지방에 대한 자연생태정보는 미비하다. 그나마 체계적으로 조사된 환경부의 제1차 녹지자연도 조사에 의하면 충남의 양호한 자연(녹지자연도 8등급)은 공주와, 서산, 연기에 일부가 남아 있고, 제 2차 전국자연환경조사 결과에 의하면 자연이 우수한 보전지역은 충청남도 면적의 4.75%(411.9km²)에 불과한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수치)는 국가의 전체적인 조사 척도(6.25ha 이상)로 볼 때의 결과로 실제적인 충남도차원의 자연환경의 질적인 상황은 축소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많은 자연지역이 도로나 주택건설 등의 사업으로 개발되어 있지만 6.25ha 이하의 작은 규모의 양호한 자연(이름테면 마을전통 숲)도 많이 존재한다. 그러므로 충남도 차원의 보다 정밀하고 세밀한 자연환경의 정보를 얻기 위한 조사, 연구와 노력이 필요하다.

넷째, 생태네트워크는 지역주민에게 참여와 행동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생태네트워크는 지역주민에게 생태 정보를 알려주고, 또한 이를 바탕으로 그들이 자발적으로 생태환경을 살리는 행동에 나서도록 목표지향이 된다면 그 효과는 더욱 커진다. 실제로 대부분의 일반 주민들은 자신이 살고 있는 주변의 산, 하천, 해안의 가치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생태네트워크에 실릴 정보에는 지역의 환경지리정보와 함께 동식물의 분포 등이 담긴 생태 특성을 포함하고, 이를 쉽게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고안되어야 한다.

그리고 많은 세세한 자연정보는 결국 그 지역의 문화와 연결되어 존재하고 가치가 부여되므로, 지역주민의 생태와 그 평가에 대한 참여가 필요하다. 이러한 생태정보는 각 지역 학교에서 환경교육 학습 자료나 수업자료로 활용되어 학생들의 자연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교육적인 효과도 기대된다.

다섯째, 충청도와 인접한 지역과의 통합구축이 필요하다.

생태네트워크는 지역과 지역을 연결하고 나아가서는 국가적으로 통합된 하나의 생태네트워크가 된다. 이를 위해서는 충청과 인접한 광역자치단체간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즉 다른 지역 자연과의 소통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주변지역에 사는 지역주민과의 생태네트워크에 대한 소통이 필요하다. 충청의 북쪽은 동북부에서는 경기도의 안성, 평택시와 접하고, 서북부에서는 경기만을 건너서 화성, 용진군과 접하고 있으며, 동쪽은 충북의 진천, 청원, 보은, 옥천과 남쪽은 전북의 완주, 익산, 군산에 접하고 있다. 충청 내부네

트위크 구축과 함께 접경지역과의 생태네트워크 통합이 이루어져야 진정한 의미의 생태네트워크가 가능해진다. 이러한 통합 생태네트워크가 형성되면 충남의 자연이 현재보다 훨씬 더 생명감 있는 역동적인 모습으로 태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유영한, 열린충남 2006년 10월호 통권36호]

행정도시의 법적지위 부여, 어떻게 알 것인가?

충청권 최대현안이라 할 수 있는 '행정도시의 법적지위 부여'가 정치적으로 결정된다거나, 특정지역 이익을 정당화해서는 안 될 것이며, 충분한 사전검토와 공개된 토론으로 합당한 논리를 이끌어내 보는 노력이 절실하다. 그런데도 정부 주도로 진행되는 현재의 모습은 그렇지 못한 것 같아 참으로 우려가 크다.

이미 정부는 이 문제를 중앙대 산학협력단에 연구용역을 발주하였고 내년 2월이면 그 결과가 나올 것이며, 이를 토대로 법령제정권을 가진 행자부에 의해 입법추진이 이루어질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행정도시는 참여정부의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입지정책

우선 '행정도시는 정부의 입지정책 일환'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이는 참여정부의 지역균형발전정책의 3대 근간인 '행정도시-혁신도시-기업도시' 중의 중요한 하나라는 점에서도 명확히 확인된다.

문제는 당초 ‘신행정수도→위헌판결→행정도시’로의 이행과정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연장선상에서 일종의 ‘허상·잔상’이 남아 심정적·정서적 차원에서 ‘이미 보통시의 영역을 넘고 있다’는 식의, 그래서 뭔가는 특별한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식의, 다분히 ‘비합리적인 사유체계’가 ‘은근히’ 지배하고 있다는 점이 바로 문제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분명히 말해 보자. 만일 ‘행정특별시 또는 행정특별시’ 같은 방식으로 법적지위를 부여한다면, 또 다시 ‘위헌 시비’를 불러일으켜, 도저히 견잡을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닫게 될 것이며, 따라서 이런 주장은 그 책임 또한 면키 어렵다는 사실을 절대 간과할 수 없다. 그렇다고 ‘광역시’ 역시 도시형성이 이루어지지 않은 가상도시(Virtual City) 상태에서, 광역시라는 법적지위 부여도 현실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며, 특히 정부직할의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지방자치와 분권논리에 명백히 역행하는 처사임은 자명하다.

사실 신도시 건설 초기단계에서 미리 법적지위를 설정해 놓고 추진하는 경우란 아직까지 국내·외 사례에서는 전혀 없으며, 따라서 현 단계에서 보여주는 정부의 태도는 ‘시기상조론’과 ‘졸속결정론’의 비판으로부터 절대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과거 계룡시 승격은 ‘620사업’으로 국방중추 3군 본부의 입지, 이에 따른 강제철거와 이주민 발생, 충청남도계룡출장소 설치·운영, 역대 대통령들의 시 승격 공식 약속에도 불구하고 자치시대에 자치권 부재 및 행정서비스의 사각지대인 계룡신도시는 결국 지방자치

법 개정으로 '계룡시'로 귀결되었다.

정부는 '시기상조론'과 '졸속결정론' 비판에 답할 수 있어야

이처럼 설령 국가적 필요에 의한 것일지라도 그 기반은 지자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자치시대의 요청인 것이다. 과천 정부청사, 대전 3청사는 물론이려니와 과거 정부(건설부)가 주도적으로 개발했던 창원신도시, 그리고 인천광역시 산하 경제자유구역청 등이 왜 지자체 소속인가? 한마디로 법적지위 부여의 골간은 건설주체와 관리주체는 전혀 별개의 것이라는 사실, 오히려 법적지위는 행정수요 즉 주민편의 및 행정서비스, 행정효율성 등과 관련되는 것이지, 건설주체와는 원리상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이다.

더욱이, 연방정부는 자신의 영토가 없기 때문에 미국의 경우 수도를 워싱턴 DC와 같이 직할지를 두고 있으나(제한적 운영) 이는 어디까지나 연방정부 경우에 국한된 것이며, 설령 수도라 할지라도 단일정부체제에서는 지자체인 것이며(우리나라의 서울특별시), 이는 전 세계적으로 유래가 분명히 없는 것이다.

그런즉 논의의 핵심은, 첫째 현 행정도시에 특별한 법적지위를 부여할 근거가 무엇인가? 둘째 정상적인 지방자치행정체제가 될 수 없는 문제점이 무엇인가?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설득력 있는 답을 구하는 것이 타당한 해법일 것이다. 필자는 이 점을 정부 측에 묻고 싶다. 게다가 장항산단 연내착공 촉구 등과 맞물려 '충청권흥대론'과 '충청권발전특별법(안)' 제정 등 복잡한 지역구도 변화 속에서 정부의 합리적인 처사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전제가 잘못되면 그 후속은 당연히 오류가 된다.”라는 과학철학에서 말하는 ‘제3종 오류’(The 3rd Type Error)의 메시지, 그리고 K. 포퍼의 ‘반증가능성’(Falsifiability) 원리에서는 “이론의 예측을 전복하려는 수 없는 시도가 성공하지 못한 결과로 나타난 것이 사실일 때만, 그리하여 그 이론을 지지하는 뚜렷한 증거가 있을 경우에만, 사실은 이론을 확증한다.” (『열린사회의 적들』, 1971)는 경고를 새삼 기억하기를 권고한다.

[최병학, 중도일보 2006년 12월 26일자]

지속가능한 발전과 쌍양산단

2006년에 전 세계적으로 사용된 대표적인 용어가 지속 가능성이 었다. 미국의 영어 사용 감시단체인 글로벌랭귀지모니터(GLM)는 올해의 단어로 '지속가능한(Sustainable)'을 선정했다. 이 단체는 전 세계 영어 사용 현황을 추적, 분석하여 온라인 검색과 회원들의 추천을 통해 그 해에 가장 화제가 된 단어와 문구 등을 뽑아 결과를 발표한다. 선정한 이유가 "과거에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말할 때 주로 사용됐지만 최근에는 인구, 농업, 학문 분야는 물론 결혼 문제에 까지 활용 범위가 크게 확대됐기 때문"이라고 한다.

지속가능성이란 말은 지속가능한 발전과 맥락이 같다. 이 말의 근원은 국제연합(UN)의 환경과 개발에 관한 세계위원회(WCED)가 1987년에 발표한 '우리 공동의 미래'에서 글자 그대로 개발을 하되 우리 후손들을 생각해 환경을 건전하게 보전하도록 신중히 고려하자는 데에서 비롯되었다.

이러한 포괄적 정의가 갖는 관점과 해석상의 차이가 있지만 극단적 환경론자들은 자연의 보전에만 치중함으로써 미래세대를 위한

경제 발전을 통한 복지의 확대는 도외시 하는 경향이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 경부고속철도 천성산 관통 터널공사와 같은 대형 국책사업을 들 수 있다. 이런 국책사업 시행중에 오랜 법정 다툼을 통해 공사 중단과 재개를 반복함으로써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치르고 가까스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것도 있고 아직도 표류 중인 것도 있다.

대형개발사업에 제동을 거는 환경단체 주장의 핵심은 국가와 사회 발전의 목표 가치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적 공감대와 여론 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고 '국익 향상'을 명분으로 정부 또는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계획하고 추진하는 바람에 사회구성원의 자발적 동의나 포괄적 참여를 끌어내지 못해 결국은 사회적 갈등을 유발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환경보전의 가치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으므로 시장원리에 따른 자유로운 가격이 형성되어서는 안 된다고 한다.

따라서 수요 공급 곡선을 따르는 시장에 시민 개개인의 환경보전 기능을 떠넘길 수 없어서 정부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다. 경쟁의 자유보다는 결과의 평등, 창의력을 중시하는 기업이 정신에 의한 경제규모 확장의 억제, 과학기술 발전의 목적성 제한을 통해 환경보전과 같은 결과적 평등을 위해 정부가 제도적으로 개입하고 시장을 적극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지속가능한 발전을 원하는 지역주민의 생각은 그들과 다르다.

환경파괴의 주된 요인은 가난과 탐욕이다. 경제가 발전하면 삶의

질이 향상되고 환경에 대한 관심도 증대되므로 환경보전을 위한 투자와 감시가 활발해지며 쾌적한 환경을 되찾게 된다는 쿠즈네츠 사이클 가설은 우리나라 여건에서 여전히 유효하다. 이러한 대표적인 사례가 서울의 청계천 복원이다.

우리 지역의 주요 사안인 장항산단 조성은 3년간의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환경 대응방안은 지속가능성 관점에서 충분히 고려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갯벌의 건강성 평가를 통한 대체습지의 조성, 주변 사구의 보전, 멸종위기 조류의 서식지 확보 등 제시된 대안은 새만금 간척사업과는 여건이 상당히 다르다. 다만 회복불가능한 자원인 갯벌의 상실을 상쇄할 만큼 경제적 타당성이 충분한 지에 대해서는 사회경제적 합의가 필요할 것이다.

석기시대는 지구상에 돌이 모자라서 끝난 것이 아니듯이 환경문제가 모든 인간의 활동을 제약하는 것도 아니다. 좀 더 단단하고 쓸모있는 도구를 만들기 위해 새로운 자원을 찾아낸 인류의 지혜가 새로운 문명시대를 열었다. 무한한 창의력으로 새로운 문명을 일으키고 우리의 건강한 자연환경을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다는 시민들의 생각과 전문가들의 힘이 하나로 모아질 때 지속가능한 발전을 기대할 수 있는 만큼 장항산단 조성 사안도 미래지향적 지속가능한 대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정종관, 중도일보 2007년 1월 10일자]

다보스 포럼과 환경대응

스위스 동부의 스키 휴양지 다보스에서 매년 열리는 세계경제포럼(WEF)은 1970년 유럽의 경제인들이 서로 안면을 익히고 우의를 다지기 위해 만든 비영리재단인데, 이 재단의 연차 총회인 다보스 포럼으로 더 잘 알려져 있다. 다보스 포럼은 1982년부터 열리기 시작했으며, 1주일간 주요 인사의 연설과 분야별 토론, 사교모임 등의 행사가 이어진다.

최근 들어 세계적인 저명인사들이 대거 다보스 포럼에 참석하고, 경제 외에 정치·사회·환경 문제에 대한 처방과 대안을 제시하는 자리로 바뀌면서 개별 국가정책에도 영향을 미치는 국제회의의 성격이 강해졌다. WEF는 연차총회 외에도 지역별 회의와 산업별 회의를 운영하면서 세계무역기구(WTO)나 선진국 정상회담(G8)에도 큰 영향력을 미친다.

WEF는 초청된 인사들만 참석할 수 있는 배타적인 고급 클럽이라는 비판을 듣게 되자 2001년부터 비정부기구 인사도 초청하고 있다. 은퇴한 전 세계 정·재계 지도자 모임인 세계현인회의와 함께

다보스 포럼은 21세기 세계의 공동발전을 모색하기 위해 만든 세계적인 인재 네트워크이기도 하다.

올해는 '변화하는 권력이동방정식'을 주제로 기업경영에 가장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로 소비자의 성향변화, 기업의 지배구조, 신흥시장, 빈부격차, 테러 이외에 지구온난화로 인한 환경대응을 최우선 과제로 꼽고 있다. 처음으로 발표된 각국별 기후변화지수(CCI)에서 우리나라는 63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1990년 이후 2001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이 86% 증가함으로써 기후변화에 취약한 일촉즉발(Flashpoint) 상황지역으로 분류되었기 때문이다. 기후변화지수로 나타난 지구규모의 기후변화 상황은 결국 엄청난 태풍, 가뭄, 홍수, 물 부족 등 자연재해를 초래하게 될 것이고 그 중에서도 저소득층이 심한 타격을 입게 되어 사회적 불안요소로 이어질 수도 있다.

환경안보차원에서는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능력 확보가 관건이 되는데, 에너지이용 효율성이 높고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나라가 21세기 국가 경쟁력을 갖게 된다. 전 세계로부터 에너지사용의 블랙홀이라 비난 받는 미국은 부시대통령이 지난 주 국정연설에서 석유수입의존도를 낮추고 기후변화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생물연료 생산을 확대하고 자동차 연비기준 강화를 통해 향후 10년간 휘발유소비 20% 감축계획을 제시했다.

이번 계획에 따르면 미국경제의 온실가스 집약도는 2012년까지

18%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온실가스 집약도는 국내총생산량(GDP) 당 온실가스 배출량을 의미한다. 이처럼 온실가스가 초래하는 기후환경 변화가 기업경영에 가장 큰 문제로 작용함에 따라 알코아, 듀폰, 제너럴일렉트릭 등 주요기업은 부시대통령의 온실가스 배출량 의무 상한선 지지를 촉구하기 위해 환경단체와 손을 잡았다.

현재 세계 각국은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면서 경제적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중국은 개도국 지위를 이용하여 전 세계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의 60%를 점하여 돈도 벌고 온실가스도 줄이는 기술을 축적하고 있다. 선진 각국은 신재생 및 청정에너지 개발과 사용량의 확대를 통한 새로운 산업영역의 확대로 일자리 창출과 동시에 환경영향의 최소화를 추구하고 있다.

온실가스 저감목표를 설정하되 의무적인 감축량을 상한선으로, 자발적인 삭감을 하한선으로 하여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 이는 추가적인 경제 유인책을 제공하는 이중목표제의 도입과 같다. 경제와 환경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면 현실적으로 채찍보다 당근이 더 효과적이다. 우리나라가 비록 출발은 늦었지만 한국사람 고유의 강한 추진력과 의지로 환경변화의 파고를 헤쳐 나가야 할 상황이다.

[정종관, 중도일보 2007년 1월 31일자]

진보와 빈곤, 그리고 환경

인간의 역사는 무수히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 발전해왔다. 진보가 역사 발전의 한 과정이라면 대가 없이 거저 오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정치권에서 때 아닌 진보 논쟁이 벌어져 먹고살기 바쁜 시민대중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대통령까지 나서서 대한민국의 진보가 달라져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일반 대중이 생각하는 진보를 환경문제와 연결해서 생각해보자.

땅과 공기와 물은 모든 이에게 주어진 천부의 자원이다. 그러나 공기와 물은 누구나 가질 수 있는 반면 우리가 밟고 있는 땅은 이미 누군가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어 우리나라 인구 100명중 72명이 가진 땅에 대한 권리는 단지 거리의 보도블록을 밟고 다닐 정도의 권리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나 땅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이 가진 하나의 권리는 병들어 있지 않는 한 적절한 노동을 통해 매일의 끼니를 이어갈 수 있는 신체는 누구나 갖고 있다. 땅 때문에 역사상 많은 농민들이 고통스럽게 죽어갔으며, 현시대의 도시빈민 역시 괴로움을 겪기는 마찬가지다. 땅은 신이 내린 만민의 공동자산이므로 재산증식의 수단으로 쓰일 수 없음에도 불로소득의 맛에 길들여진

대지주들은 배타적인 자기권리 지키기에 안간힘을 쓰는 것이 전세계 공통의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부의 집중이 계속 늘어나는 원인은 땅을 개인소유로 확대함에 있으며, 이것은 불로소득을 발생시켜 결국 지속적인 진보에 필요한 평등과 자유를 억제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은 토지 및 천연자원에서 생기는 불로소득을 환수하여 공공의 이익을 위해 쓰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을 우리나라 여건에 맞게 받아들인 것이 종합부동산세일 것이다. 이것은 땅과 천연자원의 가치를 세금으로 걷고 그 대신 다른 세금을 줄이자는 내용이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 도입과 종합부동산세를 비롯한 세제 개편 등의 정책들은 거래과정을 투명화하고 시장을 정상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제도다. 이러한 정책의 기초는 1879년에 출간된 헨리 조지의 '진보와 빈곤'에서 언급한 경제성장의 과실이 땅주인에게 돌아가면 빈부의 격차가 커진다는 데에 기초를 두고 있다. 따라서 땅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세금으로 거두는 대신 나머지 세금을 폐지하면 경제성장과 분배가 조화롭게 달성될 수 있다고 보았다.

헨리 조지의 주장은 토지는 공급을 마음대로 늘릴 수 없으므로 소유의 불평등을 초래하지만, 건물은 장기적으로 공급을 늘릴 수 있으므로 토지와 달리 건물에 무거운 세금을 매길 필요가 없다고 본다. 땅에서 생기는 임대수입을 전부 세금으로 거두고 토지의 사유화를 공공소유 개념으로 변화시키면 빈부격차를 줄여 사회의 양

극화 갈등도 줄일 수 있다는 얘기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건물에 대해서도 무거운 세금을 매김으로써 실질적인 과세 과중으로 장기적인 주택수급 불균형과 함께 토지자원과 환경자원의 가치에도 연쇄적으로 훼손을 가중시키는 파급효과를 가져오고 있다. 우리나라의 과거 부동산 가격변동은 주기적으로 불안한 상태를 보여 왔는데, 토지가격의 급등이 주택의 수요공급에도 영향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토지의 수급 불균형으로 결국 보전해야할 지역인 그린벨트의 해제를 초래하기도 했다.

역사의 진보는 수많은 빈곤과 위기를 딛고 발전을 거듭해 왔지만 토지 문제가 환경보전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이라면 바람직한 녹색 조세제도의 정립이야말로 이 시기에 요구되는 시대정신의 지표가 될 수 있다. 환경자원에 대한 외연적 가격을 내재적으로 확대된 가치로 인식해야 자원이용의 생태적 효율성이 증대될 것이다. 사회적 불평등 해소, 경제적 효율성 향상, 환경훼손의 방지에 기여할 수 있어야 진정한 진보라 할 수 있고, 그렇게 되어야 지속가능한 환경발전 전략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정종관, 중도일보 2007년 2월 28일자]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

민선4기 지방자치단체 출범 이후, 대전·충북·충남을 포괄하는 충청권에는 새로운 희망과 활력이 넘쳐나고 있다. 충남은 이미 전국 1위의 산업투자와 생산, 수출 증대 및 외자유치 실적을 보이고 있고, 대전과 충북은 각각 대덕R&D특구와 오창·오송 첨단의료 복합 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과학과 첨단기술의 메카’ 및 ‘경제특별도’로서의 비전 실현을 가시화하고 있다. 21세기 국가발전의 동력원이 산업화를 선도했던 수도권에서 점차 첨단기술과 산업생산을 주도하는 충청권으로 이전되고 있다. 충청권은 이제 싫든 좋든 국가발전의 중추기능을 수행하는 역할을 회피할 수 없게 됐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 속에서 충청권내 3개 시·도지사들이 함께 모여 ‘대전·충남·북 경제협의체’ 구성에 합의한 것은 지역뿐만 아니라 국가발전 차원에서도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충청권은 역사적으로 수세기 동안 동일한 행정·문화권을 형성해왔기 때문에 여전히 지역 주민들은 강한 정체성과 연대감을 지니고 있다. 또한 산업과 도시 기능차원에서도 상호 보완과 연계성이 높다.

충남은 국제항만과 대규모 첨단생산, 물류 및 교역기능을, 충북은 국제공항과 바이오, 첨단의료산업을, 대전은 과학·기술개발 및 대도시집적경제기반을 각각 갖추고 있다. 더불어 지역 간 경제, 사회, 문화교류 또한 활발해 상생과 공동발전의 효과가 어느 지역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밖에도 충청권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로 급격한 공간재편과 기능적 변화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새로운 형태의 지역발전전략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런 의미에서 충청권 3개 시·도 경제협의체 구성은 단순히 지역 간 갈등 해소나 지역개발의 시너지 효과증진이라는 차원을 넘어 21세기 국가발전과 지역구조 변화에 대한 미래지향적 대응방안 모색이라는 차원에서 중요성을 지닌다.

세계화의 진전으로 국가 간 경쟁이 심화될수록 역사, 문화적 전통 및 고유한 발전 잠재력 등 이동불능자원을 지닌 도시와 지역의 중요성은 커지게 된다. 세계화시대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과 성장은 국제적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도시와 지역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고, 육성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OECD를 비롯한 많은 선진국들이 앞 다투어 대규모의 '초광역적 지역경제권'을 구축하는 데 힘쓰고 있다. 국제항만과 공항, 과학기술과 R&D 센터, 첨단산업생산거점과 인구 500만 명의 집적경제기반을 갖춘 충청권이 기존의 행정구역의 한계를 극복하고 상생과 협력 및 공동발전을 추구한다면, 장기적으로는 국제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지역경제권으로 발전이 가능하리라 본다.

충청권의 상생과 공동발전 노력이 결실을 거두기 위해서는 사전에 치밀한 계획 및 전략의 수립과 추진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첫째, 세계적 수준의 '초 광역적 경제권' 형성이라는 뚜렷한 비전과 현실적인 실천 전략을 제시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합의와 신뢰기반을 형성하는 데 힘써야 한다.

특히 이해관계가 중첩된 지역 간 상생과 공동발전을 실현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노력만으로 이뤄지지 않는다. 지역 내 기업인, 금융기관 등 경제와 산업계, 시민단체와 언론기관, 대학과 전문가 집단 상호간 교류와 협력체계의 구축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

둘째, 3개 시·도 경제협의체의 운영을 통해 기업지원 서비스의 개선, 개발의 시너지 효과 향상, 주민의 삶의 질 개선 등 상생과 공동발전의 필요성과 효과를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 성공적 경험의 축적과 신뢰기반의 형성 없이는 지역 간 협력과 공동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지역 간 협력과 상생노력이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실천이 용이하면서도 상호이익이 될 수 있는 부문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처음부터 이해관계가 첨예한 과제를 해결하려 해서는 안 된다.

끝으로 충청권의 상생과 공동발전을 추진할 수 있는 효율적인 조직, 예산 및 제도수단과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 그동안 많은 지역

간 상생과 공동발전 노력이 지속성을 지니고 발전하지 못했던 것은 이를 전담할 상시적 인력과 조직, 예산 및 제도를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다.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옛 어른들의 말씀을 되새겨 볼 때다.

[김용웅, 중도일보 2007년 3월 12일자]

물 부족과 양치기 소년

3월 22일은 물의 중요성을 알리고 실천을 전제하기 위해 UN이 정한 세계 물의 날이다. 밀레니엄 2000년을 맞이하면서 물의 위기는 생명의 위기라는 말이 보여주듯 환경위기는 날로 확산되어 갔다. 국내 유수의 신문 사설에서는 세계 물의 날을 맞이하여 당시 기준으로 6년 후면 우리나라는 물 부족 국가가 된다고 사설에서 크게 다룬 적이 있다. 그래서 정말 그렇게 되는지 7년을 지켜보았다.

당시 헤이그에서 열린 세계 물포럼 회의에서 현재와 같은 물소비 추세가 지속될 경우 생태계악화와 생물다양성 손실로 후세대의 생존을 위협하게 될 것으로 예측했다. 안전한 물 확보를 위한 공동협력 방안, 기본적인 물수요의 충족, 수자원가치의 가격화, 국제적 물 분쟁 지역에서의 국제협력 증진 등을 7대 공동과제로 채택했다. 당시 발표된 21세기 물의 안보를 위한 선언문을 보면 인류의 심각한 물 부족 위기가 물에 대한 관리 잘못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을 상기시키고, 2015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안전한 물을 공급받지 못하는 인구비율을 절반으로 줄이기 위한 수자원확보 공동협력방안을 담고 있다.

헤이그 물 선언문을 계기로 우리나라의 수자원 정책의 기초를 공급위주에서 수요관리 중심으로 바꾸고, 수자원 가치의 가격화 시행과 함께 절수형 요금체계를 세우는 등 물 절약 운동의 새로운 접근 방법을 모색한다는 것도 바람직한 방향이다. 그런데 용수확보를 위해 댐이나 저수지의 축조가 필수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2000년 이후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 건설된 대형댐은 홍수조절용 평화의 댐을 제외하면 장흥댐 1개소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부터 물이 부족하다는 보도가 나온 적이 없다. 그렇다고 우리 국민들이 물의 중요성을 절실히 느껴서 자발적으로 물 사용량을 크게 줄인 것도 아니다. 현상을 왜곡하여 필요이상으로 위기의식을 조장하는 것은 양치기 소년의 거짓말에 익숙해져 오히려 현실 감각을 무디게 하는 역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

전 세계적으로 1970년대 후반부터 환경에 대한 관심이 커졌는데 당시 환경과학 잡지의 주요 화제는 '산성비'와 '지구온난화'였다. 2000년이 되면 산성비의 피해로 숲이 죽어가고 해수면이 상승해 네덜란드가 바닷물에 잠긴다는 이야기가 신문지면에 가득했다. 2000년이 지났지만 산림은 울창하다. 또 남극의 빙산이 녹았다는 기사는 여전하지만 네덜란드는 물에 잠기지 않았다. 오히려 산성비에 의한 삼림파괴는 허구임이 정설로 굳어지고 있다. 유럽의 울창한 흑림(黑林)이 쇠퇴한 것은 산성비 때문이 아니라 인위적인 숲 조성으로 자연 상태의 숲이 갖고 있는 면역력이 약해진 탓이란 설명이다.

이처럼 환경사안은 변화의 예측변수가 다양하고 인간의 예지능력

으로 다루기 힘든 부분도 많다. 지구온난화 문제의 경우 평균기온이 과거보다 상승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이에 대한 대책으로 산업과 경제에 피해가 없도록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여야한다고 호들갑을 떠는 것은 초등학생 수준의 대책밖에 되지 않는다. 실행 가능한 대안으로 신재생에너지 사용량을 늘려야한다고 주장한다면 경제적 타당성과 함께 사회적 합의를 통해 비싸더라도 이를 수용할 용의가 있는지 먼저 검토해 볼 일이다.

지난 2월 초 발표된 제4차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회(IPCC) 보고서에서 지구 온난화 현상은 대부분 인간의 활동에 기인한다고 되어 있지만, 일부 환경학자들은 지구온난화는 인류의 노력으로 가속화 속도가 늦춰졌다고 주장한다. 이처럼 과학자의 주장이 항상 참은 아니다. 그럼에도 과학자의 주장에 귀 기울여야 하는 이유는 노력이 늦을수록 생태적 적자는 늘고 자연환경을 안전한 과거로 되돌릴 수 없는 까닭이다.

[정종관, 중도일보 2007년 3월 21일자]

지방분권시대, 지방의회의 역할

지방자치가 온 국민의 기대와 축복 속에서 새롭게 출발한 지 16년이 되었다. 그동안 지방의회는 지방의원에 대한 유급제, 공천제와 중선거구제, 비례대표제 등이 도입돼 지방자치 환경이 크게 변화했으며 이는 분권정책의 확대 등 급변하는 지방자치 환경에 따른 의회 역할의 위상 변화와 무관치 않은 일이다. 지방의회가 초기의 제도적인 미비점과 운영상의 어려움을 겪으며 소위 풀뿌리 민주주의를 정착시키는 데 큰 역할을 수행하였음에도 여전히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비판과 자성적 목소리가 병존하고 있음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이제부터는 지방의원에 대한 유급제가 실현됨에 따라 주민에게 세금 부담을 지우는 만큼 의원의 역할과 활동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와 요구가 한층 높아질 것이므로 그에 따른 의정활동과 책임이 수반된다는 것을 깊이 새겨야 한다.

지방분권은 이제 비켜갈 수 없는 시대적 요청이며 분권과 자율로 운영되는 사회야말로 이 시대의 소명이다. 이런 바탕에서 지방의회도 지방분권화를 준비해야 하고 지방화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에 적극 동참하여 자치단체의 자발성과 창의성이 잘 발휘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 지방의회는 지방의 정책을 결정하고 그 집행결과를 평가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관이며, 따라서 의회의 구성원인 지방의원은 회사로 말하자면 중역 중의 중역이며 리더다. 리더란 희망의 미래로 리드하는 사람이다. 중역으로서의 지도자가 갖추어야 할 리더십의 근본인 본보기를 보여줌으로써 지역민에게 희망을 주는 지방의회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요구된다.

지방분권화가 가속화되고 지방의회의 권한과 위상, 역할도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시대적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다양한 의견과 지역사회의 이해관계를 제대로 파악해 이를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 또한 지역의 중요한 문제가 제한된 정보와 능력의 한계 속에서 논의될 경우 잘못된 결정이 되기 쉬우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주민의 지식, 정보, 관심사, 이해대립을 생활현장에서 수렴하는 지방의회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초기의 지방의회는 행정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어려운 점이 많았으나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효과적으로 의정활동이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경험과 정보를 바탕으로 정책수립에 대한 전문성을 축적하고 지방행정의 비효율을 제거해 나가기 위해서는 의원들 스스로가 공부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흔히들 지방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행정의 독선이나 비효율을 감시·통제하는 견제기구로서의 역할을 강조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지역개발을 위한 참신한 아이디어를 지방행정에 유입시키는 정책창안자로서의 역할을 주장하고 싶다. 지방의회

와 집행부는 주민편익과 행정능률의 향상 그리고 지방적 이익과 역량을 축적하는 데 있어서 상호 견제 및 통제자이며 동시에 협조 및 지원자라는 의식전환이 요구되며 지방의회도 주민의 대표자로서 주민생활의 불편을 찾아내고 이를 의정활동을 통해 해소하려는 노력과 함께 지역주민의 정당한 여론을 관철시킬 수 있는 진정한 대변자로서 소신도 필요하다. 또한 중앙정치의 간섭으로부터 보호하고 지방자치가 공익의 가치를 보장하고 실현할 수 있도록 의회를 제약하고 의원을 위축시키는 제도를 개선해 관치와 타율의 특성을 극복하고 참여적인 정치문화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끝으로 지방의회가 주민대표기관으로서, 그리고 자치시대의 주연으로 자리매김해 어려운 시기에 지역의 주민들에게 희망을 안겨주는 의정활동을 펼칠 것을 지역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다시 한 번 다짐해본다.

[이규용, 충청투데이 2007년 3월 23일자]

관광도 국가 전략산업이다

엘빈 토플러나 자크 아탈리 같은 미래학자들은 한결같이 21세기에는 국경을 뛰어넘어 자유로이 오가는, 이른바 '신유목민'의 수요에 대응하는 유목산업(관광산업)이 전례없이 성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실제로 세계관광기구(World Tourism Organization)는 「Tourism 2020 Vision」의 장기전망을 통해 전 세계 국제관광객 수는 1995년 5억6천만 명에서 2010년 10억 명, 2020년 15억6천만 명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1995~2020년까지 연평균 4.1% 증가 전망)하고 있다. 세계여행관광협의회(WTTC)는 2010년까지 관광산업이 세계 GDP의 11.6%를 점유하고 세계 총 고용의 9%가 관광 관련 산업에서 종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특히 동북아지역은 관광목적지로 급성장하고 있으며, 중국이 세계 최대 잠재관광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다. 동북아 관광객 수는 2000년 5억17백만 명에서 2010년에 10억93백만 명으로 전망되고 있다. 중국은 경제의 급성장과 소비의 고급화, 개방정책의 확대에 힘입어, 2010년 약 6천만 명, 2020년 약 1억 명(세계 4위)이 해외여행에 나설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관광은 고용 및 소득 측면에서도 무시할 수 없는 산업적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외국인 관광객을 실은 비행기 한대가 내리면 자동차 1천대를 수출한 것과 같다는 말이 있다. 외국인 관광객이 평균 3박4일 정도 체류하면서 쓰는 돈이 1천200달러쯤 된다. 1천만 명이 들어오면 120억 달러 정도가 되고 관광산업은 원재료를 거의 쓰지 않는 외화가득률이 88%로 높은 산업이기 때문에 순 외화벌이는 약 100억 달러에 달한다. 이 규모는 상품 수출로 따지면, 외화가득률을 높게 봐주어서 10% 정도이니까 약산해도 1천억 달러쯤 상품을 수출한 효과와 맞먹는 것이 된다. 관광산업은 고용창출효과도 크다. 고용유발계수는 10억 원당 42명으로 제조업 평균 9.6명의 4배 수준에 이른다.

현재 우리나라는 2020년에 세계 10위권 관광대국 실현을 위해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다. 또 작은 지역은 작은 대로, 큰 도시는 도시대로 그들 나름의 비전과 전략을 관광을 통해 실현하고자 경주하고 있다. 이 대목에서 혹자는 질문할 것이다. '당장 먹고 살거리를 해결해야 하고, 평생 힘들여 노력해도 집 한 채 사기 힘든 상황에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하고. 그리고 '과연 그 목표는 실현 가능한 것일까'에 관해서도. 그러나 관광은 '연성국력(Soft Power)의 핵심요소'(조셉나이)이자 고용 없는 시대의 신고용 기반이며, 브랜드 경쟁시대의 국가 이미지 제고의 첩병이기 때문에 경제가 어렵다고 하는 이때에 반드시 이야기해야 하는 것이며, 어떤 적극적인 정책과 전략을 써서라도 반드시 달성해야 하는 것이라 말하고 싶다. 왜냐하면 물리적인 조건으로는 결코 불리하지 않기 때문이다. 매우 낙관론적인 이야기일지 모르지만, 물리적 조건은 그나

마 충족시켰으니 다른 경쟁우위요소들만 해결하면 되지 않는가.

드디어 마이너리티들이 주목받는 시대가 되었다. 문화와 관광이 성장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고, 지역은 그 원천이 되고 있으며, 아시아에 대한 세계의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 상황은 분명 역전되었다. 우리의 관광 비전을 실현할 기회가 온 것이며, 이 기회를 활용하여 역전(歷戰)의 용사가 아닌, 역전(逆轉)의 용사가 될 때가 도래한 것이다. 열망과 열정은 충분하니 이제 전략적인 눈길로 바라보고 경쟁력을 키우는 손길로 접근할 때가 되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가 꿈꾸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는 우리의 관광 비전은? 한마디로 ‘국민의 행복한 삶을 기반으로 아시아의 매력적인 관광한국 건설’이라고 말하고 싶다. 국민의 풍요하고 편안한 삶을 만들어가는 생활 문화 관광의 기반 속에서 아시아인들이 찾고 싶어 하고 아시아를 견인하는 매력적인 관광한국 말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획기적인 외래객 유치정책 여건을 개선하여 교착상태에 있는 외래 관광객들을 우리나라로 불러들여야 한다. ▲종합적인 국민관광 활성화 대책이 수립되어야 하며 ▲국제관광의 성장극화와 국내관광의 차별화된 개발이 추진되어야 한다. 선택적 집중의 관광자원을 개발하고 ▲리조트개발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테마별 관광도시를 육성하고 다각적인 상품개발과 인프라를 정비해야 한다. 이것은 ▲관광객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도록 주민자치에 의해 기반이

마련되는 것이 좋겠고, 나아가 ▲민간 주도의 관광개발 체계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

또한 ▲단계적인 관광산업 규제합리화를 추진하고, 새로운 관광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고 관광산업 구조 고도화를 위해 ▲관광산업 복·융합화가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한다. 무엇보다 이들을 아우를 수 있는 ▲관광의 종합정책화를 위한 중앙부처간 협력이 요구된다. 유사한 정책 추진으로 인해 그 효과가 반감되는 등 비효율성의 목소리가 높기 때문이다.

협력이 요구되는 것은 또 있다. ▲국가균형발전과 같은 거버넌스형 정책 추진을 위한 지자체와 중앙정부간의 관광파트너십이 형성되어야 한다. 여기에 ▲한반도 관광정책, 즉 북한관광 상품을 남한 지역에서도 가능토록 남북을 연계한 관광 상품을 개발하고, 그것이 성숙되어 ▲동북아와 유럽을 연계하는 관광허브로 그 폭을 넓혀 보자. 그것은 남북철도를 연장한 대륙횡단철도에 의한 동북아 육로 관광 상품 개발, 한중일 크루즈 및 동북아크루즈 등의 상품개발이 추진된다면 충분히 꿈꾸어 볼 수 있는, 아니 실현 가능한 과제들이다.

이 때 관광에 문화력이 동반되지 않으면 안 된다. '문화재관광'과 '등산관광'을 넘어 이제는 '문화관광'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여기에 사회 전반의 동반 발전을 위한 협력 틀을 갖추면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 더욱이 관광 부문에 대한 실질적인 투자 확대는 절실하다. 정부지출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민간투자가 있어야

한다. 투자에 이어 행동(정책)도 뒤따라야 한다. 정부와 정책은 시행자에서 조정자로, 직관과 경험에서 합리와 과학으로 전환해야 한다. 관광 주체의 혁신은 두 말 하면 잔소리다.

이렇듯 코리아 희망의 길 찾기는 분명 '관광'에 있다. 지금 이 순간, 성석제의 소설 제목처럼 '번쩍하는 황홀한 순간'이 되어 있는 2020년을 그려본다.

[송재호, 열린충남 2007년 4월호 통권38호]

세계 군(軍) 평화축제의 기대 효과

충남도는 2010년을 목표로 가칭 세계 군 평화축제(세계군문화엑스포) 추진을 위한 자문회의를 지난달 20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전문가들로 선임된 자문위원을 비롯한 중앙부처, 충남도 및 계룡시 관계자 등 42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 국가 행사로 추진해 줄 것을 건의했다. 하지만 중앙부처의 미온적 태도로 김빠진 회의가 되었다는 후문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이완구 지사는 "정부에 의존하지 말고 우리가 주체가 돼 일을 추진하면서 정부를 동참시켜야 한다. 충남도가 예산을 세울 테니 계룡시도 예산을 풀어야 한다."며 반드시 추진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다고 한다. 세계 군 평화축제는 왜 추진해야 하며, 어떠한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

첫째, 지역적인 특수성을 고려할 때 계룡대가 위치하고 있는 계룡시를 경쟁력 있는 군 특화도시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계룡시 발전의 가장 큰 문제는 민과 군이 화합하기 어려운 이질감이다. 그러나 세계 군 평화축제를 개최한다면 민·군이 함께 행사를

치르면서 이질감을 최소화하고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며 단점을 장점으로 승화시켜 발전의 동력이 되고 새로운 군문화가 형성될 것이다. 계룡시가 만들어진 이유와 당위성에 적합한 이상적인 도시모델이 될 것이며, 그런 도시가 전 계룡 시민이 바라는 염원이다.

둘째는 국가적으로 민과 군이 함께 어우러지는 한마당 축제를 통해 국민들이 애군의식을 갖게 되고 군은 국민의 가슴속에 친숙한 군으로 느끼면서 자연스럽게 안보의식을 함양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그동안 정부는 햇볕정책이란 이름으로 북한에 대하여 일방적 퍼주기식 지원만 일관해 오면서 돌아온 것은 핵무기밖에 없으며, 우리의 적이 누군가 개념 자체가 없어진지 오래다. 특히 미국은 북한에 대하여 핵 보유를 기정사실화 하면서 전에 없이 특별한 관계로 발전되어 가고 있으며, 한국과는 전시작전권 등의 문제에서 보듯 더 이상 우리 안보를 미국에 의존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다. 중·러·북은 핵보유국이 되었고 일본도 마음만 먹으면 즉시라도 핵 보유가 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고 보면, 한국만이 핵 가운데서 사면초가의 신세가 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의 안보의식은 어떠한가. 북한이 핵개발을 했다고 선언했을 때 "천하태평인 한국인의 모습에 더 놀랐다"는 당시 외신 보도가 잘 대변하고 있다. 이제는 전방의 철책과 땅굴을 보여주며 북의 호전적인 상황을 설명해도 한물간 옛 노래를 들려주는 정도로 식상해 있고 실감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국민의 안보의식을 높이는 방법도 차원이 달라야 한다. 즉 국민 속에 군이 함께하면서 군을 친구 같이 가까이 하는 생활에서 군을 사랑하고 존재의 중요성을 느끼면서 신뢰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세계 군 평화축제는 국

민들이 군으로 깊숙이 들어와서 함께하고 즐기고 직접 체험하면서 군을 가까운 친구처럼 이웃처럼 느끼는 신뢰의 한마당이 될 것이다.

셋째, 세계에서 유일하게 냉전지역으로 남아 있는 한국에서 세계 군 평화축제라는 이름으로 세계의 군인들이 한곳에 모여 평화를 염원하며 축제를 개최한다면 그 자체로도 큰 의미가 있을 뿐 아니라 평화를 지향하는 한국 국민의 모습에서 세계인들은 깊은 인상을 주기에 충분할 것이다. 나아가 몇 년에 한 번씩 여러 나라에서 세계 행사로 자리 잡게 된다면 세계평화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에도 일익을 담당하는 뜻 깊은 행사로 발전될 것이다.

세계 군 평화축제를 개최하게 된다면 국민의 안보의식을 확고히 다져 나갈 수 있음은 물론 지역발전과 나아가 세계평화에도 기여하는 1석 3조의 성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김학영, 충청투데이 2007년 4월 6일자]

해외 관광레저도시 시찰 소감

태안 기업도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문화관광부 주관으로 지난 3월 25일부터 4월 2일까지 미국, 멕시코 등 해외 관광레저도시 사례 시찰을 다녀왔다.

당초 계획은 9박 11일 일정으로 미국 최대 관광도시 중 하나인 라스베이거스 영상테마파크와 샌안토니오, 멕시코의 칸쿤과 로스앤젤레스 순으로 주요 관광레저 시설을 탐방하고 현지 관광청과 문화관광공사, 시청 등을 방문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지난달 31일 강풍으로 군내 어선이 전파 또는 파손되는 피해가 발생해 피해현황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 고민 끝에 마지막 일정을 부득이하게 취소하고 군으로 급히 귀국했다.

이번 해외 시찰의 목적은 관광레저개발의 컨셉 발굴과 고객유치 전략을 중점으로 주요 시설의 방문을 통해 시설현황을 파악하고 정부지원 사례 등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였다.

해외시찰 동안 일정 별로 관련기관을 방문하고 관계자와 소규모 미팅을 진행하며 관광레저도시에 대한 유용한 정보와 자료를 얻었을 뿐만 아니라 많은 것을 느끼고 생각하는 기회가 됐다.

미국 네바다주 최대의 도시인 라스베가스의 경우 카지노를 통한 많은 경제적 수익을 올리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카지노 도박도시라는 명예를 벗기 위해 가족중심의 쇼 관광 개발, 국제규모의 회의 유치 등 컨벤션 산업의 중심지 역할로의 끊임없는 변신을 통해 거대 관광도시로 성장하고 있었다.

또한 미국에서 여덟 번째 큰 도시로 텍사스주 남부에 위치한 샌안토니오는 도시 방향성을 '큰 도시 속의 작은 도시 분위기'로 잡고 도시개발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특히 강변을 따라 5.8km 구간에 세련된 문화상업 시설이 들어선 리버워크(river walk)가 인상적이었다.

샌안토니오 관계자는 반복되는 홍수의 범람을 막기 위해 강을 중심으로 미적 요소를 적극 개발하려는 계획에 의해 1960년대부터 10년 단위의 세부계획을 세우고 자본 확보와 환경 재편성 등의 체계적인 노력에 의해 리버워크를 조성했다고 설명했다.

또 멕시코 남동부 칸타나로오주에 있는 휴양도시 칸쿤은 23km의 L자 모양의 섬으로 예전에는 100여 명의 마야인들이 낚시와 채집을 하며 지내는 조그만 마을이었다.

그러나 1970년 멕시코 정부와 민간 기업이 함께 국제적 휴양지로 개발, 초일류 호텔들이 캐리비안 해협의 쪽빛바다를 향해 세워지고 세계의 관광객들로부터 인기 있는 해변리조트로 탈바꿈했다.

이상 살펴본 3개 도시는 각기 지역적 특이성과 다양성으로 국제적 관광도시로서의 면모를 보여줬으며 환경적, 문화적, 정책적인 면에서 태안 기업도시와 유사성을 띠고 있어 향후 사업 추진의 좋은 본보기가 됐다.

그러나 이들 도시들이 태안 기업도시와 유사성을 띠고 있는가 하면 상이성도 보여주고 있어 이번 견학을 통해 얻은 정보와 자료들은 지역 특성에 맞게 이를 재가공하고 개조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태안군수로서 이번 시찰에 참여한 나는 이들 도시의 경제적 발전과 호황의 배경에는 전폭적인 주민의 지지와 비즈니스를 위한 원스톱(one-stop) 행정, 개발자들의 끊임없는 고민과 노력으로 엔터테인먼트의 총화를 이뤄냈다는 점이 공통적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태안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를 추진하고 있는 우리도 이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국제적 관광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우선 지역발전에 대해 군민들의 연대의식과 사업시행자인 현대건설(주)의 개발의지가 필요하다.

태안군에서도 태안 기업도시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어 한국을 대표하는 관광휴양도시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 차원에서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앞으로 향후 13년 후 일산신도시 만한 관광레저형 기업도시가 생겨나 지역경제가 회복되고 달라진 태안의 모습을 기대해 본다.

[진태구, 충청투데이 2007년 4월 11일자]

충남연안 대응에 임 모아줘야

장항산업단지 조기착공과 국방대학교 논산유치에 대한 중앙정부의 결정이 임박하면서 충남도와 중앙정부간 팽팽한 줄다리기가 긴장감을 더하고 있다. 그 동안 결연한 의지로 총력을 기울여 온 충남도의 노력에 대한 지역사회의 애정 어린 충고와 격려도 이어지고 있다.

이는 오랫동안 정부조치에 대해 순응해 온 그동안의 소극적인 자세와는 사뭇 다른 모습에 대한 지역주민과 언론의 우려와 기대감의 표현이라 할 수 있다.

지역현안의 본질을 왜곡하고, 지역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정부의 조치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손해는 고스란히 지역주민에게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다음의 몇 가지 사실만 봐도 충남도가 중앙정부에 대하여 강경대응으로 맞설 수밖에 없는 이유를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첫째 그 동안 중앙정부는 지역현안에 대해 납득할 수 없는 논리로 타협만을 강요해 왔다. 충남현안을 해결하려는 실천적 의지와 진정성이 없었기 때문이다. 우선 장항산업단지 조성문제만 보더라도 중앙정부가 과연 문제해결을 위한 진정한 의지가 있었는지 의문이 든다. 장항산업단지가 새삼스럽게 문제가 된 것은 환경영향평가에서 제기된 갯벌의 환경성 논란 때문이다. 그러나 갯벌의 환경성 문제에 대하여는 이미 3차에 걸친 보완 작업이 이루어졌고, 대통령도 직접 현장을 방문해서 장항 갯벌에는 "조개도 없고, 새도 없고 사람도 없다"고 확인한 바 있다.

특히, 장항산단 조성에 비판적인 환경부와 해양수산부가 건설교통부와 합동으로 추천한 민간자문위원회에서도 "장항산단은 계획대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 정부는 아직까지 전문가들이 제시한 자문회의의 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역개발 주무부처인 건설교통부를 제치고 환경부가 비현실적인 지역개발대안을 제시하는 등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둘째, 중앙정부는 정책추진의 원칙과 기준을 자의적으로 적용해 충남지역에 대한 차별적 태도를 취해 왔다. 장항산업단지는 18년 전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착공조차 못했다. 그러나 유사한 조건을 지닌 군산지역에는 482만평에 달하는 산업단지가 조성되어 이미 활발한 생산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정부는 장항산업단지보다 환경성과 생태가치가 높은 새만금지역에도 560만평의 산업단지를 새롭게 조성한다는 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이 같이 부

당한 정부조치를 허용한다면 중앙정부의 '충청 홀대론'은 결코 개선될 수 없을 것이다.

셋째 충남현안에 대한 정책결정과 추진에 있어 합법적인 절차와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 장항산단과 함께 국방대학교의 논산유치 문제가 해법을 찾지 못하는 것은 정부가 공식적 정책결정 절차와 정책 추진원칙을 무시하고 정략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온데 근본 원인이 있다.

국방대학교의 충남이전은 2005년 6월 24일 정부의 '공공기관지방이전계획', 2005년 6월 9일 충남도와 국방부, 건설교통부, 행자부 및 산업자원부 등 관련정부부처와 체결한 '공공기관 지방이전 이행 기본협약서' 그리고 2005년 10월 5일 행자부의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확정고시' 및 2006년 9월 4일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확정고시 후속조치'에 국무총리 보고 등을 통하여 합법적이고 공개적으로 확정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는 정부내부의 협의를 근거로 국방대학교의 행정도시이전을 추진함으로써 불필요한 갈등과 분쟁을 유발하고 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원칙없는 조치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이전특위 위원들은 물론 정부부처 내에서도 반대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방분권시대라고는 하지만 아직까지 중앙정부는 막강한 정책결정권과 영향력을 지니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중앙정부에 대해 지방정부가 정면으로 맞서서 자기주장을 관철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장항산단과 국방대학 논산 유치와 같이 부당한 정부조치에 대하여 성급하게 타협하는 것은 충남지역의 발전기반을 무너뜨릴 위험이 있다.

충남도 당국은 손쉬운 대화와 타협의 유혹에 빠지지 말고, 더 큰 용기와 믿음을 가지고 지역발전에 헌신해 주었으면 한다. 또한 지역의 리더십이 흔들리지 않고 지역의 이해를 지켜나가도록 힘을 모아주는 것은 충청인 모두의 몫임을 명심했으면 한다.

[김용웅, 충청투데이 2007년 4월 16일자]

지방정부의 새마을 부서 약성 필요성

새마을운동은 1970년 초 농촌에서 시작되어 도시새마을운동으로 발전하였고, 학교 및 직장새마을운동으로 확산되어 갔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새마을 부서를 설치하고 새마을운동과 새마을사업을 경쟁적으로 추진해 왔다. 대학에서도 전공 불문하고 수많은 교수님들이 새마을 논문 한 두 편쯤은 기고했던 시절이 있었다.

이와 같이 새마을운동은 지식인들 사이에서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브랜드였고, 지금도 국민들은 그렇게 기억하고 있다. 한데, 한 시대를 풍미했던 새마을은 지금 모두 어디로 갔을까?

우리 사회를 주도하는 행정기관에도 대학에도 새마을이라는 이름이 사라진지 오래되었다. 그 많던 대학의 새마을연구소는 사라졌고, 행정기관의 새마을부서도 슬그머니 자취를 감추었다. 새마을운동의 혜택 속에서 성장한 세대들도 새마을운동을 언급하는 것을 시대에 뒤떨어진다고 생각해서인지 애써 기억 속에서 지우려고 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또한 예외가 아니다. 전국 16개 광역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새마을을 부서이름을 사용하는 자치단체는 경상북도의 새마을봉사과와 충청남도의 도의새마을과 뿐이다. 전국의 모든 기초자치단체를 조사해 보지 않았지만, 경북 구미시·영천시·청도군·성주군·군위군·의성군·칠곡군·예천군은 다행히 새마을과가 설치되어 있고, 김천시 새마을체육과, 영주시 새마을교통과, 상주시 새마을문화관광팀, 문경시 새마을체육과, 경산시 새마을문화과, 봉화군 새마을경제과, 충남 당진군 교통새마을과 등은 새마을업무와 다른 업무를 통합하는 형태의 이름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와 같이 새마을운동의 발상지인 경상북도와 충청남도 일부를 제외하고는 국민의 기억 뿐 아니라, 지방정부가 숭선하여 그 흔적을 지워가고 있는 것 같아 씁쓸하기 이를 데 없다.

1970~80년대 중앙정부의 노력으로 새마을운동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왔지만, 지방자치제가 진전된 현 시점에서는 지방정부의 의지가 새마을운동의 성공적 추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방정부는 제2의 새마을운동이 꽃피울 수 있도록, 새마을부서가 있는 경우는 명확한 미션과 업무영역의 확대, 새마을부서가 없는 경우는 과 단위 새마을 부서의 신설을 제안한다.

최근 살기 좋은 지역(도시, 마을) 만들기 사업이나 신활력사업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부의 정책은 대규모 공간이나 물리적 개발이 중심이 되는 지역개발(Regional Development)에서 탈피하여, 커뮤니티 단위의 소규모 공간과 인간개발 등 소프트한 사업이 중심이 되는 지역사회개발(Community Development)방식으로 이행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가 신봉해 왔던 지역개발 방식으로는 '사람의 번영'을 이룰 수 없다는 성찰과 반성이 정부 내에서도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다는 증거이다.

이와 같이 '장소의 번영'에서 '사람의 번영'을 이룩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창의적으로 개발하여 담아내기 위해서라도 지방정부에서는 지역사회개발의 원리에 의해 추진되는 새마을운동을 지원할 수 있는 부서가 옛날처럼 회복되기를 기원해본다.

해외에서 시작된 새마을운동에 대한 재평가와 더불어 지방정부의 새마을부서 확충 및 신설이 '새마을노래'를 다시 한 번 울려 퍼지게 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해 본다.

[송두범, 새마을신문 2007년 4월 19일자]

FTA와 환경대응

1947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 국제질서의 재편과 새로운 경제체제의 도래를 위해 브레튼우즈 회의 결과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이 체결되었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은 모든 생산물의 비교우위로 평가되는 잣대의 적용을 통해 자유무역을 촉진할 수 있었고, 우리나라도 개발시대에 원자재의 수입과 가공을 통한 수출에 힘입어 괄목할만한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었다. 그런데 1960년대 들어 “침묵의 봄”에 따른 환경인식 여론 때문에 살충제에 대한 엄격한 규제가 강화되었음에도 소비자의 이익에 기여한다는 명분으로 무역부문에서는 특별한 규제가 부과되지 않았다. 바로 이러한 무역 규정상의 틈새를 다국적기업이 악용하는 사례가 나타났다. 특히 제3세계는 임금이 낮고 환경규제가 허술하여 공해산업이 자리잡게 되었다. 그래서 무역규정은 사람의 안전, 건강, 환경, 식품에 대한 실질적 규제 내용이 없는 고질라 같은 무역 공룡괴물(GATTZILLA)이라 불렸다.

이러한 환경 반작용 때문에 1995년 들어 무역부문에서 환경요소를 고려하되 다자간의 자유무역을 추구하도록 하는 세계무역기구

(WTO)가 출범하게 되었다. 그러나 세계 각국의 경제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호혜평등의 기본취지에 관계없이 국제무역은 강자논리에 따라 좌우된다. 따라서 비교우위가 낮은 산업은 냉혹한 자본의 논리에 따라 시장에서 도태될 수 밖에 없다. 한미 자유무역협정도 바로 이러한 결과라 할 수 있는데 양자간의 협상에 의해 상호관세가 철폐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FTA는 경제효율, 산업경쟁력과 같은 경제적인 측면을 강조하므로 환경파괴, 환경주권 침해 등을 초래할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가 있다. 특히 협정의 공식문건이 발표되지 않은 상황에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밀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본다. 특히 환경투자 부문에서 정당한 환경정책의 집행에 대하여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환경보전 지역지정, 유해물질 사용금지 조치 등으로 인해 외국인이 투자한 공장시설의 투자가치가 하락한 경우 간접수용을 이유로 소송제기가 가능해진다. 그 예로서 미국과 멕시코 간의 자유무역협정에서 유해폐기물 처리업체 메탈클래드사는 멕시코 중앙정부로부터 매립장 건설허가를 얻어 건설 완료하였으나, 당해지역 지방정부가 허가를 취소하고 운영을 금지시킨 사례가 있다. 중앙정부의 허가를 믿고 건설을 추진한 메탈클래드사의 입장에서 사업에 대한 합리적 기대가 침해된 셈인데 멕시코 정부는 메탈클래드사에 1,600만 불을 배상토록 국제중재부의 판결이 내려졌다.

그러나 예외조항이 있었더라면 생태보전지역 지정행위는 간접수용에 해당하지 않아 국가에서 해당회사에 손해 배상하는 사례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다. 바로 이러한 세밀한 규정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환경주권을 명확히 하는데 도움이 된다.

EU 및 중국 등과의 FTA 확대를 앞두고 환경정책을 선진화하고 우리 사회의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수단으로서 FTA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가 중요한 관점이 된다. 민간참여 촉진조항을 두어 협정이행에 있어 투명성을 높이고 민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도록 한 규정은 기업의 환경경영에 있어서 투명성과 건전성을 한층 강화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기대효과를 위해서는 국민, 기업, 정부가 앞으로 기울여야 할 노력 또한 적지 않다. 멕시코의 선행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환경대응은 가능한 경우의 수에 모두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협상의 작은 어구 하나가 전 국민의 생명과 재산권에 직접 영향을 줄만큼 심대한 세상에 살고 있다. 정부는 이제 그간의 협상 성적표를 들고 국민의 동의를 구해야 할 때이다.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파급효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예측하여 적절한 사전대응 대책을 강구해야 할 시점이다.

[정종관, 중도일보 2007년 4월 25일자]

국방대 지방 이전 원칙대로 논산으로

국가균형촉의 ‘행정도시로 이전’案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 에 배치

정부는 2005년 6월 24일 ‘공공기관 지방 이전 기본 계획’을 발표하면서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통하여 수도권 집중 및 과밀 해소와 함께 지역에는 성장 촉진 거점 형성이라는 뚜렷한 정책 목표와 추진원칙을 제시했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 기본 계획에선 전국의 176개 기관 중 41개는 행정도시로, 나머지 135개는 전국의 기타 지역으로 이전이 결정됐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지역 성장 거점 형성기능을 하도록 하기 위해 행정도시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은 혁신도시로 집단 이전토록 하고 있다. 다만 충남지역 내 행정도시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6개 기관은 지역 연고와 유관 기관 인접지역으로의 이전을 추진하여 클러스터 형성 등 지역 성장 거점 형성을 촉진토록 했다.

충청남도과 중앙의 관련 부처와 공동으로 체결한 ‘공공기관 지방 이전 이행 기본협약서’에 의하면 행정도시 이전 대상 기관의 입지

선정은 '행정도시 건설 기본 계획'에 따라, 그리고 6개 개별 이전 기관은 '혁신도시 입지 선정 지침'(혁신도시건설촉진법)의 절차에 따라 입지를 선정할 것을 명시했다. 개별 이전 기관의 하나인 경찰대학교는 경찰종합학교가 있는 아산지역으로, 중부 발전 및 서부 발전 본사는 화력발전소가 소재한 보령 및 태안지역으로 이전이 결정됐다. 다만 국방대학교의 경우 기본 계획에서 각 군 본부가 있는 충남지역의 원칙에 따라 논산지역으로의 이전을 추진하고 있으나 행정도시로의 이전을 희망하면서 아직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논산지역은 3군 본부뿐만 아니라 육군훈련소 및 육군항공학교 및 군수사령부 등이 인접되어 있고, 5~15분 거리 내에 호남고속철도 남공주역과 천안~논산 고속도로가 갖춰진 장점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4월 2일 국가균형위원회는 국민이 납득할 만한 논리와 근거도 없이 국방대학교의 행정도시 이전 안건을 상정하여 혼란과 갈등을 초래하고 있다. 국방대학교의 충남 이전 원칙이 무너지면 다른 이전 대상 기관들의 반발을 잠재울 논리를 상실할 우려가 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 기본 계획'에 의한 충남지역의 이전 대상 지역에 행정도시도 포함된다고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 이것은 행정자치부에서 수립하여 발표한 '공공기관 지방 이전 기본 계획'과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 계획 확정고시' 및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 계획 확정고시 후속 조치' 등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행정자치부의 '중앙행정기관 이전 계획의 확정고시'에서는 국방대학교는 행정도시 이전 대상 기관이 아님을 명시적으로 천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충남도는 물론 객관성을 띤 ‘공공기관이전특별위원회’의 민간 전문가들마저 국방대학교의 행정도시 이전 시도에 대하여 강력한 항의를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기존 계획의 치명적인 결함이나 예상치 못한 여건 변화 등과 같은 충분한 이유와 설득 과정도 없이 정책 기조를 흔들어서는 안 된다. 무리한 국방대학교 행정도시 이전 시도를 중단하고 기본 방향과 원칙대로 논산 이전을 추진해야 한다.

[김용웅, 조선일보 2007년 5월 5일자]

FTA 농·수·축산업 상생 모색할 때

요즘 돌아가는 사회세태를 보면 4·25 보궐선거의 결과를 놓고 당정 간 이해득실을 따지는 어수선함 속에 하루하루가 지나가고 있는 듯하다.

우리 충남도는 농업도로써 대부분의 농민들은 선거결과에 민감하게 매달리기보다는 가슴속 어디엔가는 석연치 않은 고민에 빠져 있는 것이 사실로써 농·수·축산업인의 입장에서 FTA를 고민하며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지난해 2월 3일 세계 최대의 시장이자 무역 강국인 미국과 한미 FTA 협상이 발효된 지 1년 2개월 동안 밀고 당기는 줄다리기 협상이 진통을 거듭한 끝에 마침내 주고받는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타결되었다.

이번 FTA 협상 타결은 농업 분야의 희생을 바탕으로 제조업, 의약, 교육 등의 방어에 성공했다는 평이나 세계 최대시장인 미국에 대한 기회가 확대되는 만큼 위기에 놓인 농·수·축산업인 등에게는

이미 시장개방으로 크나 큰 피해를 입은 상태에서 시간을 벌었을 뿐이지 파탄의 길로 내몰린 것은 자명한 일이다.

유럽연합(EU), 북미자유협정(NAFTA) 등 세계 경제의 블록화와 개방으로 지구촌이 국경없는 무한경쟁시대에 무역규모 세계 11위인 우리나라가 통상 대국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자유무역이 불가피한 선택이라고는 하나 전통 농업도인 우리도의 피해는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때보다 훨씬 더 큰 강도의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발표 자료에 의하면 전국의 농업생산액 감소는 1조 2,000억 원에서 2조 3,000억 원 정도로, 충남도의 경우 최소 1,340억 원에서 최대 2,570억 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다.

작목별로는 쇠고기, 돼지고기, 낙농 등의 피해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며, 농·수·축산업 분야에 미치는 영향은 시간문제일 뿐이지 수천 년 동안 이어온 국민의 식량주권과 자연생태계를 유지시켜 왔던 농업기반이 약화되어 재앙을 몰고 올 것이란 예측도 가능하다.

이에 충남도의회는 제8대에 들어 첫 개최된 제198회 임시회에서 한미 FTA가 우리 농어업에 미치는 영향과 피해분석을 통해 현실적인 대책을 먼저 마련한 뒤에 협상에 임할 것을 청와대 등 관계부서에 강력히 촉구한 바 있으며, 지난 4월 3일 한미 FTA 타결 직후 열린 제204회 임시회에서는 농·수·축산업인들이 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중앙정부와 충청남도지사에게 사후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대외에 표명한 바 있다.

우리의 농·수·축산업은 국민의 식량을 책임진 생명·환경·미래 산업인 동시에 공익적 기능과 다원적 문화가치 등 무한한 가능성을 갖고 있음을 인식하고 농민의 신음소리를 귀담아 들으며 농민과 도시민들이 상생(相生)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본다.

앞으로 정부차원의 피해분석 및 장기적인 측면에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FTA 농어업특별법 개정과 기금확충, 농·수·축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강화, 농업의 근본적 체질강화를 위한 맞춤형 농정추진, 농산품 수출확대 기술지원, 고품질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 활성화 지도대책 등 보다 더 적극적으로 대응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또 정부의 후속지원 대책과 더불어 지방자치단체 나름대로의 근본적인 대처 방안을 마련하여 한미 FTA에 따른 농·수·축산업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위기를 기회로 승화시킬 수 있도록 다 함께 고민하고 대처할 때라고 본다.

[유병기, 충청투데이 2007년 5월 9일자]

농촌개발사업으로 서천군에 새로운 활력을

농촌은 생산의 공간이자 삶의 공간이다. 그러나 도시에 비해 삶의 질적 측면에서 열악한 상황이다. 문화·문화·서비스 분야 등 어느 하나 만족할 만한 부문이 없다. 이러한 농촌을 개선시키기 위한 활동은 1970년대의 새마을운동에서 그 뿌리를 찾을 수 있다. 새마을운동은 초가지붕을 슬레이트지붕으로 개량하고, 마을 안길을 넓히는 등 농촌생활 환경개선에 초점을 맞췄다. 또 과학영농으로 농업생산성을 높이고 농촌소득도 올리는데 심혈을 기울인 결과 새마을운동은 큰 성과를 거뒀다.

세계 각국에서 새마을운동을 배우기 위해 잇따라 우리나라를 방문하고 있을 만큼 새마을운동이야말로 우리 농촌을 잠에서 깨어나게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이런저런 이유로 퇴색했고 더 이상의 농촌발전에 기여하질 못했다. 농촌발전운동이 정체해 있는 동안 농촌은 농업의 경쟁력 상실과 더불어 날로 활력을 잃어갔다. 그래서 나온 대안이 농촌개발사업이다. 이는 농촌을 단지 농업생산 공간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삶의 공간으로 유지·발전시키기 위한 복안이다. 국토보전과 균형발전은 물론 농촌

에 활력을 불어 넣어 고유한 자연환경과 전통문화를 살릴 수 있는 지속가능한 농촌개발을 이루자는 것이다. 농촌개발사업의 효과가 단지 농촌개발 만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2004년 현재 수도권 인구 과밀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인구가 1인 증가함에 따라 2,300만 원이 발생하는데 현 추세대로라면 2020년에는 인구 1인 증가시 총사회적 비용은 5,600만 원으로 증가하게 된다. 반면 농촌개발사업으로 농촌주민의 정주성을 높여 과도한 농·도간 인구이동을 억제한다면 도시 인구 집중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이다.

참여정부의 농촌개발사업은 지역의 자생역량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소프트웨어 자원을 개발하기보다는 하드웨어 구축에 치중돼 왔고 현재는 농림부로 일원화됐지만, 그간 농촌개발 관련 부처가 행자부와 농림부로 이원화된 탓에 중복투자로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그러나 상기 목적에 비취볼 때 농촌의 발전뿐만 아니라 국가 경쟁력 향상의 측면에서도 사업추진의 타당성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서천군은 국가 시책으로서의 농촌개발사업에 적극 부흥해 낙후된 지역을 발전시키고자, 각종 정부 지원 농촌개발 관련 사업에 선정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다. 정부의 방침을 면밀히 파악하고 농촌다움을 유지하면서 농촌의 자원을 농촌의 소득으로 연결 지을 수 있는 방안을 꾸준히 발굴해 왔다. 그 결과 녹색농촌체험마을 육성사업,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전원마을 조성사업, 정보화마을사업 등 다수의 농촌개발관련 정부지원사업에서 선정됐다. 이로 인해 지

역 곳곳에서 공동주차장, 마을회관 등 생활기반을 갖춰나갈 뿐만 아니라 녹색농촌체험관광으로 새로운 수입원을 창출하고 있으며 농촌을 이끌어갈 리더가 배출되고 있어, 농업의 위기 속에서도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한 노력이 이어질 수 있게 됐다. 최근에는 서천군 마산면과 한산면이 각각 농림부의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및 '거점면 중심마을 개발 시범사업'에 선정돼 지역의 거점으로 성장할 발판을 마련했다.

마산면은 청과물 농업을 기반으로 청과물농업단지와 농촌체험관광지, 도시민 유치공간이 어우러진 서천군 북부의 거점지역으로, 한산면은 한산모시, 소곡주, 5일장 등 지역의 전통자원을 적극 활용한 서천군 동남부의 거점지역으로 거듭날 전망이다.

이로써 장항읍을 산업과 문화, 역사가 살아 숨쉬는 소도읍으로 육성하는 장항읍 소도읍가꾸기사업 및 친환경농업을 중심으로 서천읍·마서면 일대 길산권역의 농업기반 확충 및 마을환경정비를 이끌 길산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등 현재 추진 중인 사업과 함께 지역발전을 이끌 견인차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간 서천군은 충남 서남쪽 끝의 변두리로 취급받으며 각종 개발에서 소외돼 왔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개발에서 소외된 결과 농촌, 어촌, 산촌다움, 그리고 우리 전통문화가 그대로 살아 숨쉬는 지역으로 남아 있게 됐다. 그리고 이러한 부존자원을 바탕으로 농촌개발사업을 전개해 쾌적한 관광도시, 전원생활을 동경하는 도시인 및 은퇴자가 살고 싶은 전원도시, 모든 산업이 적절히 어우러져 몰산

이 풍부한 도시로 거듭나려 하고 있다. FTA, DDA의 높은 파고 속에서 우리 농업·농촌의 살 길은 기존의 농업생산형 정책에서 농업 외 소득원 개발의 강화에 있다.

서천군이 그 실험현장의 한가운데에서 새로운 도약을 만들어 갈 것이다.

[나소열, 충청투데이 2007년 5월 11일자]

살기 좋은 도시 만들기

인류가 지구상에 출현한 이래 재난의 방지와 외적으로부터의 방어를 위해 모여살기 시작했다. 나아가 산업 활동에서 규모의 경제와 일상생활의 편리함을 추구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 도시를 형성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바람직한 으뜸의 도시모델로 그리스의 폴리스를 들고 있다.

물론, 현재와는 여건이 다른 집단 주거지 또는 도시로서의 특성을 갖고 있지만 살기 좋은 모델로서 몇 가지 특징이 있다. 도시 구성원이 갖는 역동성, 도시 규모와 인구수 유지의 안정성, 자연과의 조화, 도시의 성장관리 용이성 등 네 가지가 폴리스의 특성으로 꼽히고 있다. 이를 도시 생태적 관점에서는 자연의 순환성, 안정성, 자립성, 상호의존성이 잘 조화된 완벽한 그물구조에 가까운 상태라 할 수 있다.

도시의 환경관리에 중요한 역할은 토지이용에 대한 통제와 관련이 있다. 우리나라가 비교 지역으로 삼는 일본과 서유럽은 토지이용계획에 대해 가장 포괄적인 통제수단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들은

도시개발에서 효율을 중시함에 따라 주거, 교통, 공원, 하수처리 등 기반시설이 밀집된 고밀도개발을 지향하고 있다. 이에 비해 북미와 호주 등 도시계획 전통이 빈약한 곳에서는 수평적 확산을 방치함으로써 토지의 낭비가 심한 편이다.

예를 들어 뉴욕 대도시권은 지난 25년간 인구는 5%가 증가했음에도 개발면적은 61%나 증가하였다. 이 과정에서 자연과의 유대강화 방안으로 도심내의 녹화보다 녹지 공간 확보를 위해 교외로 이주가 증가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 결과 도시민은 교외에 위치한 대형 유통점에서 시장을 보고 쾌적한 생활을 즐기는 생활방식의 변화를 가져왔으나 환경이 감당할 수 없는 녹지의 잠식이라는 파괴적인 결과를 초래하였다.

현재 우리 대전·충남권에는 신도시, 뉴타운, 신개발지구 등 대규모 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의 도심권은 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교외로 출퇴근하는 인구가 크게 증가하여 교통체증에 따른 사회적 혼잡비용의 지불도 만만치 않다. 이러한 도시내 거점간의 선형 연결이 필요한 상황에서 자동차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도시환경계획 전략은 상당히 중요하다. 밀도가 높고 주상(住商)으로 잘 혼합된 도심지역을 외곽의 활동중심지와 결합시켜 이 지역들을 대중교통체계로 연계시키는 것이 효율적인 토지이용 방법이 된다.

주요 거점간의 연결이 원활하지 못할 경우 동맥경화와 같은 체증은 분명해 보인다. 도시내의 자연공원은 그 자체만으로도 중요하다. 그러나 터널을 뚫어 거점을 연결하는 것과 녹지를 그대로 보전하여

우회하는데 따른 추가 대기오염과 교통체증 문제는 엄밀한 비교분석이 요구된다. 터널구간 주위의 소음과 먼지는 나무와 비식용식물을 식재하여 오염물질을 차폐시킬 수도 있다. 도로는 기본적으로 사람이 이용하는 것이며 건설해 놓으면 수요를 창출하는 속성이 있다.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도구로서 도시환경계획이 좀 더 실행력을 가지려면 계획과정에 대중이 참여하는데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 지역사회의 매력과 역사 문화적 특성의 보전이 가능하다. 이러한 도시환경계획의 바람직한 목표실현을 위한 조건으로는 일반 대중과 정책결정자가 계획집행에 따른 예상결과에 대해 많은 정보를 갖고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도시내의 내부 교통망은 거점 간 연결 시 추가적인 혼잡을 유발하지 않도록 충분한 모의분석이 전제되어야 한다. 대도시를 중심으로 하는 광역교통망의 구축에는 주변지역과의 지역협력체계가 구축되어 한 지역의 토지이용이 타 지역의 발전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 이러한 전제조건이 바람직한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데 필요충분조건은 아니지만, 대중의 참여를 통한 시행착오를 줄이는 것이 그나마 의사결정의 완전성과 정당성에 근접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일 것이다.

[정종관, 중도일보 2007년 5월 23일자]

상생협력과 공공갈등관리

근래 우리 사회에서 비교적 쓸만한 용어로 사용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상생·협력’이다.

학계와 정치·행정·경제는 물론 언론에서도 적잖이 선호하는 것 같다. 그 배경에는 더 늦기 전에 갈등을 치유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급박한 사회적 요청이 자리 잡고 있다.

사실 오래 전부터 우리 사회는 이념갈등, 세대갈등, 지역갈등, 노사갈등 등 무수한 갈등을 겪어오고 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갈등을 전혀 경험하지 않을 수는 없다. 그래서 갈등현상을 필연적으로 보는 학자들이 많다.

그러나 문제는 ‘어떻게 갈등을 효과적으로 치유할 것인가’이다. 특히 공공부문의 갈등은 문제의 성격도 복잡하거나 시급히 해결하지 않으면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는 것들이 대부분이다. 더욱이 최근 들어 공공정책이나 공공사업 추진과 관련된 각종 갈등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특히 한번 표출된 갈등은 쉽게 해결되

지 않고 장기화되는 양상까지 보이고 있어, 국가·사회적으로 많은 비용부담과 함께 힘겨운 주민불편까지 초래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전 세계적으로도 성장위주 개발과정에서 상생·협력 보다는 사회갈등, 공공갈등이 계속적으로 증폭돼 왔으며, 아직까지 지속가능한 성장·발전에 대한 이렇다 할 실효성 있는 대안이 마련되지 못한 것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학계와 공직사회는 물론 시민사회단체, 경제계, 언론계 등에서 갈등해소와 상생·협력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을 기울이고는 있으나, 우리 사회를 보다 협력지향적인 방향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해서는 각계각층에서 뜻있는 인사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진지한 담론을 형성하고 허심탄회한 대화의 장을 통해 '협력적 커뮤니티'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이다.

이렇게 하면 공공정책 및 각종 사업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사전에 효율적으로 예방하고, 이의 체계적인 해결 노력을 통하여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면서 바람직한 상생협력의 사회통합적 기틀을 마련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더욱이 우리 사회가 '파트너십·네트워크형 거버넌스 시스템' 구축을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는 만큼, 서로 머리를 맞대고 진지하게 현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천적 노력을 전개해야한다.

충남도에서는 지난해 10월 30일 상생협력 및 갈등관리 플러스충남 정책포럼 창립대회 개최 후, 올해 5월 23일 워크숍을 속개하는 등 알찬 포럼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서는 상생협력 및 갈등관리를 위한 포럼회원 다수의 자발적 참여 촉진과 전문적 역량 강화 모색, 이론적 연구 성과를 현장 경험 및 대중적 지혜와 결합함으로써, 우리 사회를 더욱 생동감 있고 알찬 '상생과 협력의 커뮤니티'로 성숙시키는데 주력해야 할 것이 요청된다.

앞으로 이 포럼은 우리 사회의 다양한 참여주체들이 의견을 적극 개진하고 서로의 입장을 진솔하게 교환하는 '다자간 소통의 공간'으로 발전, 이러한 '담론형성과정'을 통해 갈등사안들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바람직한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할 수 있는 '공론 형성의 마당'으로 조속히 자리매김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뜻있는 인사들의 많은 기대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현재 포럼은 고문 1인, 각계의 공동대표 4인(상임공동대표 1인 포함), 감사 2인, 운영위원장 1인, 운영위원 15인으로 구성, 운영되고 있으나, 조만간 사무국 설치 및 권역별 워크숍 개최, 갈등관리자 교육프로그램 실시 및 지역 내 갈등 실태조사·유형화·해결방향 모색에 관한 연구사업도 병행하고자 한다.

(관련 홈페이지 <http://pcpf.or.kr/>)

[최병학, 중도일보 2007년 6월 18일자]

세종특별자치시 법안 철회되어야

정부는 행정중심복합도시를 광역자치단체인 '세종특별자치시'로 지정하는 지방행정법 개정안을 지난 5월 입법 예고한 후, 현재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행정도시에 대한 초법적 지위 부여 문제는 7월 착공과는 별개의 문제로 사전에 충분한 공론화와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정책 결정의 과정과 내용에 대한 많은 시비와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첫째, 행정도시를 광역자치단체인 특별시로 지정하려는 입법 조치는 명분없는 정치적 결정이다. 정부는 행정도시 건설의 효율적 추진과 국가 중추도시의 위상 확보, 그리고 주변지역에 대한 거점 기능을 하기 위해 행정도시에 특별한 법적 지위 부여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같은 정부 주장은 하나같이 객관적 근거와 논리적 타당성을 갖추지 못했다. 행정도시가 정부 직할의 특별시가 되어야 국책사업인 행정도시 건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다는 주장은 도시건설법과 제도에 대한 오해라고 할 수 있다. 행정도시 건설은 행

정도시건설특별법에 의거 지방행정구역의 법적 지위와는 무관하게 추진되며, 현재도 정부 직할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의하여 각종 계획수립 및 건설 업무가 이뤄지고 있다.

둘째, 행정도시를 광역자치단체 수준의 '특별시'로 지정하는 경우 불필요한 정부조직 확대와 행정 낭비를 초래한다. 행정도시가 광역자치단체가 되어 충남도에서 분리되면 또 다른 거대한 지방광역행정조직이 탄생하게 된다. 지방광역행정조직만 생겨나는 것이 아니다. 광역자치단체에 걸맞은 교육, 치안, 조세, 산업, 경제 등 다양한 분야의 중앙정부 및 공공기관 조직이 만들어지게 된다. 정부조직이 불필요하게 커지면 행정 낭비와 함께 예산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된다.

셋째, 행정도시에 특별한 법적 지위를 부여하면 그동안 유지해 온 지방행정체계의 일관성과 원칙이 붕괴된다. 그동안 광역자치단체가 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이 필요했다. 역사적 정체성을 지닌 광범위한 지역이거나 도시의 경우에는 인구가 100만 명이 넘는 행정수요를 지녀야 한다. 최근에는 대도시권 통합과 경제권의 출현 추세에 따라 인구가 100만 명이 넘어도 광역자치단체 지정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행정도시가 행정수도에 버금가기 때문에 미국의 워싱턴, 호주의 캔버라와 같이 특별지위를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인구 규모나 행정 수요에 관계없이 특별한 법적지위를 부여하는 것은 행정도시가 행정수도로 발전하는 데 큰 도움을 주지

못할 수 있다. 오히려 법제도의 혼란과 함께 막대한 국가적 예산과 사회적 손실을 초래한다는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끝으로 행정도시 초법적 지위 부여는 지금까지 순조롭게 진행되던 행정도시 건설에 차질을 초래할 수 있다. 가장 먼저 우려되는 점은 행정도시 건설에 대한 위헌성 논란의 부활이다. 행정도시를 특별시로 지정하는 경우 행정수도를 반대해 온 집단의 주장에 대한 정당성의 근거를 부여하는 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위헌성 논란의 재발은 행정도시 건설에 도움이 될 수 없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결국, 시급하지도 않은 행정도시의 법적 지위와 관할구역에 대한 일방적인 정책 결정으로 행정도시 건설에 차질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행정도시의 건설은 수도권 집중과 과밀 억제, 국가균형발전의 달성을 위한 가장 선도적 국책사업이다. 불필요한 갈등과 대립으로 행정도시의 성공적 추진이 차질을 빚지 않도록 행정도시 법적 지위 관련 입법추진은 철회되어야 한다.

[김용웅, 대전일보 2007년 6월 30일자]

농촌지역정책 발전의 방향과 과제

노무현 정부는 농촌정책을 농업정책, 소득정책과 더불어 농정 3대 기본축의 하나로 내세울 만큼 종래에 비해 그 중요성을 크게 강조하고 있다. 2004년의 「농업·농촌종합대책」은 농촌지역개발, 농촌사회안전망 확충 및 농촌복지인프라 구축 등 농촌정책의 세 가지 주요시책에 관해 추진단계별 목표치를 설정하고 있다. 또한 2005년부터 추진된 「삶의 질 향상 5개년계획」이 기존의 농촌주민을 대상으로 하는데 비해 2006년에 도입된 「복합생활공간조성정책」은 도시민의 농촌정주를 지원하는 취지가 담겨있어 농촌정책의 외연이 점차 확대되어 왔다.

그렇지만 개별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현행 농촌정책의 많은 부분은 농업정책의 하위시책들로 구성되어 있어 주로 농업과 농가를 대상으로 한 정책범주에 속하는 것이어서 개별지역의 특성이나 다양성이 충분히 감안되기 어려운 중앙정부 주도의 획일적 성격을 크게 벗어나지 못한다는 점에서 뚜렷한 한계를 지니고 있다.

농촌정책의 궁극적 목표가 농촌지역의 경제적·사회문화적·환경

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에 있다고 할 때, 현행 농촌정책에 포함되어 있는 다양한 개별시책들이 이와 같은 농촌정책의 궁극적 목표와 어떠한 논리적 연계를 지니는지가 명료하지 않다. 예컨대 연금·건강보험 등 농업인사회안전망 확충시책은 농업구조조정의 연착륙을 지원하는 취지를 지닌 것이어서 농촌지역개발정책 고유의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또한 교육·의료·복지 등 복지인프라 구축시책도 지역별 특성을 지닌 사업이 아니라 국민기본요구(national minimum)를 충족하기 위한 목적을 지닌 것이다. 그밖에 기존의 소득읍 개발 사업과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등을 포함한 종합적 거점개발, 경관보전에 대한 정책지원을 통한 어메니티의 증진 및 지역특구제도 등을 통한 투자유치 등 다양한 개별시책들이 지속 가능한 농촌지역발전과 어떠한 논리적 연관을 지니는지 전체적인 청사진이 보이지 않는다.

농업구조조정을 지원하고 농가의 농외소득을 확충하며 농촌지역 생활여건을 개선하는데 주안점을 둔 현행 농촌정책이 국토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농촌지역공간을 기능면에서 도시공간과 보완관계아래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통합적 농촌정책으로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근본적인 재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

먼저 정책대상이 되는 농촌지역의 개념·정의 문제이다. 행정구역상의 읍·면지역을 농촌으로 정의하는 현행의 분류방식만으로는 다양한 지역특성을 가진 정책대상지역의 선별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내실있는 농촌지역정책의 기획·추진을 위해서는 선진국에서 널

리 채용되는 인구밀도(DID)나 농가비율 또는 입지 등 사회경제적 지표를 기준으로 한 지역분류를 위한 조사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둘째로 농업·농촌에 대한 국민의 관심 내지 기대가 다원적 기능(multi functionality), 즉 국민식료(food)의 안전성과 품질, 물·공기·토양을 포함한 국토자원과 자연환경의 보전, 여가생활 및 정주공간으로서의 농촌지역의 어메니티 등으로 다양화되고 있으며 농업·농촌이 제공하는 이들 공익기능에 대한 사회적 보상체계로서 각종 직접지불제도를 도입하는 세계추세에 주목해야 한다.

셋째로 농촌지역경제활동의 다양화와 농촌사회구성의 혼주화 추세 아래서 농업문제와 농촌문제를 동일시하는 편협한 시각을 탈피하여 농업활동과 농촌지역사회발전 간의 상호의존성에 유의하면서 다양한 구성을 지닌 지역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농촌지역 발전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요청된다.

넷째로 이제부터 농촌정책은 경제·사회문화·환경적 측면을 포괄하는 통합적 접근아래 이루어져나가야 한다. 경제적 측면에서는 지역발전을 위한 물적 기초를 이루는 농업 및 비농업분야 경제활동의 여건조성과 지원이 요구되는 바, 농외소득정책은 농가의 농외소득 확대를 넘어 농촌지역경제활동의 다각화라는 관점에서 접근되어야 할 것이다. 사회문화적 측면에서는 교육·의료·복지·문화 등 공공서비스와 주택·도로·상하수도·교통·정보통신 등 사회간접자본 부문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한 공공부문의 재정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환경적 측면에서는 휴식 및 정주공간

으로서 농촌지역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확대됨에 따라 그동안 개발 과정에서 파괴된 농촌 환경 및 경관의 회복과 자연환경, 야생동식물, 유형·무형의 전통문화유산의 유지·보전 등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로 농촌정책추진에 있어서는 농촌지역의 다양성과 개성이 충분히 존중되어야 하며 도시와 차별화되는 농촌다움(rurality)과 여유로움이 추구되어야 한다. 따라서 개별지역의 부존자원과 잠재력을 바탕으로 하는 다양한 사업이 적재적소원칙 아래 이루어져야 하며 도시흥내를 내는 농촌개발이 아니라 도시와의 보완관계를 살려 나간다는 개발원칙이 지켜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위에서 언급한 농촌지역정책의 추진을 위해서는 중앙정부 주도의 획일적 추진이라는 종래 방식이 아니라 분권화와 주민 참여 확대를 바탕으로 한 상향식 개발방식이 적극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주민 주도의 상향식 농촌지역개발의 세계적 성공사례로서는 유럽연합(EU)의 LEADER(농촌지역경제발전을 위한 활동연대)프로그램을 들 수 있는 바, 우리나라의 사정에 맞는 방식의 도입이 적극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이하에서는 주민 주도의 통합적 농촌지역개발로 나아감에 있어 핵심이 되는 몇 가지 과제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먼저 농촌지역발전의 주체인 지역주민의 주체역량배양이다. 오랫동안 농촌인구의 급속한 유출과 고령화, 중앙정부주도 정책아래

농촌주민의 주체역량이 극히 취약한 상태에 있으며 외부에 대한 의존이 심화되고 있는 것이 우리 현실이다. 그러나 농촌지역 활성화는 공공부문의 역할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지역주민 스스로 지역 발전을 위한 장래계획수립과 추진주체로 되기 위해서는 주체역량 강화가 필수 불가결하게 요구된다. 여기서 말하는 주체역량배양이란 개인이나 관련조직·기관들이 당면문제를 해결하고 목표를 성취하는 능력을 개발하는 과정을 가리킨다. 주체역량강화를 위한 주요 수단으로는 ① 필요한 지식·기술의 습득과 태도·의식의 향상을 중심으로 하는 교육훈련의 강화와 ② 주민참여 및 다양한 활동주체들 간의 파트너십 형성을 위한 실천학습프로젝트(action-learning project)의 시범시행을 들 수 있으며, 이 두 가지 수단은 상호보완적인 성격을 지니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둘째로 농촌개발계획의 체계적 수립과 추진이다. 농촌개발정책의 지속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장치로 5~7년 정도의 기간에 관해 전국계획과 지역계획의 위계를 갖춘 통합적인 농촌개발계획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 계획내용에 있어 전국계획은 전국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기본 방향과 지침 등 주요 정책 틀을 규정하는데 그치고 각 지역의 특성과 중장기개발목표에 따른 구체적인 사업선택은 지역계획이 담당하는 역할분담이 바람직하다. 중앙과 지방간에는 협약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계획기간동안의 재정지원 의무와 지방비부담 및 계획실행 의무를 분담하고, 중앙정부 농촌정책의 통합조정기능을 강화함으로써 부처할거주의로 인한 비능률을 해소해 나가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농촌지역개발관련 주체들 사이의 역할분담체제의 적정화이다.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발전의 비전을 제시하고 주민역량을 결집하여 주민동의 아래 수립된 지역발전종합계획을 집행해나가는 중심적 역할을 담당해야 하며, 지역주민은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국민 일반과 농산물소비자의 요구에 적극 대응하여 지역경쟁력을 발전·강화하는 노력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 농협을 비롯한 다양한 지역조직은 지역농업을 조직화하고 시장교섭력을 강화하는 등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노력에 역할을 집중해나가야 할 것이다. 도·농간의 상호이해 증진과 교류협력 확대 또한 농촌지역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농산물직거래사업이나 도·농 교류 사업은 지역농산물의 안정적 판로 확보나 소득원의 확대를 넘어 도·농공동체문화의 확산을 위해서도 중요한 계기를 제공해 줄 것이다.

요컨대 장래의 농촌지역발전은 ① 지역발전주체의 자율성, ② 장기계획의 틀 아래 개별사업을 추진하는 계획성, ③ 경제·사회문화·환경 등 통합적 발전을 추구하는 통합성, ④ 지역개성을 살려 다양화해가는 독자성, ⑤ 타 지역과의 경쟁·협력·교류·연대를 중시하는 개방성을 토대로 할 때 그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정영일, 열린충남 2007년 7월호 통권39호]

문화의 양기 짝은 충남을 꿈꾸며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기 때문이다.”

백범 김 구 선생의 ‘내가 원하는 우리나라’의 서두 부분이다. 이 글을 처음 대할 때 그토록 나라가 어지러웠던 시기에 문화대국의 꿈을 꾸었던 민족지도자의 통찰력에 대한 존경과 이토록 훌륭한 선배를 둔 뿌듯함이 충만했던 기억을 한다.

부임 초 경제도지사가 되고자 했던 다짐은 궁극적으로 그 목표가 문화의 힘이 충만된 충남이라는 점을 숨길 수 없다. 진정한 선진국은 문화선진국임은 누구나 알고 있는 주지의 사실이다.

문화대국 프랑스의 문화경쟁력은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국민들, 그리고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문화생활을 향유하며, 모든 장르의 예술이 골고루 발전할 수 있도록 치밀하고 세심하게 정책을 펴

나가는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장인을 국보로 대우하는 제도에서부터 세계 최고의 디자인과 브랜드로 승부를 거는 자존심, 그리고 지역별로 차별화되고 특화된 문화정책은 이탈리아의 성장동력이 되고 있다.

프랑스와 이탈리아뿐만 아니라 유럽의 선진도시는 문화로 꽃을 피우고 있다. 이미 문화가 국가의 핵심경쟁력으로 자리 잡았으며, 문화예술과 문화산업을 기초로 한 다양한 마케팅이 전개되고 있다.

건물 하나하나에서부터 도시의 자연환경, 박물관, 미술관 등 예술 공간, 역사적인 유물과 유적 그리고 축제에 이르기까지 명품화를 위한 노력이 한창이다.

지금 우리에게 문화는 무엇인지, 어떻게 특화할 것인지 그리고 우리 후손들에게 무엇을 남겨야 하는지 고민해야 한다. 지역의 문화역량을 축적하고 문화예술인을 키우며 문화 인프라를 확충하는 일에 몰두해야 한다. 축제는 높은 예술적 안목과 세련된 운영으로 도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 나가야 한다.

우리나라 3대 축제인 백제문화제가 금년 처음으로 통합축제로 열린다. 우리 충남의 자존심은 백제의 역사이고 그 찬란했던 문화이며 이는 우리의 소중한 자산이다. 때문에 잃어버린 백제 역사를 온전하게 정립하고 백제문화제를 세계적인 명품축제로 키우는 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 백제인의 후손으로서 마땅한 과제임에 틀림없다.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 재단이 출범하여 민간중심의 체제를 갖추었다. 예년의 보여주는 축제에서 참여형 축제로 전환하고 공모를 통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어제와는 다른 새롭게 변모된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아직은 갓 시집보낸 딸을 걱정하는 부모마음과도 같다. 빼격거리고 허점도 많아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품화된 축제를 만들고 향기 짙은 문화충남을 향한 걸음을 여기서 멈출 수는 없는 것이다.

이러한 백제문화제의 기반 위에서 2010년에는 700년 대백제인의 꿈을 재현하는 '대백제전'을 치를 계획이다. 모든 계획에는 투자가 뒤따라야 한다. 문화예술부문 투자확대의 당위성 뒤에는 우리 충남의 여의치 못한 재정형편이 발목을 잡는다. 그렇다고 여기에서 발을 동동 구를 수는 없는 노릇이다.

해마다 절감되는 40억-50억 규모의 예산을 모아서 문화예술 분야에 투자하기로 했다. 우리 충남의 문화예술분야의 문제는 무엇인지, 어느 부분에 먼저 투자해야 하는지를 지금 고민중에 있다. 내년도 예산편성 이전에 투자계획을 세워 지역의 문화역량을 키우기 위한 공감대를 만들고 도민들의 협조를 구할 생각이다.

첫술에 배부르랴 하는 말이 있듯이 투자효과가 당장 나타날 것이라고 기대할 수는 없다. 그러나 10년의 계획을 세워 꾸준히 투자하

고 우리 충남의 문화적 역량을 높여나간다면 그토록 김 구 선생님이 원했던 문화대국의 꿈에 한 발짝 더 다가설 수 있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져본다.

[이완구, 대전일보 2007년 7월 7일자]

누가 수도권 규제 완화이라고 하나

수도권 규제 시책은 수도권으로 집중억제와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정부가 20년 넘게 추진해 온 국가의 핵심적인 정책수단이다. 최근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수도권 규제시책에 대한 무분별한 비판과 규제 완화 요구가 증대되고 있으나 합리적이고 실증적인 근거 없이 확대·재생산돼서는 안 된다. 수도권 규제 비판론의 요지를 하나하나 살펴보면 객관성을 무시한 채 일부 지역이나 기업집단의 단기적인 이해를 대변하는 데만 치중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

첫째, 수도권 규제 비판론자들은 세계화 시대에 지역균형 발전은 바람직하지도 않고 가능하지도 않다고 주장한다. 개방경제 아래 수도권을 규제하면 수도권의 국제 경쟁력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수도권 규제 효과가 지방발전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이런 주장은 일견 타당해 보이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는 처음부터 지역균형 발전 개념을 왜곡하고 있다. 세계화 시대에 어느 나라도 지역 간 하향 평준화를 균형발전이라 부르지 않는다. 모든 지역이 고유하게 지닌 발전 잠재력을 극대화하

고 특화된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지역균형 발전이라 부른다. 수도권 규제 시책은 수도권이 집중과 과밀, 혼잡으로 일어나는 고비용 저효율의 덩어리에서 벗어나도록 하고, 지방이 중앙의 과도한 지배력으로부터 벗어나 자립·자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수많은 정책수단의 하나임을 명심해야 한다.

수도권 규제로 기업투자가 저해됐을까?

국가경쟁력이 약화됐을까?

과밀 방치하면 정말로 투자도 경쟁력도 저하

둘째, 수도권 규제로 수도권 안 기업투자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정말 그럴까? 제조업 성장과 관련한 그동안의 실증적 자료를 보면 이런 주장은 지나친 과장임을 알 수 있다. 2000년 이후 전국적으로 증가한 제조업체의 58.7%가 수도권에 집중됐다. 설비투자 비중도 수도권은 전국의 45.3%를 차지했다. 이런 사실만 봐도 수도권 규제로 일부 기업의 투자는 제약을 받았을지 모르나 그것이 전반적인 기업투자 위축을 가져와 국가 경제성장을 저해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수도권 규제 시책에도 수도권에는 제조업 투자뿐만 아니라 최근까지 대규모의 개발 사업이 집중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6,000만평에 이르는 경제자유구역 조성사업(미국 뉴욕 맨해튼의 30배)과 새도시 건설 및 택지개발사업(전국의 60%에 해당) 등이다. 전국의 60% 안팎의 투자와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규제 때문에 기업투자와 경제성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셋째, 수도권 규제가 수도권은 물론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라는 주장이다. 도시지역으로서 수도권의 국제 경쟁력은 생산성과 도시 매력도에 따라 결정된다. 수도권은 과밀과 혼잡으로 발생하는 물류비용의 증대, 난개발과 환경오염, 부동산 가격 상승, 그리고 경직된 노동시장 문제 등으로 생산성 경쟁에서 뒤처지고 있다. 이대로 서울과 수도권의 집중과 과밀, 환경훼손 및 난개발을 방치하면 머지않아 수도권의 경쟁력 약화는 물론 발전 잠재력마저 고갈될 수밖에 없다.

수도권의 무분별한 양적 성장을 막는 마지막 보루인 수도권 규제를 마땅한 대안 없이 철폐하자는 무책임한 주장은 더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제부터라도 수도권과 지방이 힘을 합쳐 수도권의 과밀·혼잡과 난개발 피해를 줄이고 지방과 상생발전을 통하여 국가발전의 잠재력과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길을 함께 모색하는 데 힘썼으면 한다.

[김용웅, 한겨레신문 2007년 7월 6일자]

전국최고의 지역 싱크탱크로 거듭날 것

김용웅(64) 충남발전연구원장이 9일 5대 원장직을 수행해온지 꼭 3년이 됐다.

능력만큼이나 '일 복'도 많아, 재임기간 동안 행정수도 등 각종 굵직한 충남의 현안에 눈 코 뜰 사이가 없었다. 그는 지금도 연구원 및 사무처 직원들과 함께 매 순간마다 200만 도민들의 '두뇌'로서 충남발전을 위한 논리개발에 여념이 없다. 제6대 원장으로 또 다른 큰 걸음을 준비하고 있는 김 원장을 그의 집무실에서 만나보았다.
<편집자 주>

성공적인 도청이전 예정지 선정 기억에 남아
연구 테두리 뛰어넘어 지식네트워크 구축 추진
외부 전문 인력과 협동 강화 연구 실용성 제고
충남 경제발전·도민 삶의 질 증진 기여 최선을

-행정도시 건설 등 참으로 어렵고도 중요한 시기에 원장으로 부임했다. 지난 3년을 돌이켜 본다면.

▲지난 3년 충남지역은 도약을 위한 격동의 시기였다. 국책연구원과 대학 강의 활동 경험으로 얻은 전문지식과 경험을 통해 지역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미력이나마 고향 발전에 기여하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 특히 초심을 유지하며 업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신 충남도지사님을 비롯한 도민과 도의회, 지방행정 당국자, 지역 언론계, 사회단체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가장 보람있었던 일과 반대로 아쉬웠던 점은 무엇이었다.

▲가장 보람 있었던 일은 지역 간 이해가 첨예한 도청이전 예정지 선정 작업을 큰 문제없이 수행한 부분이다. 이는 후보지 선정과 평가 작업에 있어 과학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본다. 이후 충발연의 도청이전 예정지 선정을 위한 과학적 입지 분석과 평가방식은 전국적으로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고 있어 더욱 자랑스럽다.

충남발전연구원은 국방대학교 논산유치와 장항산업단지 조기 착공, 행정도시 건설 등 대표적인 국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대국민 이해와 중앙정부 설득을 위한 논리개발, 도정지원 업무를 활발히 전개해 왔다. 개인적으로는 지난 3년간 100회에 가까운 전국 단위 세미나 및 정책협의회에 참석했고, 30여회가 넘는 언론기고 및 강연활동을 했다. 이런 활동을 통해 국책사업의 성공적 추진과 충남도의 이익을 조금이나마 대변할 수 있었던 것 같아 뿌듯하다.

아쉬웠던 점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충청지역 주민들의 투쟁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신행정수도 건설이 위헌판결로 좌절된 점이

다. 신행정수도의 대안으로 현재 행복도시가 건설되고 있으나 국가 균형발전의 진정한 정책목표 실현을 위해서는, 반드시 행정도시가 행정수도에 버금갈 수 있는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성되어야 한다.

다른 하나는 그동안 열악한 근무 환경과 과도한 업무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연구를 수행해 온 연구원 식구들에게 기대한 만큼의 연구여건과 복지기반을 마련해 주지 못한 점이다. 미안한 마음을 늘 가지고 있고 앞으로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충남도의 '싱크탱크'로서 위상과 역할, 나아갈 방향은 무엇인가.

▲지역 싱크탱크는 그동안 지역경제, 도시와 농촌의 개발, 문화와 환경 등 지역미래를 전망하고 방향성을 제시하는 역할만을 담당해 왔다. 지역발전을 위한 아이디어와 시책을 개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연구를 위한 연구에 머물러서는 안 될 것이며, 지역 내 지식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역할도 함께 수행해야만 한다. 이밖에 지역사회의 지역발전 추진 역량을 키우고, 지역 내 다양한 이해를 조정하고 신뢰와 공감대를 형성하는 일도 함께 해야 한다.

앞으로 총발연은 새로운 정보와 지식의 창출이라는 본연의 역할은 물론 지식 네트워크의 구축, 사회적 학습과 참여의 증진, 합의기반을 키워나가는 일도 함께 할 것이다.

- 총발연이 가장 크게 극복해 내야 할 과제가 있다면.

▲충남발전연구원이 직면한 가장 큰 과제는 지방자치와 분권, 지방화의 전개에 따라 증대되는 연구수요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연구수요가 커진 만큼 연구 인력과 조직을 키우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전담연구원의 증원을 되도록 억제하고 외부 전문가의 활용을 확대하려 한다. 경직되고 폐쇄적인 연구조직과 연구수행방식 및 관행을 과감히 타파하고, 협동연구 수행을 위한 개방형 조직과 체제를 갖춰야 한다. 비상임 초빙 연구위원제 도입, 외부 공모 및 제안 연구과제 수행, 외부 전문 인력과 공동연구 수행 확대를 위한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동안 연구 실용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은 원인중 하나는 연구결과를 활용할 당사자와 연구결과에 영향을 받을 집단의 연구 참여가 미흡하고 형식적이었던 점이다. 이 같은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연구초반부터 연구 수요자인 지방행정 관계자와 연구원이 동반자로 참여하는 '공동학습 및 협동연구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연구원 운영의 어려움과 타 시도 연구를 비교한다면.

▲그동안 이사회, 충남도와 시·군 당국자 및 지역사회 전문가 집단, 언론 등에서 많은 격려와 지원을 해 주셨기 때문에, 연구원 운영에 특별한 어려움은 없었다.

전국 지역연구기관은 시도별로 14개가 있으나 규모나 역사가 달

라 비교가 쉽지 않다. 서울과 경기도의 경우 연구 인력이 거의 100여명에 달하는 반면, 타 시도연구원은 연구 인력이 30~40명으로 충발연과 큰 차이가 없다. 다만 타 시도 연구원에 비해 기금이나 예산 지원액은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이지만, 연구원 1인당 연구량은 타 연구원의 2배 가까이 돼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차이는 충남발전연구원이 지난 3년간 급격히 성장하는 과정에서 나온 일시적 현상이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충청권 3개 시·도와의 공조는 어떻게 돼가고 있다.

▲민선4기 출범과 함께 대전·충남·북 3개 시도가 상생 공동발전의 의지를 밝힌 후, 그동안 구체적 실천방안이 마련되고 있다. 그동안 충청권 3개 시·도 연구원은 공동연구단을 구성해 3차에 걸친 워크숍 및 실무회의를 진행했으며, 충청권 공동발전구상(안)과 충청권발전특별법(초안) 등의 작성을 완료했다. 앞으로는 충청권 내 3개 시·도 집행부가 충청권발전특별법 법제화 및 경제협력방안 실천을 확대할 것으로 기대한다.

-민간 싱크탱크인 '희망제작소'가 최근 부각되고 있다. 충발연과의 관계설정은 어떻게 되나.

▲충발연은 도정과 지역발전을 위한 종합연구기관으로, 다양한 분야의 체계적인 연구와 도정지원 역할을 한다. 반면 민간 싱크탱크인 '희망제작소'는 도정과 지역발전의 특정분야에 대해 자유롭고 집중적이며,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특히 공공행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민간의 창의와 활력을 접목시키는 역할을 하게 된다. 종합성과 공공의 책임성이 강조되는 충남발전연구원과 자유로운 민간부문 연구기관인 희망제작소는 보완과 협력의 필요성이 높다.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충남도의 발전과 충남도민의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제6대 원장으로서 각오를 말해 달라.

▲공공조직도 민간기업과 같이 고객의 가치에 기여해야 한다. 충남발연은 앞으로 충남 경제발전과 주민 삶의 질을 증진할 수 있는 실용적인 연구를 수행, 도민에게 보답하고자 한다.

또 전국 최고의 싱크탱크로 거듭나기 위해 지난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지속적인 변화와 혁신 노력을 전개할 것이다. 모든 구성원이 합심해서 지방자치와 분권시대에 맞는 연구조직과 수행모형을 개발해 지역과 국가발전을 선도하는 연구기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중도일보 2007년 7월 10일자]

충남발전을 위한 싱크탱크

충남도와 16개 시·군이 출연하여 1995년 전국에서 9번째로 설립된 '충남발전연구원'이 올해로 개원12주년을 맞이하였다. 설립초기 연구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 미흡, 재정지원 열악, 연구인력 부족 등으로 인해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으나, 2006년 말 현재 1인당 연구건수가 전국평균의 약 2배에 달하는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룩하였다.

연구역량이 곧 경쟁력

질적인 면에서도 도·시·군 정책개발, 국비확보 및 지방비 절감에 기여, 자치단체의 중앙정부 공모사업에 대한 컨설팅 및 코칭 등 국책연구원과 비교해도 손색없는 싱크 탱크(Think Tank)로서 성장하고 있다. 이러한 성장은 연구원 스스로 한발 앞서 나가기 위한 혁신의지가 충만했고, 충남도와 시·군에서도 일류연구원을 육성하기 위해 신뢰하고 지원해준 결과의 산물이다.

그러나 충남발전연구원이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수도권 자치단체

출연연구원과의 경쟁에서 우월한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연구역량 강화와 더불어 안정적 재원 확충이 필수적이다. 2007년 5월 개최된 전국시도연구원협의회 세미나 자료에 의하면, 시도연구원의 연구원·연구지원·행정직원 수, 연구원 1인당 연구 활동 예산 등이 정부출연연구원에 비해 열악한 상황인 것으로 밝혀졌다.

시·도연구원의 재원 및 연구 인력의 부족, 상대적으로 낮은 근무 환경 등으로 인해 비수도권 소재 연구원은 지역의 미래발전을 위한 장기 청사진 제시보다 단기적 현안과제와 연구원 기금확보를 위한 수탁과제 중심의 소극적 연구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

지금부터라도 서해안 시대 중국과의 무한경쟁에 대응하고, 수도권 일극집중의 해소, 대전·충북·충남의 상생발전을 통한 중부권 중심시대에 대비하기 위한 원대하고 미래지향적인 비전제시 등 보다 장기적·거시적 연구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충남도가 중국과의 경쟁하여 살아남을 수 있는 산업경쟁력을 확보하고, 수도권과도 당당하게 경쟁하여 '한국의 중심, 강한 충남'을 실현할 수 있도록 충남발전연구원은 새로운 패러다임에 입각한 연구를 통해 충남도의 정책개발을 지원하고, 충청남도는 안정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재원확보에 노력함으로써 관·연 협력이 한층 더 공고해질 것이다.

연구원 스스로도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매진해야 하는 반면, 마음 놓고 연구할 수 있는 연구 환경 조성과 새로운 지식습득을 위한 교

육훈련 기회확대를 통해 연구원들의 연구역량을 높여나가야 할 책임이 있다.

충남도민과 지역사회 역시 연구원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잘못된 꾸짖어주는 동시에 격려하고, 정성을 다해 보살펴주기를 기대한다.

지난 10년 이상 불황에서 허덕이던 일본이 본격적인 이륙준비를 하게 된 이면에는 돈만 생기면 연구개발에 투자하는 R&D가 곧 경쟁력이라는 경험적 확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한다.

안정적 자원·인력 필수

충남도는 지리적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교량역할을 수행해 왔다. 국가적으로는 비수도권으로 분류되면서, 지역적으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혼재된 지역이라는 연유로 일관성 있는 정책개발 및 집행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지역이다.

민선 4기 출범 1년을 맞이하면서, 충청남도가 전국최고의 경쟁력을 가지면서도 도내 지역 간 균형발전의 실현이라는 도정방침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충남발전연구원을 비롯한 도 산하 연구기관의 연구역량 강화와 파트너십 형성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송두범, 충청투데이 2007년 7월 24일자]

태안 해양문화박물관 반드시 건립해야

스웨덴의 수도 스톡홀름에는 바사왕조 때 독일의 30년 전쟁에 참전하기 위해 건조돼 불과 1300m를 항해하다 침몰해 버린 당시 세계 최대의 전함을 전시한 바사호박물관(Wasamuseet)이 있다. 바사호를 건조했던 조선소 자리에 인양한 선체를 복원·전시하고 있는 바사호 박물관은 스칸디나비아반도 박물관 중 가장 많은 방문객이 찾는 명소가 되었다.

바사호는 1950년대 초반 안더스 프란젠(Anders Franzen)이라는 고고학자겸 엔지니어가 좁조개에 갇아 먹힌 뱃조각을 우연히 발견하면서부터 시작해 5년간의 인양작업을 거쳐, 오랜 복원작업 끝에 지금의 화려한 모습으로 부활하였다.

태안군 근흥면 대섬 인근 해역에서 주꾸미를 잡던 어부가 청자대 접 1점을 인양한 것을 시작으로 고선박과 다량의 고려청자가 발견되었다.

바사호와 고선박·고려청자 모두 개인에 의해 우연히 시작되어 후세에 길이 남을 만한 결과를 가져온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바사호

박물관이 바사호가 건조된 자리에 건립되었다는 점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태안에서 인양된 고려청자 등은 발굴 뒤 전남 목포의 '국립해양유물전시관'으로 옮겨질 예정이라고 한다. 유물의 보존·처리를 위해 '국립해양유물전시관'에 임시 보관하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모든 유적, 유물은 발굴된 그 자리에 있을 때 한층 더 의미가 커진다는 점에서, 인양장소와 멀지 않는 곳에서 유물을 전시·보관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가 요구된다. 태안에서 발견된 것은 태안에서 볼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국립해양유물전시관'도 이러한 원칙에 입각하여 신안군 해저에서 인양한 유물들의 보존 및 전시를 위해 인근의 목포에 설립되었던 것이다. 근흥면 해안 일대는 예로부터 조류의 흐름이 빨라 조운선이 빈번히 침몰한 '안흥량'으로 알려져 왔다. 앞으로도 태안 해안에서는 새로운 침몰선박 및 유물이 발견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태안인근에 별도의 해양박물관 건립은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태안반도는 우리나라 유일의 해상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어 갯벌, 생태습지, 해안사구, 송림, 해수욕장, 항포구, 수목원 등 아름다운 경관을 볼 수 있는 지역이다. 역사적으로도 백제시대 중국으로 통하는 뱃길 교통로이며 불교유입지역이다. 이러한 연유로 패총, 독살, 풍어제, 자염, 굴포운하, 별주부마을, 안면도 등 다양한 해양문화자원과 백화산성, 소근진성, 태안읍성, 안흥성 등 내포문화자원이

조화를 이루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다.

다양한 자원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해수욕장과 자연경관 중심의 관광패턴은 지역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던 것도 사실이다. 이번 고려청자 등의 발굴은 기존의 태안관광을 질적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태안군도 이러한 점을 인식해 '해양유물문화전시관' 건립을 추진키로 하고, 국내외 벤치마킹 및 새로운 형태의 해양역사교육장을 만든다는 구상을 가지고 있다.

이참에 고려청자를 중심으로 한 '해양유물전시관'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태안군의 해양문화와 내포문화를 집대성하여 조사·전시·교육할 수 있는 '해양문화박물관'으로 그 꿈을 키워보자.

스웨덴의 바사호 박물관과 견주어 손색없는 세계적인 '태안 해양문화박물관'이 고선박과 고려청자가 인양된 태안지역에 건립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할 시점이다.

[송두범, 충청투데이 2007년 8월 3일자]

충남도 산하 싱크탱크간 공동협력 응원해야

충청남도 산하 6개 연구기관인 충남발전연구원, 충남여성정책개발원, 충남역사문화연구원, 충남테크노파크, 충남농업테크노파크, 충남디지털문화산업진흥원 등이 얼마 전 연구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충청권 3개 시도연구원간 공동연구단 구성에 이어, 도 산하 연구기관 간 상생협력체결은 기존의 분할된 전문지식에서 탈피하여, 통합된 지식사회를 열어가기 위한 '통합관리'의 첫걸음이라 할 수 있다.

중앙정부는 이미 정부부처 소속의 모든 국책연구원을 그 성격에 따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기초기술연구회, 산업기술연구회, 공공기술연구회 등 4개 연구회로 구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통합관리하고 있다. 이 4개 연구회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효율적 지원, 연구성과의 공유, 협동연구실시 등을 통해 국가 정책 발굴 및 지원에 통합된 힘을 발휘하고 있다.

충청남도 또한 여러 부서에서 분산 추진되어 왔던 물 관리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전국자치단체에서는 처음으로 ‘물통합관리본부’, ‘수질총량관리센터’ 등을 설치하여 통합적 물관리체계를 구축하였다. 최근 이러한 성과를 인정받아 물관리 최우수기관에 선정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지금까지 지방정부 산하 연구기관은 개별 조직의 역량강화에 관심을 두었을 뿐, 연구기관 간 거버넌스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데는 상대적으로 소홀했다. 그 결과 개별연구기관 자체의 질적·양적 성장은 이루어졌으나, 자치단체에 대한 정책기여도를 높이는 데는 한계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도 산하 다양한 분야의 연구기관이 공동연구단 구성 등 유기적인 연구네트워크를 구축한다면, 자치단체와 도민의 만족도 제고와 함께, 통합적 도정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연구기관간에도 상대적으로 앞서가는 연구원에 대한 벤치마킹과 합동연구를 통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행정중심복합도시 및 대덕연구개발특구 활성화, 로봇랜드 대전유치, 국방대학교 논산 이전, 청주공항활성화 등과 같은 충청권 현안사업의 해결을 위해 충청권 3개 시·도 자치단체장들이 행정구역을 넘어 광역적인 협력을 시도하고 있다. 역시 개별 자치단체의 노력만으론 현안문제의 해결에 한계가 있음을 인식하고 있다는 반증이 아니겠는가.

이러한 시대적 흐름을 선도해야 하는 것이 싱크 탱크(Think

Tank)의 역할이라고 본다면, 동일한 자치단체 산하 연구기관 간 협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이번에 협약체결을 통해 도시 및 지역개발, 농촌개발, 산업경제, 역사문화, 여성, 인적자원개발, 전략산업, 디자인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공동연구단을 구성함에 따라, 광역자치단체의 종합행정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했다고 할 수 있다.

그동안 개별 연구원간 특정사안에 대한 연구 참여 등 한정된 형태의 공동연구는 있어 왔지만, 도 산하 연구기관을 망라하는 연구 네트워크 구축은 처음으로 시도되기 때문에 시행착오도 예상된다.

그러나 이미 협력과 제휴는 우리 사회의 거스를 수 없는 화두가 된 지 오래다. 이제 그 필요성과 당위성을 논하는 것에서 벗어나 하나의 성공사례를 만들어가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충남의 싱크탱크 모두가 개성 넘치고 창의적인 자기만의 색깔을 뽐내며 동시에 충남도의 미래 발전을 위한 통합된 사고로 결집할 때 '한국의 중심, 강한 충남'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올 것이다.

[송두범, 중도일보 2007년 9월 1일자]

명품 행정도시 성공하려면

지난 40여년 간 우리나라는 급격한 산업발전과 압축 성장으로 세계적 모범사례가 됐으나 아직도 도시환경은 조악하고 시설기반은 취약하여 주민의 삶의 질은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그러나 행정도시는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명품도시로 건설될 예정으로 그동안 양적 팽창에 의존했던 건축과 도시개발 관행을 크게 변화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도시는 명품도시로 탄생되기 위해 세계적 수준의 도시 시설과 함께 녹지와 도시가 어우러진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데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명품 행정도시의 건설경험과 사례는 도시 및 공간의 질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관행의 대 변화와 함께 우리나라의 미래 정주환경과 문화를 새롭게 정립하는 데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도시를 지식·정보사회에서 요구되는 삶의 질에 대한 요구를 만족시키고 특화된 경쟁력과 생산성을 발휘할 수 있는 도시기반과 여건을 종합적으로 갖춘 명품도시모형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노력이 경주되어야 한다.

첫째, 행정도시는 자연환경과 도시개발간의 조화와 지속가능한 도시개발모형을 보여주어야 한다. 행정도시는 자연녹지나 공원 면적의 확대와 함께 대체불능 자원의 이용과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고, 오염 및 폐기물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감축할 수 있는 도시개발 및 관리 모형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행정도시는 우리나라의 고유한 역사와 전통 그리고 문화적 정체성을 살리는 도시건축과 개발모형을 만들어 내야 한다. 한국적인 전통과 문화를 21세기 시대적 요구에 접목시켜 나갈 수 있는 공공 디자인의 획기적 개선이 필요하다.

셋째, 행정도시는 첨단기술과 지식·정보화 시대를 선도하는 창조 도시의 모델이 되어야 한다. 행정도시에는 정보·통신 및 첨단기술에 기초한 도시기반과 운영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행정도시는 지속적인 정보와 기술 혁신이 가능한 도시기반과 여건을 갖추어야 한다.

넷째, 도시민 모두에게 동등한 참여기회와 삶의 질을 보장하는 포용도시모형을 제시해야 한다. 노인, 여성, 장애인 및 저소득층 등 상대적 불이익 집단의 사회적 참여 확대와 삶의 질이 보장되지 않으면, 생산성과 효율성을 갖춘 명품도시 건설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을 행정도시를 통하여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이외에 행정도시가 명품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도시환경과 시설 수준의 향상뿐만 아니라 중추업무도시로서 자생력과 경쟁력도 갖추어야 한다. 자생력을 갖춘 중추업무도시를 조성하기 위해서 행정도시에는 정부부처의 10배가 넘는 15만 명 이상의 민간중추업무 기능이 이전되어야 한다.

행정도시 건설이 국가균형발전과 함께 우리나라의 취약한 공간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국민 모두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국가적 경쟁력을 높이는 21세기 대한민국의 희망 프로젝트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김용웅, 중도일보 2007년 9월 3일자]

논산을 국방클러스터 중심으로

충청남도는 그동안 국방대학교의 논산유치를 적극 추진해 왔다. 논산지역은 육군 훈련소, 육군 항공학교 등과 함께 동일 생활권내 3군 본부와 군수사령부, 자운대 등 군사관련기관이 집중되어 있어 연고지 배치원칙 차원에서 보면 국방대학교 유치를 위한 최적의 입지조건을 갖춘 지역이다.

정부는 6개 공공기관의 충남이전을 발표하면서 연고지 이전원칙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경찰대학, 중부발전 및 서부발전 본사는 각각 경찰종합학교가 있는 아산지역과 소속사의 화력발전소가 소재한 보령 및 태안지역으로 입지가 결정되었다. 논산지역은 간선 고속교통망인 고속도로 및 고속철도와의 접근성은 물론 대도시근교지역으로서 양호한 교육, 문화, 의료,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충청남도는 국방대학교 입지여건 개선을 위해 진입로 건설 및 쾌적하고 현대적인 전원형 주거단지의 조성과 질 높은 교육 서비스 제공을 위한 대규모 재정투자과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 그러나 국방대학교의 논산 이전이 필요한 가장 큰 이유는 논산지역이 지닌

국방산업 클러스터 조성 잠재력과 발전 가능성이라 할 수 있다.

정보·통신 전자기술과 항공, 로켓, 로봇 등 정밀기계 및 신소재 분야의 첨단기술에 의존하는 국방산업은 기술혁신과 산업성장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국방산업은 국가예산의 10%정도에 달하는 국방예산과 연계되어 있어 시장 규모가 크고, 안정성과 성장 추세가 높은 특성이 있다. 국방예산규모는 2007년 24조 5,000억 원에서 2008년 26조 7,000억 원으로 10%정도 확대되었다.

국방산업은 타 산업에 비하여 연구 및 기술개발의 비중이 높고 산업간 연계와 융합 활동이 활발하여 기술혁신과 경제성장의 파급 효과가 크기 때문에 미래 성장 동력 산업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선진국의 경우 철강, 자동차, 기계제품 등 전통적인 산업은 생산과잉과 개발도상국의 저가 제품 수입증가로 수익률 감소와 생산이 위축되어 쇠퇴화에 직면하고 있다. 대량생산 시스템의 붕괴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의 단초를 제공한 것이 국방산업의 성장이었다. 현대의 전쟁이 점차 정보와 기술전쟁으로 변모하면서 군사적 목적의 정보·통신, 항공, 로봇 기술, 첨단 소재분야의 연구와 기술개발 투자가 획기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국방산업의 확대는 다양한 분야의 기술혁신과 신기술제품 생산의 확대에 이어서 경제전반의 활성화를 가져오는 역할을 하고 있다. 국방산업은 대부분 전문지식과 인적기반, 첨단기술과 지식의 집적도가 높은 대학의 인근 지역, 그리고 온난한 기후와 쾌적하고 문화적인 생활환경 여건을 갖춘 지역을 중심으로 클러스터를 형성하면

서 발전해 왔다. 그래서 쇠퇴화가 진행되는 전통적 산업지대를 “해가 지는 지역” 또는 “눈 덮인 벨트”로 부르는 반면 국방산업이 집중된 산업지대를 “해가 뜨는 지역” 또는 “군사(대포) 벨트”라 부르기도 한다. 미국 서부의 “실리콘 밸리”, 노스캐롤라이나 “리서치 트라이앵글”, 그리고 보스턴 “루트 128” 등 첨단산업지대들이 모두 대표적인 군사산업 클러스터라 할 수 있다.

국방산업 클러스터는 아무 곳이나 형성되는 것이 아니다. 논산은 군사산업의 핵심 기술인 정보·통신 및 신소재분야의 연구기관이 집중되어 있고, 한국과학기술원(KAIST)과 충남대학교 등 전문 과학기술인력 양성기관과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협력센터를 비롯하여 군수품 조달을 총괄하는 군수사령부, 우리나라 군사 전략의 총본산인 계룡대 등이 공간적으로 집중되어 있어 전문가 집단 간 교류와 협력이 용이하기 때문에 군사산업 클러스터 형성의 최적 조건을 갖추고 있다.

논산에는 이미 군사산업 부문의 산-학-관간의 연계와 협력기반이 갖추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군수분야 중소기업의 이전수요가 증대되고 있어 앞으로 국방산업 성장 잠재력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방대학교의 논산이전은 국방도시로서 논산시의 위상과 군사관련 전문 인력의 집적도를 높이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군사산업 클러스터 형성에 기폭제 역할을 할 수 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논산 지역에 국방산업 클러스터를 형성함으로써 대전과 충청지역의 군사

관련 기술 및 산업과 연계하여 초광역적 군사산업 벨트를 구축하여 우리나라 군사산업발전을 선도하는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정부는 하루속히 행정 편의주의의 타성에서 벗어나 국방대학교의 논산이전을 결정하여 국가와 지역발전에 새로운 희망을 줄 것을 기대해 본다.

[김용웅, 중도일보 2007년 10월 1일자]

도시는 꿈터(夢場)의 무대다워야 한다

자연을 가리켜 신의 창조물이라고 한다. 그러나 도시는 인간에 의해서 창작된 작품이라고 자랑한다. 그런데 한 가지 아이러니한 것은 인간의 작품이 신의 창조물보다 더 아름답다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많이 들어오던 이야기다.

도시발전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도시는 어느 시대에 있어서나 그리고 어떤 규모로 어느 곳에 자리하고 있었던 간에 많은 이들의 그리움과 부러움의 상징이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도시를 향해서 옮겨가기를 꺼려하지 않는 경향이 도시의 발전 속도와 거의 정비례 현상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저마다 나름의 꿈을 이루어보겠다는 희망을 키워가는 터전으로 여겨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도시가 지니는 역기능(逆機能) 때문에 몸살을 앓기도 했다. 그 원인적 현상의 하나는 농촌으로부터 압출(押出)되는 인구집단의 이주현상이었다. 농촌으로부터 밀려오는 인구를 받아들일 만한 준비가 되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즉 흡인력(吸引力)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상황 하에서 이루어지는 도시인구

의 사회적 증가추세는 도리어 도시사회의 병리적인 문제를 일으키고 말았다. 그것이 주택난 문제요, 슬럼지구의 발생이요, 실업인구의 범람이요, 우범지대 등의 형성이었다.

그러나 20세기에서 21세기로 이어지는 시기에 즈음하여 거의 많은 도시들은 새로운 면모를 엿보이기 시작했다. 도시 자체가 지니는 잠재적인 발전역량을 바탕으로 하여 도시재개발의 붐이 일어나고, 뉴타운 개념의 새로운 도시가 제 나름의 아이덴티티(identity)를 자랑하는 위상을 들어내기 시작했는가 하면, 종래의 일극중심도시(一極中心都市)가 상대적 개념의 도시로 그 위상이 바뀌는 성향이 대두되기 시작했다. 뿐만 아니라 지방으로 확산되기 시작한 신도시 건설계획이 개발 지향적 전략개념으로 추진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아울러 일정한 행정구역을 도시영역으로 전환하는 정책이 추진되어 감에 따라 종래의 농촌지역은 도시권으로 흡수되어지는 경향이 특히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른바 종래의 군(郡)단위를 도시권역으로 확대함으로서 도시는 광역화되고 농민은 농촌인구의 구성원 개념으로부터 도시인의 신분을 취득하게 되는 처지로 바뀌었다. 따라서 농촌인구의 비율은 통계학적으로 급감하고 도시인구는 급증하는 현상으로 바뀌었다. 이와 같은 도시 성장추세의 변화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귀뜸해준다.

첫째는 수도(首都)에 대한 인식의 변화다.

수(首)는 으뜸(머리)이라는 의미와 지배(두뇌)라는 의미를 동시에 지닌다. 그럼으로 수도는 규모면에서 제1의 도시로 인식되어 왔으며 행정 입법 사법 등 국가의 중추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정부의 본

부소재지라는 뜻으로 여겨왔다. 그러나 정부 주요기관의 지방분산 정책과 아울러 산업경제 및 항만기능도시의 확충 등 개발계획추진에 의한 거대 신도시의 등장은 과거 도시규모 순위의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여기에서 우리가 중시해야할 일은 국민들의 서울(중앙)지향적인 사고구조의 틀이 바뀌어가고 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하면 꿈과 희망을 지닐 수 있는 꿈터(夢場)는 수도가 아닌 곳에서도 가능하다는 인식의 전환과 기대를 키워갈 수 있는 도시상(都市像) 창출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둘째는 행정복합도시 등의 눈부신 등장이다.

전국적으로 도시가 자리하는 지리적 연계반경의 근역화현상(近域化現象)은 도시의 동시다발적 형성추세의 일면이며 동시에 도시 사회적 여건의 큰 변화라고 여겨진다. 이는 다시 말하면 도시선망(都市羨望)의 심리적 욕구를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충족시켜 준다는 의미를 지닌다. 따라서 자기고장의 이미지를 키워갈 수 있는 꿈의 현장이 사실로 펼쳐져가고 있다는 믿음을 주민들 가슴속에 확실히 심어주는 새 풍토조성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셋째는 신생도시의 경우일수록 아이덴티티를 잘 키워갈 수 있어야 한다.

도시의 아이덴티티는 그 곳 주민들의 자존심이며 동시에 긍지이기 때문이다. 특히 오늘날의 도시개발정책이 국토균형발전차원에서 계획되고 추진되는 것이라면 신도시일수록 최적조화의 미(最適調和美)를 살려갈 수 있어야 한다. 어메니티(amenity) 문제는 환경적 조

화 면에서 어느 도시에서나 공통적으로 갖추어야 할 일이지만, 거기에 첨가하여 보다 높은 차원에서 추구해야 할 차별화된 조화미(調和美)는 독자성의 문화적인 콘텐츠(contents)를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가에 달려있다.

글로벌 시대에 걸 맞는 도시상은 지역의 국제화 차원에서 고려돼야 할 것이다. 서울 올림픽과 부산 아시안게임의 경우와 같이 전 인류의 관심사인 국제적 이벤트는 국가차원의 행사가 아니라 지역(도시)의 잠재적인 능력을 토대로 하여 계획되고 추진되어 왔으며, 또한 앞으로도 그런 추세로 나갈 것이다. 그럼으로 특히 충남의 경우는 도청 신도시건설을 비롯하여 행정복합도시 등의 건설계획이 국토의 중심권이라는 지정학적인 특수성을 전제로 하여 추진되고 있는 만큼 충남권의 도시는 모든 사람들의 꿈터(夢場)의 중앙무대다운 구실을 하는 기회의 터전이 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김유혁, 열린충남 2007년 10월호 통권40호]

충청권 공동발전 위한 약속 과제

민선 4기 지방자치시대에 충청권에 일고 있는 가장 큰 변화는 3개 시·도간 협력과 상생의 분위기이다. 선거기간 중에 충청권 공동번영을 위한 선언문을 채택한 세 후보가 나란히 당선되면서, 작년 12월에는 충청권 공동발전 5개안에 합의하였고 금년 8월에는 충청권 행정협의회를 통해 구체적인 사업을 도출하였다. 정치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겠지만, 그 내용을 살펴보면 충청권 경제협업체 구성을 비롯해, 대덕 R&D 특구 확대, 충청권 IT 산업클러스터 구축, 청주공항활성화, 해외시장 공동개척 등 대부분 경제 분야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 때문인지 충청인들의 기대는 자못 크다.

충청권 공동발전의 목표는 각 지역이 갖고 있는 경쟁력을 하나의 공동체로서의 경쟁력을 갖추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경쟁력을 갖도록 발전시키는 것이다.

지역경쟁력은 생산성(Productivity)과 시장성(Marketability)에 의해 좌우된다. 생산성은 생산능력 뿐만 아니라 생산 범위 확대능력까지 포함한다. 3개 지역이 생산 범위를 자გი지역으로 한정하지 않고 확

대한다면 생산능력과 생산범위가 증대되어 생산성 향상효과를 얻게 된다. 지식기반경제에서 연구개발 능력과 기술력이 생산요소와 결합하면 획기적으로 생산성이 증대한다. 각 산업 분야별로 대전-충남-충북으로 이어지는 연구개발-생산-마케팅 클러스터 구축이 필요한 대목이다.

시장성은 시장기회 획득 능력과 시장규모 확대 능력에 의해 결정된다. 3개 시도가 각자의 지역으로 시장 규모를 한정하면 150만-200만 명의 규모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의 시장으로 구축한다면 500만 명이라는 대규모 시장이 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서울을 각자의 시장으로 인식하여 연계한 결과 충청권 시장은 스스로 규모를 축소시켜 왔다. 충청권을 하나의 통합된 시장으로 확대한다면, 자연스럽게 시장 확대 효과는 물론 시장기회를 획득하려는 해외기업에게 매력적인 시장이 된다.

문제는 어떻게 하면 충청권이 공동으로 생산성과 시장성을 높여 지역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냐에 하는 것이다. 첫 번째로 꺾어할 단추는 충청권의 각 주체별 공동학습이다. 각 분야의 활동 주체 간 상호접촉 빈도와 강도가 증가되어 상호 학습능력이 향상되면, 충청권에서 새로운 생산성 증대가 이뤄지고, 아이디어가 융합·수정되는 과정에서 새로이 성공하는 사업이 도출될 것이다.

이미 금년 2월부터 충청권 3개 발전연구원들이 공동연구를 위한 협약을 체결하여 지역경제, 교통·물류, 관광, 환경 등 각 분야에서 상호 학습을 하고 있다. 충남테크노파크와 대전중소기업종합지원센

터, 그리고 충북지식산업진흥원 등 3개 지역 기업지원기관들은 6년째 충청권 벤처플라자를 공동 개최하여 기업의 생산성 증대와 시장 개척을 위한 공동사업을 진행 중이다. 금년 9월에는 충청권 경제협의회가 발족되면서 기업인, 경제단체 대표, 학계 인사 등 민간 전문가 45명이 공동학습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각 지역을 이해하기 위한 사업부터 펼쳐나가기로 했다.

지역문제는 경제뿐만 아니라 사회, 문화, 교육, 제도 등 다양한 주변 환경이 네트워크 되어야만 공동발전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다양한 분야의 주체들이 공동학습에 참여하면서 자연스럽게 네트워크로 연결되고, 긴밀한 상호작용을 통해 또 다른 학습의 기회가 제공되어 다양한 정보와 지식이 교류할 때, 충청권은 하나의 공동 권역으로서 역동적인 발전을 지속하는 단계에 이르게 될 것이다. 바로 우리가 기대하는 충청권 공동발전의 모습이다. 이제 각 분야의 충청인들이 지역과 분야를 뛰어 넘어 개방과 혁신의 마음으로 공동 발전을 위한 학습활동에 적극 동참해야 할 때이다.

[김학민, 대전일보 2007년 10월 17일자]

‘R&D의 빈익빈 부익부

지난 7월 참여정부는 2단계 균형발전정책을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1단계의 성과로서 지방의 지역 내 총생산비중 확대, 지방의 제조업 고용비중 및 수출비중의 지속적 확대, 지방재정 지원확대를 통한 지방의 자율성 제고 등을 들었다. 또 지방재정지원 확대로 자율성이 높아진 사례로 혁신주도형 지역발전을 위한 R&D 예산의 지방비중이 증가된 것을 들었다.

2단계 균형발전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제시한 한 연구 결과를 보면 수도권은 40개 지자체가 발전지역으로, 16개 지자체가 성장지역, 7개 지자체가 정체지역, 3개 지자체가 낙후지역으로 분류되었다.

여기에서 충청권은 3개 지자체만 발전지역으로 분류되었을 뿐, 5개 지자체가 성장지역, 13개 지자체가 정체지역, 12개 지자체가 낙후지역으로 보고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지역 간 격차해소를 위한 방안의 하나로 지역산업 수요를 반영한 R&D 강화, 인적교류의 제도화, 지방대학을 대상으로 한 특성화 사업단 공모사업 추진, 우수

외국 교원 유치 등을 제시했다.

이러한 결과보고서를 보다가 최근 시행된 교육인적자원부의 인문한국(HK) 사업과 지방대학, 특히 운영기반이 취약한 지방연구소의 실상이 연관되어 씁쓸한 마음을 지울 수 없다.

인문한국 사업은 교육인적자원부가 인문학의 육성 발전을 위해 전례가 없는 예산 규모로 특별히 기획한 것이다. 아직 최종 결과는 나오지 않았으나 이 사업에 지원한 대학연구단과 연구소들의 평균 경쟁률은 10대 1 정도일 것으로 예상된다. 수백 명의 박사들이 지난 여름에 합숙까지 하면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했다고 한다. 초임 연봉이 4,000~4,800만원에 이르는 데다, 이중 50%의 연구 인력은 10년 후에 정년 보장이 된다고 하니 고3 이후 처음으로 이렇게 애썼다는 한 박사의 말이 이해가 된다.

하지만 이 사업을 준비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대학과, 참여할 기회를 가졌던 연구자들은 여건이 나은 편이다. 실제 작업할 수 있는 기간은 2개월이었는데 10년이라는 인문학의 장기적인 의제를 기획 구성하기에 그리 충분한 시간은 아니었다.

결국 기존에 연구 인력이나 시설 등 인프라가 잘 갖추어져 있던 대학들이 아니면 시도하기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전체 신청대학의 43%가 서울 소재였다는 점이 이를 입증한다. 전체적인 연구 기반은 물론, 도서관 소장 자료마저 충분하지 않은 지방대학의 경우는 수도권 주요 대학과의 경쟁 자체가 불가능했다.

결국 이러한 대학들은 인문학 진흥을 위한 특별 육성사업에서조차 다시 제외될 수밖에 없었던 셈이다. 그나마 경쟁력이 있는 명문대의 지방 캠퍼스들도 본교 도서관의 소장 자료에 비하면 평균 1/5을 넘어서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또 탁월한 업적을 가진 교수라 하더라도 연구 용역을 수행하는 박사 과정생 한 명만 연구실을 비워도 이를 대체해 줄 인력이 없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나마도 교수직을 희망하는 박사들이 선호하는 경쟁력 있는 지방소재 대학은 좀 낫다. 지방소재 연구원에서는 우수한 연구 인력을 채용하고자 해도 지원자조차 거의 없다. 이른바 수도권 주요 대학 출신의 고급 인력은 지방근무와 거주 자체를 희망하지 않는다. 게다가 BK, HK 사업 등으로 경쟁력 있는 대학에 우수 연구자들이 집중됨으로써 이러한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참여정부의 주요정책 성과에 대한 긍정적인 자평에도 불구하고 R&D 분야는 여전히 빈익빈 부익부 상태로 남아 있다는 사실에 반성적 고찰을 해야 할 시점이다.

[김경숙, 중도일보 2007년 11월 2일자]

‘장항산단 근시안적 생각의 오류

눈앞의 일에 사로잡혀 앞일을 바로 보지 못함을 일컬어 근시안적 사고라 한다. 요즘 장항 내륙산단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문제를 놓고 충남도와 서천군의 견해 차이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니 더욱 그렇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정부와 토지공사가 요청한 내륙산단 후보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요청은 본말이 전도된 정치적 꼼수에 불과하다. 어떤 사안을 판단하고 처리함에 있어 오류를 범하지 않으려면 관련 자료나 사실을 꼼꼼히 살펴보고 결론을 내려야 한다.

서천군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요청하는 사유는 예정지에 대한 부동산 투기가 일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이라고 한다. 하지만 서천군은 이에 앞서, 정부와 토공의 사업추진 및 내륙산단의 경제성 확보 대책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먼저 받아놓는 것이 일의 순서이다.

이와 관련 충남도와 충남도의회는 한국토지공사에 내륙산단 추진 시 가장 핵심인 매몰비용 처리대책 및 조성원가를 인근의 군산과 새만금에 준하는 수준으로 낮추기 위한 대책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기 위해 질의한 바 있다. 토지공사의 회신은 두 사안 모두 “협의 진행 중임” 등의 애매모호한 답변뿐이었다.

정부와 서천군이 협약서를 체결한 것이 지난 6월이고, 머지않아 대통령 선거가 있을 예정이며 참여정부 임기가 다 되어 가는데, 지금까지 “협의 진행 중”이라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는 판에, 개인의 사유재산 처리를 제한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종용하는 것은 눈앞의 일에 사로잡혀 앞일을 바로보지 못하는 근시안적 오류가 아닌가 생각한다.

문제는 돈이다. 매몰비용과 경제성확보를 위해서는 1조원 가까운 돈이 들어가야 한다. 이번 정기국회에 내륙산단과 관련한 예산은 눈을 씻고 봐도 단 한 푼 계상되어 있지 않다. 이렇듯 한 푼의 예산도 서 있지 않은 명백한 자료와 사실이 있는데도 언제까지 협의만 한다는 건지 도통 알 수 없는 노릇이며, 18년을 속고 또 속았으면서 뭘 믿고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서둘러야 한다는 것인지 모르겠다.

만일 지정을 해서 경제성 있는 산단이 만들어진다면 이야 백 번 천 번이라도 지정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하지만 서천군의 생각처럼 이 세상은 그리 녹록치가 않다. 그렇기 때문에 과정과 역사를 통해 현재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는 모르고, 아

무런 실체가 없는 미사여구에 현혹되어 때를 쓰고 있는 형국을 보노라니 더더욱 답답한 노릇이다.

마지막으로 어물정한 태도를 보이는 정부와 토공, 그리고 서천군 관계자들에게 한 마디 충고하고자 한다.

장항내륙산단에 대한 논점의 일탈을 하지 말아 달라는 것이다.

내륙산단에 대한 확고한 추진의지를 200만 도민에게 보여주려면, “협의진행 중”이란 애매모호한 답변 대신에, 관련부처에서 예산을 편성한 후 대통령 재가를 받아 국회에 이송하고, 국회에서 예산이 확정되는 날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신청을 하는 것이 일의 순서임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송선규, 중도일보 2007년 11월 10일자]

명품축제, 첫 발을 내디디며

지난 10월에 대단원의 막을 내린 제53회 백제문화제는 역대 백제문화제의 모든 기록을 갈아치우며 126만 명의 관람객이 몰린 전례가 없는 성황을 이루었다. 물론 좁은 장소에 한꺼번에 많은 인파가 집중되다 보니 적지 않은 문제점들이 나타났지만, 준비기간이 몇 개월밖에 되지 않았음에도 공주와 부여 두 지역 주민들뿐만 아니라, 여러 기관·단체와 자원봉사자에 이르기까지 전폭적인 지원과 협조 덕분에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었다.

나는 이번 축제를 통해 거둔 가장 값진 성과는 백제문화제가 세계적인 명품 축제로 도약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과 새로운 희망을 발견할 수 있었다는 점이라고 생각한다.

역사적으로 볼 때 백제는 '백가제해(百家濟海)'를 줄인 이름 자체에서도 알 수 있듯이 중국과 일본은 물론, 멀리 동남아시아에 이르기까지 세력을 확장했던 찬란한 해양제국이었다. 하지만 아쉽게도 나당연합군에게 패망해 승자의 입장에서 기술된 후세 역사서에 의해 이러한 사실이 감추어졌으며, 그 후 일제 강점기를 거치면서 자

행된 무자비한 역사 왜곡에 의해 3국 중 가장 왜소하고 힘없는 나라로 인식되어 왔다.

더욱이 정부 수립 후, 오랫동안 지속돼온 지역차별 정치에 밀려 백제문화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연구가 미흡했을 뿐만 아니라, 공주와 부여 두 지역에서 번갈아 문화제가 개최되면서 그동안 본래의 모습을 되찾지 못했었다. 그런 까닭에 우리 스스로가 먼저 백제의 위상과 문화에 대해 자신감을 갖지 못했으며, 일부 주민들은 단순히 또 한번 지나가는 행사로 여겨 소극적인 자세를 갖고 있었던 것 또한 사실이다.

하지만 이번에 행사장마다 전국 각지에서 온 내·외국인이 발 디딜 틈 없이 붐비는 것을 보면서 누구나 '이거 뭔가 대박이 터지는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 우리도 하면 된다는 자신감과 세심한 정성을 기울이면 더 나은 결실을 얻을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확신할 수 있었다.

무릇 보는 사람을 감동시키려면 배우 스스로가 먼저 연기에 몰두해야 한다. 백제문화제 또한 세계인이 찾는 축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준비하는 사람들부터 뜨거운 열정을 갖고 축제에 몰입해야 한다. 그리하여 후끈 달아오른 땀과 열기가 자연스럽게 관람객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나아가 함께 참여하고 싶은 흥미와 욕구를 불러일으켜 주민과 관광객이 현장에서 하나가 되는 감동적인 장관을 연출할 수 있을 것이다.

다행히 우리 지역은 공산성과 사비성 등 유서 깊은 백제의 역사 유적과 불교문화, 건축, 공예 등 우수한 문화유산은 물론, 금강과 백마강 등 천혜의 자연환경과 공주 정안 밤과 부여 방울토마토 등 질 좋은 특산물, 그리고 어느 곳보다도 넉넉하고 후한 인심을 지니고 있는 축복받은 고장이다.

이러한 자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백제문화제와 연계시켜 관광객들의 호응도를 높이는 가운데 2010년 한·중·일 3국이 참여하는 대백제전을 넘어 세계적인 명품 축제로 발전시켜 나가느냐 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몫이라고 생각한다.

‘700년 대백제의 꿈’을 부활시키는 역사는 이미 시작되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찬란한 백제문화의 향기를 전 세계로 퍼져 나가게 하기 위해 무엇보다도 우리 모두의 몸과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일일 것이다. 여기에는 너와 내가, 공주와 부여가, 그리고 행정 기관과 시민단체가 결코 따로 있을 수 없다.

이제 우리 모두는 자랑스러운 백제의 후손으로서 선조들의 못다 한 꿈과 영광을 반드시 되살려 낸다는 긍지와 사명감을 갖고, 백제 문화제를 명품 축제로 도약시켜 나가는 발걸음을 한발 한발 착실히 내디녀야 하겠다.

[최석원, 대전일보 2007년 11월 24일자]

지방의 기후변화 대응전략은

올해 노벨 평화상을 앨 고어와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패널(IPCC)이 공동으로 받게 되었다는 것은 지구온난화를 비롯한 환경 문제가 인간안보와 세계평화에 핵심 사안으로 자리매김했음을 의미한다. 앨 고어는 “불편한 진실”이라는 다큐멘터리 영화를 통해 지구온난화의 원인과 대처방안에 대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다루었다.

한편 IPCC는 1990년 이후 지금까지 네 차례에 걸쳐 지구온난화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고 미래에 대한 기후변화 예측을 통해 인류의 대응을 촉구하는 보고서를 발간한 공로를 인정받은 것이다.

인류 생존의 위기로 다가온 급박한 상황에서 기후변화 대응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할까?

기후변화에 대한 대책은 크게 완화, 적응, 협상으로 나눌 수 있다. 완화는 기후변화의 원인인 온실가스의 배출량을 줄이는 것인데,

그러자면 경제활동도 위축될 수밖에 없다. 적응은 기후변화의 부정적 영향에 대해 이를 저감시키기 위한 대응정책을 포함한다. 그리고 협상은 완화와 적응에 대해 국제적인 감축노력에 대해 우리나라의 정당한 대응능력을 인정받고 국제적인 위상 확보를 담고 있다.

이러한 종합적인 흐름과 관련하여 지난 11월 중순 IPCC 총회에서 기후변화 평가에 관한 종합보고서가 승인을 받은 이래, 오는 12월 3일부터 인도네시아 발리에서는 제13차 기후변화 당사국총회(COP13)를 통해 2013년부터 적용되는 교토의정서 체제 이후 기후변화 대응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게 된다.

특히,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세계 10위를 기록하고 있어서 이번 당사국 총회 결과가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를 계기로 저탄소 경제를 지향하는 미래의 움직임에 대해 신속하고도 확실한 변화가 요구되고 있음은 분명하다. 지금은 선진국이든 개도국이든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확실한 해법과 행동이 필요한 때다.

기후변화가 우리의 일상에 미치는 영향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부정책의 강화로 경제성장이 둔화될 수 있다.

기온의 상승은 해수면 상승과 함께 자연재해 피해 규모가 훨씬 커짐으로써 사회적 비용도 증가하게 된다. 특히 에너지 산업의 비용을 증가시킴으로써 여기서 생산된 제품의 경쟁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충남은 화력발전, 철강, 석유화학, 반도체 등 에너지 집약산업 비중이 높아 온실가스 배출 비중이 전국 대비 14%를 점하고 있어 경기도와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국제 규제가 강화되면 주요산업이 심각한 타격을 받을 우려가 있다. 그러나 위기는 기회로 이어지는 법.

신기술 개발로 저탄소 고효율의 제품 개발은 새로운 사업기회를 창출할 수 있고, 탄소펀드와 탄소거래 등의 새로운 상품 시장영역도 나오게 된다.

그 이외에도 온난화 대응 기술로는 신재생에너지와 관련되는 태양광, 풍력, 조력 이외에 바이오에너지를 들 수 있다. 온난화는 결국 땅 속에 묻힌 석탄, 석유 등의 화석연료를 태움으로써 탄소의 균형이 깨져서 발생한다. 따라서 식물에서 얻는 에너지는 태워도 광합성 과정을 통해 다시 흡수되어 균형을 유지할 수 있다.

충남 지역은 농경지가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만큼 유휴지에 바이오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유채 등의 농작물을 재배하는 것도 현실적인 방법이다. 극단적이기는 하나 에너지 사용량이 초과하여 심각한 탄소 불균형이 초래될 경우 탄소포집과 저장도 구체적인 대응 방법이 된다.

이러한 지구위기 상황에서도 사전에 대비한 국가나 지방은 선점한 기술력과 경제력으로 국제 환경협상 게임에서 계속 승자로 남게 될 것이다. 이러한 기후변화 대응은 국가, 지방, 기업, 주민 모두 총

력전을 요구하는 어려운 일이지만 국제적인 협력을 통한 사업화나 연계정책의 추진은 필수적인 사항으로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도전과 기회의 길로 안내하게 될 것이다.

[정종관, 중도일보 2007년 12월 3일자]

유류사고 보상, 이것이 중요하다

허베이 스피리트호 원유 유출사고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어민들이나 인근 상인들은 피해대책기구를 설치하여 향후 대책을 논의하고 있고 해양수산부에서는 해양연구원을 중심으로 해양오염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피해를 최소화하고 충분한 보상을 받도록 하기 위한 노력들이나, 이와 관련하여 간과해서는 안 될 몇 가지 중요한 사항들이 있다.

첫째, 피해 어민 등 각 직종별, 피해주체별 피해대책기구가 구성되어야 하며, 이를 조직적·통일적으로 관리하는 상위 대책기구가 시급히 설치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상위 대책기구는 피해 어민들을 비롯한 태안반도 원유 유출사고 피해자들의 이익을 통일적으로 대변함으로써 본건 사고를 일으킨 삼성중공업 등에 대한 보상청구 및 협상의 창구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 직종별, 피해주체별 피해대책기구가 조직적·통일적으로 관리되지 않을 경우 각 피해대책기구 별 이해충돌을 해결하기 어렵고 산발적 대응으로 인해 협상력이 떨어질 것이며, 증거수집 또한 비체계적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고 고액의 감정비용이 중복적으로 지출되는 등 많은 문제점에 직면할 것이

며, 그 결과 충분한 보상을 받는 것이 어렵게 될 수 있다.

둘째, 사고를 일으킨 삼성중공업으로부터 충분한 보상을 받기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삼성중공업은 예인선 2대로 인천대교 공사작업을 마친 1만 1,800톤급 크레인이 실린 부선을 끌고 경남 거제로 향하게 하다가 사고를 발생하게 한 책임주체이다. 해양경찰은 선장 개인들은 물론이고, 풍량이 높았는데도 피항을 하지 않고 위험한 항로를 선택해 무리한 운항을 한 경위 등 삼성중공업의 잘못에 대하여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삼성중공업의 중대한 과실, 즉 무모성이 밝혀질 경우 피해주민들은 유류오염 손해보상을 위한 국제기금의 책임제한액인 3000억 원과 삼성측의 책임제한 보험금을 초과하는 손해 전부를 삼성중공업으로부터 배상받을 수 있다. 국제기금의 보상요건은 엄격하므로 삼성중공업에 대해 보상요구를 하는 것이 보상에 유리하다는 이점 또한 있다.

셋째, 해양수산부의 보다 적극적인 환경오염조사가 필요하다. 시프린스호 사건에서 얻은 중요한 교훈 중의 하나가 환경오염조사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었다. 환경오염조사가 미흡했던 시프린스호 사건에서는 직접적인 피해의 일부에 대해서만 보상이 이루어졌으며 향후 환경오염 복구비용과 완전복구 시까지의 어민 등 피해에 대한 보상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해양수산부는 비록 많은 비용이 소요되더라도 외국의 해양오염전문가를 동원하여 환경오염 정도와 생태복원 기간, 향후 환경복구에 소요되는 비용, 완전복구 시까지 유류가 어패류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과학적으로 조사해야 한다. 해양수산부의 환경오염조사 결과는 손해사정의 중요한 자료

로 활용될 것이다.

넷째, 증거수집 활동이 보다 체계적이고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각 직종별, 피해주체별로 동영상과 사진을 찍고, 자료가 없는 매출에 대해서는 인우보증서나 확인서, 거래처별 입출금 내역, 배송증 등을 받아두어야 한다. 해당 수협이나 직종별 단체는 매출 통계 자료를 정리, 준비하고 확보해 두어야 한다. 지역주민과 방제봉사자들의 어지럼증, 구토 등으로 인한 약대, 치료비 지출 증거도 준비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나 정부는 방제비용 관련 증빙자료를 세밀하게 준비, 관리해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환경오염조사를 하면서 현재 및 향후의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취합해야 한다. 통합대책위는 이 모든 증거를 손해감정 전문가(surveyor)에게 제공해야 한다. 시프린스호 사건에서 얻은 소중한 교훈을 바탕으로 '완전한 복구', '완전한 보상'을 위해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할 때이다.

[여운철, 대전일보 2007년 12월 25일자]

내 고양 서예안, 절망을 넘어

지난주에 태안의 구름포 해수욕장에 다녀왔다. 200여명의 자원봉사자들과 함께였다. 구름포는 국립해상공원으로 해안의 절경이 탄성을 절로 자아내게 만드는 곳이었다. 이번에는 거꾸로 절로 탄식이 나왔다. 버스에서 내리기도 전에 기름 냄새가 코를 찔렀다. 자원봉사자들이 아무리 걷어내도 시꺼먼 해안의 모습은 끝이 없었다. 닦고 걷어내고, 닦고 걷어내고….

현지의 분노는 두 가지로 요약된다. 충돌과정과 초동대처다. 왜 유조선이 국립해상공원지역에 정박했으며 교신불통이 말이 되느냐는 의구심이다. 그리고 기름이 쏟아지는 유조선을 왜 며칠간이나 내버려뒀느냐는 것이다. 미숙한 해수부는 말할 것도 없고, 사고 직후 초기에 군 특수부대 출동 등 범정부 차원의 조치가 없었다는 것이다. 얼마 전에 해상 방제훈련을 했다는 해수부의 큰소리만 믿고 이번 일을 맡기는 바람에 대량유출을 사실상 방치했고, 구름포를 비롯한 연안지역에 이미 기름이 몰려오고 난 뒤에야 뒤늦은 방제선을 쳐 다 죽게 생겼다는 원망이었다.

일리가 있는 주장이었다. 크지 않은 세 군데 구멍을 신속하게 막으려면 해경 수준으로는 가능하지 않고, 국방부의 초기개입이 절실했는데, 왜 그런 조치들이 강구되지 않았는지 모를 일이다. 임기 말의 해이해진 기강 탓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무능했다. 현지에서 발을 동동 구르며 빨리 방제선을 쳐야 한다고 아우성을 쳤는데도 기름띠가 물려든 뒤에야 행정조치가 이뤄졌다니 할 말을 잃었다.

하지만 피곤에 지친 현지 아낙네들이 우리들의 손을 잡고 “그래도 이렇게 국민들이 도와주시니 갑갑한 마음이 조금 풀리는 것 같다”며 개미떼처럼 해안가에서 땀을 흘리고 있는 수천 명의 사람들을 가리켰다. “저 사람들을 봐요! 정말 고맙지유!” 그러면서도 얼굴에 남아 있는 수심은 견히지 않았다. 앞으로 생계가 막막하기 때문이다. 어민들은 기름이 연안에 가라앉고 바위에 붙어있어 어패류나 수생식물이 다 죽게 되어 각종의 해산물은 이제 끝이라고 입을 모았다. 무엇으로 먹고 사느냐고 한숨지었다. 횃집이나 펜션을 하는 사람들은 대개 3억~4억 원의 은행빚을 지고 있는데, 손님 하나 없는 실정에서 무슨 수로 버틸 것인가? 파산이 뻔하고 자살자도 나올 것이란 얘기였다. 특히 천수만 지역은 서해안 어족의 산란지인데 기름 범벅이니 바다어장이 황폐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였다.

사실 필자의 고향인 보령시 천북은 광천김으로 알려진 김의 생산지이고, 굴의 산지로도 유명했는데, 어느 해부터인가 김발에 파래가 붙지 않고 굴도 자라지 않았다. 처음에는 영문을 몰랐다. 한참 먼 서산지역에 방조제 공사소식이 들려왔고, 천수만으로 유입됐던 민물이 차단되고 해류가 바뀌면서 연안어장이 황폐해졌던 것이다.

태안지역의 기름 오염이 외형적으로 어느 정도 수습되면 국민들의 관심에서 멀어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복구에는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고 태안과 서산, 홍성, 보령, 서천, 군산 등 서해연안 지역 어민들의 고통은 계속될 것이다.

지금 절망의 바다를 희망의 바다로 되돌리려면 재난지역선포와 형식적인 피해보상이 아닌 피해주민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특별조치가 필요하다. 그리고 더 많은 자원봉사자들의 손길이 절실하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사람들의 손길이 닿지 않고 있는 섬으로 2차 봉사활동을 다녀왔다. 이번 봉사활동을 통해서 열심히 봉사하는 젊은이들을 보면서 젊은 세대에 대한 희망이 솟아났다. '사랑'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따뜻한 손길을 내미는 일이다.

연말연시를 맞아 정부와 충청도, 태안해경, 서해안 자치단체는 물론 전국의 수많은 자원봉사자들이 서해안으로 달려가고 있다. 이들이 있기에 태안 앞바다도 날이 다르게 깨끗해져 가고 있다. 큰 비극이었지만 국민들의 따뜻한 관심과 애정어린 손길로 서해가 살아나고 있다.

[이태복, 대전일보 2007년 12월 29일자]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차기정부의 과제

- 대전·충남권을 중심으로 -

국가균형발전을 어떻게 볼 것인가? 지방에서는 수도권에 비해 일극집중에 따라 지방의 고사 직전에 있고, 과밀에 따른 사회비용 증가로 인해 국가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 수도권에서는 그 동안의 균형발전정책은 수도권 규제를 통해 앞서 나가는 자의 발목을 잡는 것으로 간주하고, 수도권의 손발을 묶어 놓았던 각종 규제를 풀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동일한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시각도 지방과 수도권으로 뚜렷하게 양분화되어 있는 시점에서 대전·충남권에 대한 차기정부의 균형발전과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국가균형발전정책에서의 역차별 해소

정부에서는 세종시 입지가 대전·충남권의 비약적 발전으로 연결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는 듯하지만, 대전·충남권에서는 세종시 건설이 오히려 지역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고, 나아가 역차별을 받

고 있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다. 즉, 대전·충남권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서도 배제되었고, 대덕R&D특구 등 우수한 과학 인프라가 집적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부상열차 실용화사업 시범노선, 로봇랜드 등의 공모사업에서 탈락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세종시의 법적지위와 관할구역에 대해서도 정작 세종시가 입지한 충청남도와의 연기관구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중앙정부의 의도대로 법안제정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차기정부에서는 세종시가 건설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국가균형발전정책에서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인식을 불식시켜주기 위해 충청남도 의견의 능동적 수렴, 연기관구의 잔여지역 문제 해결 등이 과제일 것이다.

대전·충남권역 내 지역 간 불균형 완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불균형발전과 더불어 대전·충남권역 내 지역 간 불균형도 심각한 수준에 있다. 대전·충남권역을 하나로 중심지 계층구조를 살펴보면 대전이 탁월하며, 다음으로 천안·아산이 뒤를 잇는다. 이처럼 권역 내에서도 광역시인 대전과 수도권인접지역, 수도권으로부터 비교적 먼 거리에 위치한 금강유역 시군은 상당한 발전격차를 나타내고 있어 지역불균형현상이 상당기간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지역불균형성장은 지역의 성장잠재력을 약화시키고, 상대적 박탈감을 강화시켜 지역의 자생적 발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대전과 주변 8개 시·군 간에 추진중인 상생발전 G9프로젝트를 보다 체계화하여 추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충청남도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 제정된 「충청남도 지역균형발전지원 조례」 및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의해 8개 시군을 대상으로 향후 5년간 매년 60~80억 원을

지원하는 충청남도 지역균형발전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같이 대전·충남권역 내 지역 간 균형발전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지역경쟁력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한편, 충남 북부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금강주변 7개 시·군을 대상으로 산업입지 및 신성장 기반확대, 부존자원의 활용과 관광여가 산업 활성화, 지역주민이 소득증대 및 삶의 질 개선, 경관·생태·환경자원 보전을 통한 지속가능성 증진, 지역내 간선교통망 확충 등에 초점을 맞추고 사업을 추진하는 충청남도의 대표적인 지역균형발전정책인 ‘금강권광역복합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금강권개발의 성공여부는 충청남도과 금강권에 속한 시·군의 사업추진체계 강화에 달려있다. 즉, 종합적 낙후지역 전략계획을 수립하고 이와 연계한 개별사업이 추진되도록 할 필요가 있고, 시·군내 낙후지역개발을 통합 담당하는 전담조직구성 및 포괄재원 확보, 이에 대응하는 민간조직의 구성이 필요하다.

신도시와 주변지역의 상생발전

대전·충남권에는 세종시, 충남도청이전신도시, 아산만권배후신도시, 태안기업도시, 대전서남부권신도시 등이 건설되고 있다. 신도시 건설은 대전·천안 중심의 공간구조에서 탈피하여 여타지역과의 동반성장이 가능함으로써 지역 내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성장을 견인하는 다양한 도시의 육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보다 개방적 도시구조를 형성하는데 기여함으로써 국제적 위상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즉, 기존도시들은 주변지역에 대한 서비스 제공에 중점을 두고 성장해 왔으나, 신

도시의 다양한 기능을 통해 전국 및 세계와 교류협력을 강화함으로써 국제적 위상도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신도시개발은 신도시 자체의 명품도시 개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주변 중소도시에 대한 배려는 상대적으로 부족할 수밖에 없다. 세종시의 성공적 추진에 대한 정부지원과 더불어 주변 중소도시들에 대한 정부지원 또한 이와 동등한 비중으로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신도시 건설은 기존도심의 공동화 방지방안의 모색뿐 아니라 신도시 주변의 기존도시를 육성하여 자족성을 강화하는 방향에서 산업입지, 교통 및 환경네트워크 등의 연계체계 구축을 통해 신도시와 주변지역 상생발전의 틀을 만드는 것이 과제이다. 한편, 중앙정부에서도 도시 재생에 대한 프로젝트를 추진중에 있지만, 대전·충남권에서도 세종시를 비롯한 신도시 건설에 따라 기존 도시의 중심시가지가 침체·쇠퇴할 것을 우려하여 중심시가지 활성화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기존 도시의 중심시가지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수법의 개발 및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를 충분히 활용하여 실효성 있는 사업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특히, 중심시가지 활성화를 위해 지역 상권과 문화를 활성화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대덕 R&D특구 및 초광역 클러스터 육성

대전·충남권에는 국가적 연구개발 거점인 대덕 R&D특구가 입지하고 있으나, 연구역량에 비해 사업화 지원기반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대덕 R&D특구에 생산기능을 결합하고, 생산위주의 산업 단지에 연구개발 기능을 보완하는 혁신창출 노력이 지속적으로 요구된다. 대전은 대덕 R&D특구를 중심으로 최고수준의 고급인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지역선도기업 부재, 산학연 협력문화 미성숙, 기

업원서비스 취약 등의 문제점이 있고, 충남은 양호한 접근성, 지역 선도기업 입지 등으로 역동적인 경제성장 중심지로 발전하고 있으나, 국제화 인프라 부족 등의 문제점을 내재하고 있어 대전과 충남이 행정구역을 넘어서 초광역적 산업클러스터로 융·복합하는 정책 지원과 실천적 노력이 요구된다.

서해안시대에 대비한 공간 및 산업발전 전략

동·서·남해안권발전특별법 제정으로 대전·충남권 서해안지역의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개발의 틀을 갖추게 됨에 따라, 해양관광산업과 문화관광산업 진흥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그동안 양호한 자연경관 보유 및 입지적 장점에도 불구하고, 각종 규제로 인해 개발이 지지부진하였으나, 국제적 관광지 및 임해산업클러스터육성을 위한 기초가 마련됨에 따라 지속가능한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체계적 계획수립 및 정책지원이 요구된다.

이와 더불어 충청남도과 경기도는 아산만 인근 5개 시·군 6,814만㎡를 대상으로 첨단산업생산, 국제물류, 관광, 연구단지 조성을 주요내용으로 황해경제자유구역을 지정 신청중에 있다. 황해경제자유구역은 급성장하는 중국 동부연안도시에 대응할 수 있는 서해안 벨트구축, 기존 경제자유구역과 보완적 기능분담으로 경쟁력 배가를 위해 필요하며, 수도권-비수도권 자치단체 간 협력 및 제휴를 통한 지역균형발전의 성공사례를 창출할 필요가 있다.

태안 원유유출사고로 인해 서해안의 생태계 파괴와 수산물, 지역 관광에 대한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이 사고가 해양환경오염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는 계기가 되고, 환경생태오염관광으로 재기하는 역발상을 통해 차기정부에서도 대전·충남권역의 지속적 발전을 기대해 본다.

[송두범, 공공정책21 2008년 1월호]

‘상조적 도시’ 부여를 꿈꾸며

부여는 백제 왕도로써 찬란한 백제문화의 중심지 위상을 보유하고 있지만, 부여를 찾는 방문객이 공주의 절반수준에 머무르는 반면,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중소도시가 그렇듯이 부여군도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점차 활력을 상실하고 있다.

다행히, 지역특산물 공동브랜드인 ‘굿뜨래’의 브랜드 이미지가 높아지고, 백제역사재현단지를 중심으로 백제의 영광을 되찾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경주되고 있다는 점을 고무적이라 할 수 있다.

다양한 역사문화자원을 보유하고 있지만, 지역개발에 대한 공적 규제가 오히려 개발의 발목을 잡는 부여와 같은 도시가 경쟁력 있는 중소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더 많은 희생과 노력을 요구한다.

따라서 여타 자치단체와 같은 개발방식에서 탈피하여 부여의 특

성을 최대한 활용한 발전방식의 도입이 필요할 것이다. 바로, 이웃 일본의 가나자와시의 사례에서 보듯이 '내발적 발전'을 통하여 '창조도시'를 구현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가나자와(金澤)시는 우리나라와 동해를 마주보고 있는 일본 이시카와현(石川縣)의 현청이 있는 인구 45만 5천명의 중소도시로 우리나라 전주시와 자매 결연을 맺고 있다.

고도성장기 일본 지방도시의 대부분도 외부의 자본을 끌어 들여 산업화를 시도했으나, 가나자와는 기업유치나 중앙정부 의존적 발전이 아니라 내부의 자원을 조화롭게 활용한 '내생적으로 개발된 창조적 도시'라는 독자적인 발전방식을 견지해 왔다. 즉, 외부의 자본유입에 목마른 다른 도시와는 달리 지역이 가진 전통적 산업을 보존하고 경제적 효과를 지역내에 남기는데 성공한 것이다.

이를 위한 첫출발은 '문화의 보존'이었다. 가나자와시는 2차 대전이 끝나자마자 일본에서 가장 먼저 문화재보존조례를 제정하였다. 에도시대 게이샤거리로 불렸던 히가시차야 거리는 일본전통차와 지역의 특산물을 파는 거리로 재정비했고, 가가유젠(일본 전통의복을 만드는 염색옷감), 금박, 구다니 등의 지역전통산업이 시대에 맞게 다시 태어났으며 우다쓰야마 공예공방에서는 전통장인들을 기르고 있다.

동경의 대기업자본에 의해 고층 맨션계획이 발표되자, 아름다운 경관과 전통적인 거리를 보전하기 위해 '도시경관 트러스트 운동'을

전개하여 개발계획을 저지하였다. 이 사건을 계기로 그때 까지 일부 연구자 및 문화인이 외치던 가나자와 도시경관 보전운동은 광범위한 지지를 얻어 점차 시민운동으로 확대되었다.

가나자와의 보전은 단순히 옛것을 지키는데 그치지 않고, 전통산업을 발달시키는 동시에 독특하고 풍부한 예술과 문화자원을 현재에 맞게 혁신하는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전통문화가 단순히 보존이나 복원, 육성의 대상이 아니라 새로운 문화와의 결합을 통해 현대적 전통으로 재탄생하는 것이라는 이해에 바탕을 둔 ‘창조도시’ 발전전략으로 성공한 것이다.

과거 방직공장의 벽돌로 된 창고를 ‘1일 24시, 1년 365일’ 시민이 자유롭게 예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획기적인 참여형 문화시설인 ‘시민예술촌’으로 바꾸었고 직인대학(職人大學)을 설립하여 전통산업과 관련된 장인을 육성하고 있다.

노인들을 태우고 시내의 좁은 도로를 달리는 ‘플래트 버스’를 운행하여 활기를 잃은 상점가를 활성화시켰고, 가나자와의 정체성인 전통문화의 벽에 도전하며 도심에 ‘현대미술관’을 만들어 새로운 세기에 맞는 시민문화를 창조하고자 힘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21세기 세계도시의 이상향을 모색하며 도시정책의 실험장을 제공하려고 하는 새로운 형태의 국제회의인 ‘가나자와 창조도시회의’를 제창하는 등 끊임없이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가나자와의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여가 ‘창조적인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행정과 군민모두 다음과 같은 점을 토대로 협력해야 할 것이다.

첫째, 예술가와 과학자들이 그들의 창조력을 발전시키고 확장해야 할 뿐 아니라, 노동자와 장인들도 창조적 작업을 수행해야 한다. 이를 통해 그들은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을 느낄 수 있다.

둘째, 시민들의 일상생활이 예술적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 충분한 소득과 여가시간이 보장되어야 하며, 문화예술을 낮은 가격으로 감상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대학, 기술학교, 연구기관, 극장, 도서관 등 문화시설들은 도시 내 창조적 활동을 지원하는 인프라로써 기능해야 한다.

넷째, 환경정책은 역사유산과 도시환경을 보존하고, 어메니티를 증가시키는데 핵심이다.

다섯째, 도시는 균형잡힌 경제적 기반을 가져야 한다. 지역의 기반산업인 농업뿐 아니라, 전통산업을 육성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창조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는 문화정책 및 환경정책과 연관된 산업정책과 함께 공공재정에 대한 민주적 관리를 통합한 창조적 도시정책으로 구성된다.

지역주민의 문화향수, 토착 문화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전문가 양성, 전통의 재창조를 위한 노력, 도심 문화 공간 개선사업을 통한 가나자와의 사례는 부여군에게 치밀한 구상, 종합적인 연계성, 타 지역과의 차별성을 통한 새로운 대안을 강구하도록 시사하고 있다.

규모는 작지만 백제영광을 부흥을 위해 새롭게 시작한다면 부여군의 미래는 가나자와 못지않게 독특한 광채를 발하는 도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송두범, 부여군지역혁신협의회 기고집 2008년 1월]

왕에 경제자유구역에 거는 기대

지난 21일 평택당진항을 중심으로 충청남도의 아산, 서산, 당진 지역을 포함하는 황해경제자유구역이 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 대상지로 선정된 것을 크게 환영한다. 황해경제자유구역은 21세기 동북아시아의 주도권을 우리나라가 차지하는 획기적인 계기를 마련하게 된 것과 그 중심에 충남도가 있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최근 중국은 급속한 경제성장을 보이며 세계의 공장에서 세계의 시장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시장에서의 주도권을 누가 먼저 차지하는가는 국내외 대부분 수출기업들의 주요 관심사가 되었으며, 국가적으로도 21세기 핵심 발전전략과 결부되고 있다.

황해경제자유구역은 지형학적으로 중국의 대련, 청도항과 최단거리일 뿐만 아니라 인근지역에서 대중국 컨테이너 물동량의 53%를 생산하는 대중국 교역 및 환적항으로서 최적의 입지에 위치하고 있다. 또한 반경 100km 이내에 서울, 인천, 대전, 군산이 위치하고 있어 1시간 내 접근이 가능하고 고속도로, 철도 등 인프라가 확충되면 전국이 3시간 내 접근이 가능하여 국내 제조업체에서 생산된 제품을 최소한의 물류비용으로 중국에 수출할 수 있는 전략적 요충지

이다.

입지적 장점 이외에도 황해경제자유구역은 주변의 산업인프라가 잘 갖추어져 있어 외국기업과 국내기업의 연계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장점을 보유하고 있고, 관계기관에서 경제자유구역청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살리는데 역점을 둘 것으로 예상돼 효율적인 개발과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유리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향후 황해경제자유구역이 동북아경제권의 중요 거점지역이 되기 위해서는 기존 경제자유구역과의 역할 차별화, 급속하게 치솟고 있는 지가의 안정, 환경 보호, 경제자유구역을 포함하는 주변지역의 교육·의료·문화 수준 향상 등 해결해야할 과제들이 많이 있다. 앞서 지정된 부산, 광양, 인천 등 3개 경제자유구역이 접근성과 교육, 의료 등 제반여건이 미흡해 외국기업의 유인에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므로 이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태안기름유출사고로 어두워진 서해안에 희망의 빛으로 떠오른 황해경제자유구역, 충청인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커다란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

[성기훈, 열린충남 2008년 1월호 통권41호]

200만 도민의 행복이 최우선

희망찬 무자년(戊子年)을 맞아 '열린충남 2008년 신년호'가 발간된 것을 축하합니다. 아울러 지난 한 해 동안 충남발전을 위한 정책개발에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신 김용웅 원장님을 비롯한 충남발전연구원 가족 여러분께 마음 깊은 감사와 따뜻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도는 지난해 도민 여러분의 큰 성원과 격려에 힘입어 그 어느 해보다 괄목할만한 성장과 발전을 일궈냈습니다. 특히 행정중심복합도시와 태안기업도시가 본격 착공되었고, 국방대의 논산 유치와 당진-평택 황해경제자유구역 확정 등 우리 지역의 미래 발전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소중한 기틀을 다졌습니다.

반면, 지난해 12월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사고로 청정해역을 사랑하던 태안을 비롯한 서해안 일대가 한순간에 기름으로 범벅이 되어 도민 모두의 가슴에 큰 상처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재기와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태안 앞바다를 살리기 위해 전국에서 달려온 수십만 자원봉사자들의 행렬과 각계각층의 따뜻한

온정과 도움의 손길은 식을 줄 몰랐습니다. 그 결과 서해안이 점차
제 모습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하루빨리 아픈 상
처와 고통을 훌훌 털고 일어나 환황해권의 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
도록 힘과 지혜를 모아가야 하겠습니다.

저는 올해 우리 도정을 '일등 경제 속에 고품격 문화가 살아 있
는 충남'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더불어 '함께하는 복
지사회'를 이루는 데도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그동안
도에서는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의 제공과 복지 사각지
대의 해소를 위해 심혈을 기울여왔습니다. 특히 민선4기 출범 이후
역점으로 추진해 온 고령사회에 대비한 복지인프라의 구축과 농어
촌의 의료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등도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습
니다. 저는 올해 계획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알차게 추진하여 도민
의 행복과 삶의 질을 보다 높여나가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층과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다양한 복지
정책을 펼쳐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고 도민이 체감하는 복지서비스
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노인복지분야의 경우, 그동안 단순히 휴식과 소일거리의 공간이
었던 경로당을 탈바꿈시켜 나가겠습니다. 전국 최초의 경로당 웰빙
화 사업이 바로 그것입니다. 저는 이를 위해 올해부터 2010년까지
총575억을 투자하여 노후된 경로당의 리모델링과 다양한 기능을 갖
춘 경로당의 증·개축·신축 등을 통하여 경로당을 웰빙 공간으로
만들고 경로당 운영비 지원도 현실화하겠습니다. 또 자립형 경로당

육성으로 어르신들의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어르신들의 여가와 건강증진 프로그램의 개발과 확대 보급, 지역복지자원 간 네트워크 구축으로 경로당을 어르신들이 즐겨 찾는 활력 있고 건강한 생활공간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장애인복지 분야 또한 장애인들의 실질적인 복지증진을 위해 다양한 발전방안을 모색해가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해에 장애인복지 발전 5개년계획을 확정하였습디만, 앞으로 장애인의 생활기반 조성, 이동과 접근성 향상, 직업재활과 고용 확대, 교육과 정보화 수준의 제고, 인권신장 등을 위해 2012년까지 총4,376억(109개 사업)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둘째, 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계층별·지역별 맞춤형 보건복지 시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오지와 벽지, 섬 등에서 실시간으로 의료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지난해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구축한 'U-Health 원격영상 진료시스템'을 올해부터 본격 가동하고 저소득과 고령층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찾아가는 방문 건강관리사업'도 확대하겠습니다. 특히 도서지역의 경우 내과와 치과, 한방 중심의 진료뿐만 아니라 피부 질환의 진료도 병행하겠습니다. 또 행복보건소만들기 컨설팅 등을 통해 보건소 수준을 보다 향상시키고, 영유아 무료 건강검진과 다자녀 모범가정 선발 등 최근 국가와 사회의 최대 관심사인 저출산 문제의 해결에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셋째, 계층간에 복지정책의 적절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록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체계적인 연구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우리 도는 올해부터 5년 동안 장애인 복지발전을 위해 5개 분야 66개 사업에 총 4,300여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아동과 노인, 여성, 결혼이민자 등 다양한 계층에 대한 맞춤형 복지정책 프로그램도 개발하여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도는 '일 중심'의 조직개편을 통하여 업무능률을 극대화하면서 새로운 행정수요에도 적극 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복지와 경제, 문화예술 분야를 강화하는 등 도민의 복지증진과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해 이룩한 성과를 바탕으로 '한국의 중심, 강한 충남'을 만드는데 혼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모두의 새로운 기대와 희망 속에 다가온 2008년 새해를 맞아 충남발전연구원의 무궁한 발전과 함께 연구원 가족 여러분의 앞날에 더 큰 보람과 기쁨이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이완구, 열린충남 2008년 1월호 통권41호]

자경경인(自驚驚人)과 강안 증남

지난해 우리 사회를 상징하는 사자성어가 자기기인(自欺欺人)이다. 자신을 속이고 남을 속인다는 뜻이다. 새해가 밝았다. 또 한 해를 열심히 살 것이다. 1년 후 한 해를 상징하는 사자성어가 무엇이 될 것인지를 생각해 본다.

지난해 충남도정을 상징하는 사자성어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본다. “자경경인(自驚驚人)이면 어떨까?”하고 스스로 생각해 본다. 스스로도 놀라고 모두를 놀라게 했다는 뜻이다. 자경경인의 대표적 사례를 몇 가지 열거해 본다. 정부가 이미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하고 행복도시로 이전시키려고 했던 국방대학교를 일 년 반 동안의 끈질긴 투쟁 끝에 논산으로 유치시켰다.

또 도지사가 직접 심사위원들에게 보고를 하면서 일일이 설득한 끝에 황해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이끌어 냈다. 여기에 준공되는 순간부터 매년 100억 원 이상의 적자운영으로 도정의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 명확한 백제역사재현단지에 롯데라는 세계 유수의 기업으로부터 수천억 원의 투자를 유치해 문제를 일거에 해결하였다. 수

년 동안 B/C가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건설이 미루어져 왔던 보령~안면 연륙교와 홍성~안산 간 서해선 철도를 악전고투 끝에 사업타당성을 입증해 건설을 확정짓기도 했다.

이 모두 과거의 충남으로 보면 불가능할 것 같았던 일들이다. 이 뿐 아니다. 경제성장률, 외자유치, 무역수지, 기업유치 등 경제 전 분야에서 전국 1등을 이루었다. 서북부권과 서남부권간의 발전격차를 완화시키기 위해 지역균형발전조례와 균형발전특별회계를 만들었다. 백제문화제를 통합 개최하여 자그마한 지역행사가 세계적인 축제로 발돋움할 수 있게 되었다.

농산물 수출도 3억 달러를 달성해 FTA 시대 농업경쟁력의 가능성을 보여줬고, 전국 최초로 물관리통합시스템을 구축하고 수천 개의 경로당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종합계획을 세우기도 했다. 실국장 책임 경영제를 통해 행정서비스 품질, 가치창조, 경영혁신 전국 1위의 실적도 일궈내었다. 이것들 모두 명실상부 전국을 선도하는 시책으로서 우리 스스로 자부심과 긍지를 갖게 했다.

무엇이 충남도정을 자경경인의 모습으로 갑자기 변하게 한 것일까? 그것은 바로 비전이다. ‘한국의 중심, 강한 충남’이라는 민선 4기 충남도정의 비전이 우리를 이끌었다. 비전은 조직의 핵심가치와 믿음이다. 비전은 목적이고 사명이다. 비전은 전략과 전술을 결정하기 위한 조건이다. 비전은 구성원들의 특별한 노력을 이끌어 낸다. ‘강한 충남’의 비전은 우리에게 진취적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에게 창의적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끈질겨야 한다고 말했다. 열 번

백번이라고 부딪쳐서 쟁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지사를 중심으로 싸우듯이 일했다.

을 한해도 치열하게 살 것이다. 할 일이 여전히 많다. 먼저 국회 상정이라는 절반의 성공을 거둔 도청이전특별법과 화력발전지역개발세법을 반드시 통과시킬 것이다. 경제와 지역개발 부문의 해묵은 현안이 해결됨에 따라 도정이 이제는 문화, 복지, 환경 등 전 분야에 걸쳐 소외된 도민의 삶의 질을 생각하는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는 여유가 생겼다. 그렇게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유출사고를 슬기롭게 극복해 내야 한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 것이다. 예컨대, 우리지역 서해안으로 몰려드는 수십만 명의 자원봉사자를 충남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그래서 다시 찾는 후원자로 만들 것이다. 충남발 자원봉사 혁명을 이루어내기 위한 여러 가지 일들을 해낼 것이다. 우리는 자신이 있다. 쉬운 문제를 내고 100점을 받는 도정이 아니라 80점을 받더라도 주민이 원한다면 아무리 어려운 문제라도 진취적으로 부딪칠 것이다.

[정재근, 중도일보 2008년 1월 1일자]

신행정수도 건설과 행복도시 '세종'

국가균형발전의 선도사업인 행정중심복합도시 '세종'의 기공식이 지난해 7월 20일 행정도시내 중심행정타운 예정지에서 열렸다.

앞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는 2010년 하반기 첫마을 주민입주를 시작으로 2030년까지 50만 명이 살아가는 복합기능의 자족도시로서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21세기의 세계적인 명품도시로 건설될 것이다. 돌이켜보면 지난 대선당시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 상임추진위원장,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 추진위원 겸 자문위원장, 신행정수도건설후속대책위원회 대책위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위원회 자문위원장으로 처음부터 참여한 사람으로서 볼 때, 행정도시 '세종'은 기공식에 이르기까지는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었다.

지난 2002년 12월 8일 대전 엠페리호텔에서 신행정수도 건설 대통령 공약 기자회견 이후 2003년 4월 14일 신행정수도건설기획단 및 지원단이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발족식을 가졌고, 2003년 12월 29일에는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국회에서 86.1%로 압도적으로 통과됐으며, 2004년 8월 11일 신행정수도 입지로 공

주·연기가 확정됐다.

그러나 2004년 10월 21일 헌법재판소 위헌판결로 인해 2004년 11월 18일 신행정수도후속대책위원회가 출범했고, 2005년 3월 2일 여야 합의를 이끌어내 행정도시특별법이 제정돼 행복도시가 첫 삽을 뜨게 된 것이다. 그동안 신행정수도 건설 추진에서 행복도시 '세종'에 이르기까지 노력과 성원을 아끼지 않은 추진위원, 자문위원, 관계공무원, 관련 공사 및 기관, 그리고 각 사회단체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행정도시 건설 사업은 그동안 환상형 도시구조를 내용으로 하는 기본계획과 개발계획을 확정했으며, 행복도시를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도시로 만들기 위해 도시개념 아이디어, 첫마을 사업 그리고 중심행정타운, 중앙녹지공간에 대한 국제공모를 시행해 훌륭한 아이디어를 이끌어냈다.

이를 통해 환상형 도시구조, 옥상정원 형태의 정부청사, 그리고 바람개비 형태의 첫 마을 주거단지의 아이디어를 발굴해 세계적인 명품도시를 향한 행정도시의 주요 골격이 드디어 완성됐다.

앞으로 건설되는 행정도시는 국가균형 발전을 선도하는 국책사업으로 행정과 교육, 문화, 주거, 환경, 교통, 의료, 복지 등 모든 면에서 세계적인 모범도시가 돼야 한다.

이 사업이 원활히 수행되면 수도권은 쾌적한 도시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가 경쟁력을 갖추게 될 것이며, 지방은 균형 발전하여 새로운 활력을 갖게 될 것이다.

행정도시 건설 사업은 각 지방에 건설되는 혁신도시, 기업도시 등과 함께 30여 년간 고착된 수도권 집중과 과밀 문제를 해소하고 국토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한 국토재편사업이다. 이것은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 반드시 이루어야 할 시대적 과제이다.

특히 신행정수도 건설은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가균형발전 등의 궁극적 목표를 구현해 나간다는 차원에서 본래의 취지와 목표에 따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18개 부처에서 12개 부처가 행복도시로 이전하는데 업무의 효율을 위해서는 청와대, 국회, 나머지 기관이 수도권에 남아있을 필요가 없다고 본다.

행정도시는 당초부터 신행정수도로 출발했고 충청권에 인프라가 많아 '최적지'로 낙점돼 시작된 사업인 만큼, 초심으로 돌아가 온 국민이 합의해 언젠가는 행복도시를 신행정수도로 건설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도 행정도시 '세종'을 건설하는데 적지 않은 어려움과 장애물이 있겠지만, 국민 모두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 간다면 누구나 살고 싶은 세계적 모범도시가 반드시 이뤄질 것이다

[강용식, 충청투데이 2008년 1월 9일자]

미래지향적 해양오염 복구방안 마련돼야

사상 최악의 해양오염을 초래한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 사고를 맞은 지 벌써 1개월이 지났다. 지금은 검은 기름이 뒤덮었던 해수욕장과 해안선 등 사고현장 일대는 기적과 같이 제 모습을 되찾고 있다.

해외의 해양오염 전문가들조차 이 같은 변화를 놀라워하고 있다. 이는 그동안 중앙의 방제당국과 지방자치단체의 신속한 대응과 함께 절망스러운 현실에도 좌절하지 않고 해양오염 피해의 확산을 온몸으로 막아준 지역 주민과 전국 각지에서 찾아 온 100만 명이 넘는 자원봉사자의 헌신적 노력 덕분이다.

이제 피해지역 주민들은 전 국민의 성원에 힘입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와 희망을 갖게 됐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방제 성과만 가지고 서해안의 해양오염 문제가 완전하게 해결된 것으로 봐서는 안 된다. 보다 근원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추가적 방제 조치와 함께 장기적인 차원에서 보다 종합적인 피해 복구와 지역발전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첫째, 지속적인 해양오염 방제 노력과 함께 해양 생태계 복원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그동안 긴급방제로 많은 양의 기름 찌꺼기가 수거됐으나 아직도 엄청난 양의 기름 찌꺼기가 바다 깊은 곳이나 바위 틈 그리고 모래나 갯벌 속에 남아 있다. 남아 있는 기름 찌꺼기를 모두 제거한다고 해서 해양오염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것도 아니다. 해초와 어패류, 해양 미생물에 미친 기름오염의 피해를 밝혀내고 회복하는 일이 뒤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또, 서해안 지역의 생태환경 피해와 영향을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심층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별도의 전담연구기관의 설치가 필요하다. 아울러 생태환경 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여 피해지역을 해양생태환경의 보고(寶庫)로 만드는 데 치중해야 한다.

둘째, 피해어민 및 지역주민에 대한 보다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보상과 지역경제의 회복을 위한 장기적인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 167km에 달하는 해안선과 5,656ha에 달하는 어장과 양식장, 60개가 넘는 섬이 기름유출의 최대 피해지가 됐고 피해지역의 범위는 점차 확대되고 있다. 이 밖에도 수만 명의 생계 터전인 갯벌과 연안 해역이 오염돼 더 이상 조업이 불가능하게 됐다. 해양오염 피해는 수산업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해수를 이용한 염전과 치어 종묘 및 치어 양식장과 수산물 판매상, 횃집 및 요식업, 숙박업 등 지역경제 전반에 큰 피해가 초래됐다. 그러나 기름유출 사고에 대한 손해보상은 국제법규에 따르도록

때 있어 과도한 증거자료가 요구되고 오랜 기간이 소요돼 피해주민의 고통도 커지고 있다. 그러나 주민 피해에 대해서는 단기적인 대응과 함께 장기적인 차원에서는 생계기반 복원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획기적인 대응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셋째, 해양오염의 위기를 지역 이미지 쇄신과 발전의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 해양오염은 수산업과 관광산업을 기반으로 하는 태안과 주변 서해안 지역의 명성에 측정하기 어려운 손상을 초래했다. 단기적으로는 다양한 이벤트나 장소 마케팅을 통해 서해안 지역을 다시 찾는 운동을 전개할 수 있다. 서해안 지역에는 해수욕장과 관광지, 콘도, 펜션 및 민박 등 관광기반시설이 잘 갖춰져 있어, 사계절 관광이 가능해 국민적 호응도를 기대할 만하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서해안 지역을 세계적 수준의 청정한 해역과 해안관광지대라는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춘 지역으로 발전시키는데 치중해야 한다. 미래지향적 방제체제 구축과 획기적 지역발전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특별한 관심과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김용웅, 충청투데이 2008년 1월 11일자]

국책사업 사질 없이 추진해야

2008년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정부조직의 개편 및 경제, 교육정책 등 핵심적인 국가정책들이 시장과 경쟁의 논리에 따라 기본 틀까지 변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같은 큰 틀의 변화 속에서 수많은 기존의 국가정책과 사업들에 대하여도 추진상황에 대한 점검과 지속적인 추진여부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비롯하여 태안기업도시, 국방대학교의 논산이전, 장항산업단지 정부대안사업, 보령신항 건설 등 굵직한 국책사업이 추진 또는 예정되고 있는 충남지역의 경우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

국책사업은 국가적 정책 목표의 달성을 위한 사업이긴 하지만 지역차원에선 가장 중요한 개발 사업이다. 생산 활동과 주민의 실생활의 수준과 질을 결정하는 사회간접자본시설에 치중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업추진에 있어 오랜 기간이 요구되기 때문에 일관되고 안정된 추진이 어려운 단점이 있다. 그리고 국책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하거나 중단되면 수많은 지역개발사업 및 민간투자

에 회복할 수 없는 치명적인 손실을 초래하게 된다.

충남이 2007년 한해 거둔 눈부신 경제성장과 외자유치 성과는 도정의 탁월한 리더십과 관계자들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대규모 국책사업 추진으로 지역발전 잠재력이 증대되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따라서 충남지역이 지금까지와 같은 성장추세를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는 원래의 계획대로 국책사업이 추진됨으로써, 국가정책에 대한 신뢰성을 높여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첫째, 기존 국책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이 보장돼야 한다. 특히 그동안 일부 정치적 이견이 있었던 행정도시 건설에 대한 확고한 추진의지를 가지적으로 보여야 한다. 다행히 대통령 당선자는 행정도시 건설을 예정대로 추진할 것을 기회 있을 때마다 천명함으로써 정책의 일관성을 강조해 왔다. 최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도 세종시의 차질 없는 추진을 확인하여 지역의 불안감을 해소해 주고 있다. 이 밖에 태안기업도시와 국방대학교의 논산이전, 장항산업단지 정부대안사업, 황해경제자유구역 조성사업은 행정도시 건설 못지않게 중요한 국책사업이므로 지속적 추진을 보장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둘째, 국책사업이 지역경제의 실질적인 성장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대통령 당선자는 세종시가 현재의 계획대로 추진되면 충청권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히고, 국제과학도시기능을 강화할 것을 공약하였다. 다른 국책사업의 추진도 지역경제발전과 주민생활의 개선에 직결될 수 있는 보완책을 만드는 데 치중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그 동안 지지부진 했던 보령신항 건설도 조속한 추진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이와 함께 새 정부가 공약으로 제시했던 충청권 국제과학 기술벨트 구축, 금강벚길 복원, 충남도청이전 신도시 건설, 국방과학산업 클러스터 조성 및 세계 군 평화페스티벌 개최 등에 대해서도 조기에 가시적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충남지역의 국책사업의 지속적 추진여부는 지역의 미래발전은 물론 새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적 신뢰도까지 결정하는 시금석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았으면 한다.

[김용웅, 중도일보 2008년 1월 14일자]

황해경제자유구역을 위한 충남 과제

정부는 2003년 인천, 광양, 부산·진해 일대 등 3곳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했지만 그 성공 가능성이 아직은 불투명하다. 인천을 제외하고는 국제비즈니스 접근성에 문제가 있으며, 경제자유구역의 소비자인 외국인 투자자가 선호할 만한 투자환경을 갖추지 못한 것이 주요 원인이다.

기존의 자유경제구역이 이처럼 부진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지난해 말에 '대구·경북'과 '전북 새만금' 그리고 '황해경제자유구역' 등 3곳을 추가 지정했다.

황해경제자유구역 중 충남지역 구상을 살펴보면, 아산 인주지구(1,302만 5,157㎡)는 기존의 디스플레이·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첨단 산업기능과 관광·위락기능이 강조된 자족도시로 만들 계획이다. 서산 지곡지구(354만 2,550㎡)는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자동차 부품을 중심으로 한 첨단 자동차 클러스터로 육성할 계획이며, 당진 송악·석문지구(2,532만 9,130㎡)는 황해경제자유구역 청사가 입지하는 곳으로 자동차부품산업, R&D기능은 물론 상업과 국제 업무의 중심지

로서 육성할 방침이다.

황해경제자유구역이 기존의 경제자유구역과 다른 점은 단순히 물류 및 교역 중심이 아니라 생산기능과 R&D 기능이 조화된 국제수준의 첨단기술산업 클러스터로 육성한다는 점이다. 첨단산업 클러스터로 형성된 충남 서해안 지역이 중국의 수출입 전진기지가 되어 환황해권의 국제협력 거점으로 거듭나겠다는 큰 구상이다. 이 같은 청사진이 제대로 실현이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이 해결되어야 한다.

첫째, 연구개발 기능의 확보다. 충남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석유화학' 분야에서 전국 '최상의' 산업역량을 보유하고 있으나, 중국 등 후발국의 추격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속적인 경쟁력 확보를 위해 연구개발 역량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충남테크노파크의 당진밸리 개발과 대덕연구단지의 충남 분소 설치를 고려해야 하며, 해외 R&D 센터를 유치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둘째, 외국인들의 정주여건 구축이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살기 어려운 이유를 설문조사한 결과, 자녀들의 교육문제와 생활 정주여건이라는 공통된 외국인들의 답변이 보고되고 있다. 자녀 교육을 담당할 국제학교 시설 부족과 가족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외국인 병원이 없어서 자국의 직원들을 한국에 파견하기 어렵다고 한다. 한마디로 아직까지 한국에서는 글로벌 수준의 생활·문화 환경을 갖춘 곳이 없다는 것이다. 여기에 노사문제, 과실송금 허용, 고

급 인력 채용, 각종 금융·경영서비스 지원 기능 등을 글로벌 수준에 맞추기 위해서는 그야말로 대규모 규제완화와 특별혜택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경제자유구역청의 전문성과 자율성의 확보이다. 황해경제자유구역청 초기 근무인원은 약 150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이중 개방, 계약직이 20~30%를 차지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조직구성원 중 70~80%가 지자체 파견공무원으로 구성된다면 경제자유구역청은 지자체의 하부조직 형태로 운영될 수밖에 없다. 기존의 3개 경제자유구역은 광역단체장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광역의회에 보고하는 것을 의무로 정하고 있어 글로벌 수준에서 활동하기에는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는 지적을 눈여겨보아야 한다. 황해자유경제구역은 우리나라 안에서만 경쟁하는 것이 아니다. 연구개발 여건, 외국인 정주 여건, 경제자유구역청의 전문성과 자율성 등 세 가지 여건이 모두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했을 때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중국의 푸둥, 홍콩, 싱가포르, UAE의 두바이 등 외국의 경쟁 지역과 비교해도 훨씬 우수한 연구개발 여건, 외국인 정주 환경, 그리고 근무자들의 전문성이 확보되었을 때 황해경제자유구역은 우리에게 희망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김학민, 충청투데이 2008년 1월 23일자]

■ 집 필 진 ■ 가나다순, 2008년 1월말 기준임

- 강용식 | 행정중심복합도시 자문위원장
권영현 | 충남발전연구원 연구위원
김경숙 | 충남여성정책개발원장
김용웅 | 충남발전연구원장 · 前.전국시도연구원협의회장
김유혁 | 충남도청이전추진위원회 위원장
김학민 | 충남테크노파크 원장
김학영 | 계룡시의회 의원
나소열 | 서천군수
박수영 | 선문대학교 행정학부 명예교수
성경룡 | 前.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성기훈 | 충남발전연구원 이사 · 중도일보 상임고문
성정경 | 충남발전연구원 연구자문위원
송두범 | 충남발전연구원 연구실장
송선규 | 충청남도의회 제2부위원장
송재호 | 한국문화관광연구원장
심대평 | 前.충청남도지사
여운철 | 서해안 기름유출사고 법률대책회의 변호사
유병기 | 충남도의회 제1부위원장
유영한 | 공주대학교 생명과학과 교수
육동일 | 대전발전연구원장 · 충남대학교 교수
이규용 | 홍성군의회 의장
이완구 | 충청남도지사
이태복 | 前.보건복지부 장관
정영일 | 지역재단 이사장 · 서울대 명예교수
정재근 | 충남도 기획관리실장
정종관 | 충남발전연구원 환경생태연구팀장
진태구 | 태안군수
최병학 | 충남발전연구원 자치행정연구팀장
최석원 | 백제문화제추진위원장
최석원 | 공주대 교수 · 前.충남지역혁신협의회 의장
홍용표 | 前.충남발전연구원 정책연구위원

한국의 중심, **충남**을 말하다

한국의 중심, 충남을 말하다

발행인 김용웅
발행처 충남발전연구원
충청남도 공주시 금홍동 101번지
전화 041)840-1114 / 팩스 041)840-1129
인쇄일 2008년 2월 22일
발행일 2008년 2월 22일
인쇄처 중부인쇄기획

©2008. 충남발전연구원

www.cdi.re.kr

• 본 자료집의 내용은 충남발전연구원의 공식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비매품>

